

2002년 통일부 용역과제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 일 부
Ministry of Unification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책임자 : 김 창 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 양 금 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윤 재 홍 (나사렛대학교 교수)

2002. 12.

통 일 부

이 보고서는 2002년도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통일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육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 동안의 통일교육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화해하고 협력하며, 민족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그 가운데 독일은 분단, 대결, 이념갈등, 정상회담, 교류협력 등 통일의 진행과정에서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과정을 밟아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11년 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이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교육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실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던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관심 갖는 내용들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2.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독과 동구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통일 전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행하였다.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개념이었는데,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통일교육기본지침은 교육부가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사회(Sozialkunde)”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9학년부터 12/13학년까지 “사회” 교과 안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3.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통일 전 동독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역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이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통일 전 동독에서도 학교통일교육은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독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면,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한 마디로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공산당(SED)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실권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서독에서는 학교통일교육 안에서 동서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과 통일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동독의 이념교육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 동독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만이 가능하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국가시민(Staatsbürgerkunde)” 교과가 있었다. 교과외활동으로는 첫째, 군사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로는, 유소년 조직과 청소년 조직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시민” 교과이다. 통일 전 동독은 “국가시민”이란 이름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국가시민” 교과는 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시민” 교과를 위하여 동독 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4.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독일 통일 후 독일의 학교 현장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발전한 교육제도가 통합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등장하였다. 구 서독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서독 지역의 교육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동독의 교육제도와 이념교육은 통일 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서독식의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었고, 서독식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사회주의 이

념이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 처분되었고, 타도의 대상이었던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상적인 체제로 교육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상황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통일 초기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낳았다. 더불어 통일 후 제기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은 정신적인 충격, 개인적 실망, 상호불신 등을 낳았다. 특히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통일 초기에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 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 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통일 후 독일 정부는 서독식의 정치교육제도를 동독 지역에 도입하면서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부여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력하였다.

5.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 사회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전쟁의 잠재력을 줄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독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은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발전하였다. 통일과 통일교육은 서독 사회의 주요 테마가 되지 못하였다. 전범국가로서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이었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동서독 문제를 다루는 주무기관으로 내독성을 설치하였다. 내독성은 여러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육이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 역시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이렇듯 서독은 국제

정치적 여건상 드러내 놓고 통일교육을 할 수 없어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성인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성인대학(Volkshochschule), 정당 재단, 사설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위해서 서독 정부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기관이 연방 내무성 산하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주 정부 산하 “주 정치교육본부(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연방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등의 정부기관이다. 이와 더불어 정당 산하의 정치재단과 사설 정치교육기관에서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위의 재단들은 공동 사업과 상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하며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서독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치교육기관들의 행사와 연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하였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다.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서독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

다면, 서독 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서독 국민들은 통일과 고통분담을 선택하였다.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동서간의 심리적인 갈등은 존재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6.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이 정치교육이라는 폭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일관성 있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역시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통일 전 동독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은 성인대학, 기업체부설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성인교육기관은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움직여졌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민간 교육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고,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성인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이념교육이 필수적으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동독 사회통일교육은 “다면적으로 도야된 사회주의 인격”을 갖춘 사회주의 인간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사회과학(역사, 마르크스 사회이론 등)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었다. 교육방법으로는 대화나 토론 방법보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지식의 교화(Indoktrination)가 강조되었다.

7.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통일 직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은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을 매개하는 것과 더불어 동서독 주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

다. 통일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통일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은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 모아졌다.

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서독지역에 있었던 정치교육기관이 구 동독 지역에도 확산되어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 동독 지역의 각 주에 정치교육본부가 설치되었다. 정당의 정치재단과 교회 등 사설 정치교육기관도 구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서독 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구 동독 지역에 확산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구 서독의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단지 구 동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통일 이후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 독일 정부는 연방 정치교육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1년 말 통일 전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정치교육 기능을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이관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1993년 이후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내적 통합 (Innere Einheit)”이란 이름의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고,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통합을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구 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서독식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동서독 주민간의 마음의 장벽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국민통합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일 후 동독 지역 주민들의 부적응, 갈등, 실직 등의 상황특수적인 상황이 정치교육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통일 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서는 이전에 서독에서 수행해 온 민주시민교육이 중심을 이루었지, 동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사회적응교육은 간과되었다. 이 때문에 동독 지역과 주민의 특수한 사회심리적 상

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사회통일교육 전략 수립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8. 우리 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동서독의 통일 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제안하였다.

첫째,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통일과 더불어 의식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것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통일준비교육, 통일과정의 화해협력교육, 통일 이후의 평화공존교육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교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통일교육기본지침이 중요하고, 통일교육의 개념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실전달과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내용이 편성되고, 다양한 통일교육 방법들과 활용자료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분야에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유사한 중심적 사회통일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방송언론인 등 통일교육 연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대폭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현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통일교육방법의 개발·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방법	6
4. 연구의 한계	7
5. 기대효과	8
6. 독일 교육과 통일교육 개관	8

II.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운영 실태

1.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13
2.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35
3.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63
4.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비교	90

III.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

1.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97
2.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120
3.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125
4.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비교	167

IV. 독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

1.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173
2. 학교통일교육 분야	177
3. 사회통일교육 분야	183

<참고문헌>	189
--------------	-----

<부 록>

부 록 1.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	199
부 록 2.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과서 내용	209
부 록 3. 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서 내용	219
부 록 4.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261
부 록 5.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 전문	285
부 록 6.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	287
부 록 7. 전독연구소 소장 통일 관련 영화	293

표 차 례

<표 II-1> 서독 전기중등학교 사회과 교과과정 편성	15
<표 II-2> 통일 전 라인란트-팔쯔 주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25
<표 II-3> 통일 전 니더작센 주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26
<표 II-4>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1 - 전체목차	29
<표 II-5>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2 - 총론	30
<표 II-6>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3 - 각론	31
<표 II-7> 동독의 초·중학교 교과과정	37
<표 II-8> 동독의 고등학교 교과과정	38
<표 II-9> 동서독 학생의 통일에 대한 태도	64
<표 II-10> 학생들의 동독과 서독에 대한 비교 평가	66
<표 II-11> 구 동독 주민의 동·서독관	67
<표 II-12> 동서독 학생의 민주주의 이해	74
<표 II-13> 동서독 학생의 구 동독 생활에 대한 이해	75
<표 II-14> 동서독 주민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	77
<표 II-15>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87
<표 III-1> 서독의 주요 사회통일교육기관	99
<표 III-2>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주제(1985년)	108
<표 III-3>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참석자 현황(1985년)	109
<표 III-4> 연방정치교육본부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참가 그룹(1985년)	111
<표 III-5>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121
<표 III-6> 연방정치교육본부 홈페이지 내용	128
<표 III-7> 독일의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62

그림 차례

【그림 Ⅱ-1】 구 서독의 학교 제도	14
【그림 Ⅱ-2】 구 동독의 학교 제도	35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한계
 5. 기대효과
 6. 독일 교육과 통일교육 개관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은 냉전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간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하여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찾기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졌다. 급변하는 남북 관계를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일도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교육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논의도 활발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 환경이 달라졌고, 남북관계가 달라졌고, 피교육자의 통일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승공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의 명칭으로 불려왔다. 냉전시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통일교육은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 동안의 통일교육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화해하고 협력하며, 민족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찰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상호대결과 이념갈등을 겪었고,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후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시도하여, 1990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분단의 시기 및 형태, 대결과 이념갈등, 정상회담 등 동서독의 관계 진전 과정은 남북한 관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상호교류

를 활발히 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서독의 교육과 그 변화과정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이 우리와 똑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무조건 수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예측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통일을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점과 버릴 점, 생각해야 할 점, 올바른 통일교육의 모습 등을 찾을 수 있다.

통일 전 서독은 통일교육을 통하여 서독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서독은 특별히 동서독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냉전 시대의 적대적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교육과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지를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평화적인 갈등해결능력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통일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과 통일 후 독일의 통일 교육을 연구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고 올바른 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독일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일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전체적인 개관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통일 전과 통일 후 독일에서 어떻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던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관심 갖는 내용들이다. 그것을 바

탕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국민 통합에 공헌하고 있는 독일의 통일교육이 우리 나라의 통일준비교육,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보고, 통일 전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통일 전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첫째, 통일 전 동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의 운영실태를 고찰한다. 학교통일교육 정책, 학교통일교육기본지침,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학교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 학교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 통일교육 활용 자료 등을 중심으로 서독과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운영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별히 학교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통일교육 교과서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을 고찰하도록 한다. 통일 후 환경의 변화, 동서독 학생들의 의식과 적응 실태,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교육과정기본계획안, 통일교육 활용자료 등을 중심으로 통일 후 학교통일교육 운영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통일 전후 동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을 비교한다. 통일교육정책, 통일교육의 목적,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확인하도록 한다.

넷째, 통일 전 동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운영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사회통일교육의 목적,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사회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사회통일교육의 효과 등을 살펴본다.

다섯째,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운영실태를 고찰한다. 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을 살펴보고, 통일 후 11년 동안 진행된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여섯째, 통일 전후 동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을 비교한다. 통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교육이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독일의 통일 및 통일 전 후 통일교육이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연구의 방법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문헌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교육에 관한 독일과 한국 문헌을 폭 넓게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분석대상 문헌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신력이 높은 정부문서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다. 특별히 통일 전 동서독과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현장조사연구이다.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일의 주 문교부를 방문하고,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연구 내용을 상세화하고,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 전문가, 통일교육 전문가, 독일 통일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양적으로, 통일 전과 통일 후로 나누어서 독일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으로도, 통일 전 후 독일 통일교육을 단순히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연구자들은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폭 넓게 수집하였다. 특별히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확보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독일 내의 많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 후 동서독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 문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연구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도서관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특히 구 동독의 문서들은 통일 직후 상당 부분이 폐기처리 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컸다.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도의 자료만 제시하여, 연도별 변화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통일 전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기본지침과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회통일교육의 경우에도, 주로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의존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기타 정치교육기관에 대한 소개가 부족한 점, 그리고 사회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개하고 분석하지 못한 점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통일 전 후 독일의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경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추후 과제로 제기된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통일 전 후 독일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남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 사회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한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활용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6. 독일 교육과 통일교육 개관

독일의 교육과 통일교육은 우리에게 낯선 분야이다. 따라서 독일 통일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동서독의 교육제도와 통일교육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은 본래 작은 영주국가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통일 전에는 11개 주, 통일 이후에는 16개 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주는 폭 넓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교육은 각 주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독일의 교육제도는 주별로 특성이 있고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나라 안에서 교육제도가 완전히 다르게 운영될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주의 문교부장관들의 모여서 독일 교육제도의 큰 틀

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서독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교육제도와 유사하다. 학교제도는 초등학교 4학년, 전기중등학교 5-6학년, 후기중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총 12-13년이 소요된다. 교육과정은 남한의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행하였다.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개념이었는데,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정치교육을 위하여 주 교육부는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 교육내용 구성의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 따라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사회” 교과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구 동독의 교육제도는 10년제 일반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에 따라 학제가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은 형식적으로는 서독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단지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념교육이 핵심 교육과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 모든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동독 교육의 실질적 권한이 교육부가 아니라, 동독공산당(SED)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의 통일교육은 교과교육, 군사교육, 청소년활동 등 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졌으나, 특별히 “국가시민”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동독의 교육제도와 이념교육은 통일 후 완전히 바뀌게 된다. 서독식의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었고, 서독식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역시 대단히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 사회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서독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연방 정치교육본부설치법」을 제정하고,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독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은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발전하였다.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주무기관으로 내독성(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을 설치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 역시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내독성” 외에도 통일 전 서독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사설정치교육기관들이 존재하였다. 성인대학(Volkshochschule), 정당 재단, 사설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의 정치교육기관들은 공동 사업과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하며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치교육기관들의 행사와 연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행사지원규정”을 만들고, 그 임무를 연방내무성 산하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에 부여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는 성인통일교육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도 각종 도서, 정기간행물, 교수학습용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는 주 교육부, 교원단체, 교과연구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나갔다. 1985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약 26백만마르크(130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일 전 동독에서도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성인대학, 기업체부설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성인교육을 담당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데올로기 교육은 사라지고, 서독식의 정치교육기관이 동독에 설치되고, 서독식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었다.

II.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운영 실태

-
1.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2.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3.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4.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
교육 비교
-

Ⅱ.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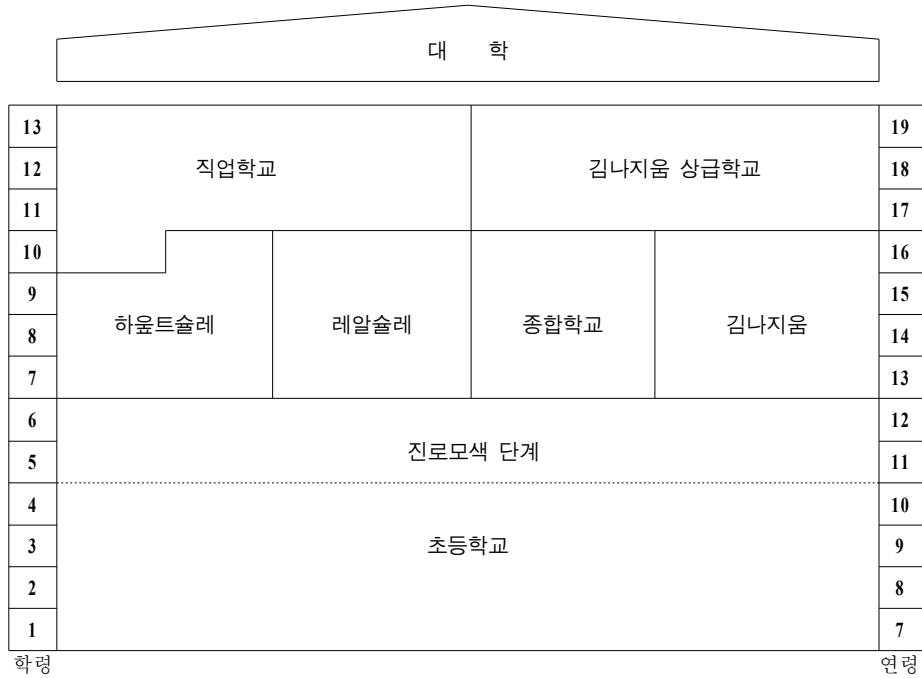
1.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

가. 학교통일교육 개요

1) 구 서독의 교육제도

교육을 학제에 따라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학전 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교)으로 나눈다. 통일 전 서독의 교육제도 역시 크게 보면 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등교육 부분에서 세 방향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독일 교육과 우리 교육과의 차이점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독일의 학생들은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진학한다. 때문에 독일의 교육제도를 분화된 복선형 학제라고 부른다.

위의 기간학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독의 학제는 먼저 기초영역으로서 4년제 초등학교가 있다. 전기 중등학교로는 하웁트슐레(5~6년제), 레알슐레(6년제), 김나지움(6년제)이 있고, 하웁트슐레와 레알슐레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학업이 종료된다. 후기 중등학교로는 김나지움 상급반(3년제)과 직업학교(1~3년제)가 포함된다. 직업학교에는 하웁트슐레와 레알슐레 졸업생들이 진학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에는 일반적으로 김나지움 상급반 졸업생들이 입학하게 되고,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구 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1】 구 서독의 학교 제도

2) 학교통일교육체계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주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독과 동구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사회”, “역사”, “지리” 등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교과는 “사회” 교과이었다. “사회” 교과는 주에 따라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교과에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 “사회” 교과는 대체적으로 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사회” 교과를 위하여 서독의 각 주 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각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9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4학년(13학년)까지 “사회” 교과 안에서 실시되었다. 서독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사회(통일교육 포함)교과과정이 차지하는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II-1> 서독 전기중등학교 사회과 교과과정 편성

교과목	학 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국어(독일어)	5	5	4	4	4	3
제1외국어	5	5	4	3	3	3
제2외국어	-	-	4	3	3	4
수학	4	4	4	4	3	3
물리	-	-	2	2	1	1
화학	-	-	-	2	1	1
생물	2	2	2	2	1	1
역사	1	1	2	2	2	2
지리	2	2	1	1	1	1
일반사회	-	-	-	-	1	2
경제/법	-	-	-	-	1	1
음악	2	2	2	2	1	1
미술	3	3	2	2	1	1
종교/윤리	2	2	2	2	2	2
체육	3	3	3	2+(1)	2+(1)	2+(1)
보충수업	1	1	-	-	-	-
필수선택						
언어영역					5	5
수학-자연과학 영역					5	5
음악-미술 영역					5	5
선택	1	1	1	1	1	1
총 계	31	310	33+1	33+(1)	33+(1)	33+(1)

※ 숫자는 주당교육시간을 의미함

후기 중등학교(11학년~13학년)의 경우에는 반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교과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사회과는 주당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5~6시간이 배정되어 가르쳐졌다.

위의 “사회” 교과를 위해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침서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이 외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교수학습용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학교통일교육정책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이 점령국가의 정치적인 의도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보다 시급한 교육적 과제는 하루 속히 서독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전 후 독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독일은 전범국가이었고, 전쟁 결과를 근거로 타의에 의하여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일을 논할 수 없었다. 독일의 통일은 연합국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1949년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양 국가가 수립되었다. 양 독일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폈다. 서독의 초대 대통령 아데나우어(K. Adenauer)는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한다는 유일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으며, 동독의 국제적 승인을 막기 위해 동독을 국

가로서 인정하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서독 정부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은 통일교육에서 서독 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 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서독의 통일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1969년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면서 나타났다.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사민당의 브란트(W. Brandt)는 취임연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이라는 연두교서에서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 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동·서독 양국 정부는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Der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체결하였다.

동·서독관계가 정상화되자 서독의 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서독 통일교육의 중점은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아졌다. 서독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특징, 동독의 경제 현황, 생활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서독의 체제, 생활수준, 경제역량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서독은 통일교육에서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한편, 서구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민주국가의 실현과 유럽의 평화 정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 통일교육기본지침

서독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실시하였던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독일문제(Deutsche Frage)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독일문제와 관련된 주제 영역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13일 KMK(서독 주 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동구권에 대한 이해”(Ostkunde)라는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다룰 것을 결정한 이후이다.¹⁾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는 소련의 지배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추방되고 동서독이 분단된 점을 알게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독일과 유럽의 운명은 이러한 과제를 잘 성취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 해결점은 동구권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은 초·중등 일반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 모든 교육분야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 점이 강조된다. 첫째, 평화와 자유의 원칙 아래 독일 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련점령지인 동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동구 체제와 논쟁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동구권의 인종, 문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²⁾ KMK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역사교육과 더불어 정치교육과 언어교육을 강조하였다. “정치교육은 첫째, 통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이론과 실제에 있어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동유럽에서 추

1)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7.

2) *ibid.*, 7.

방된 독일인들이 서독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³⁾ 언어교육 역시 동유럽 언어에 대해 그 동안 소홀히 한 것을 비판하고 동구권 언어, 특별히 러시아어를 적어도 김나지움에서는 필수 또는 선택어로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도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⁴⁾

1972년 브란트 정부에 의해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통일교육과 관련된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 교육학적인 또는 정치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1978년 6월 서독 국회의 내독관계위원회는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독일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독일의 대통령 쉘(Walter Schell)은 1978년 8월 17일에 행한 연설에서 모든 학교와 교사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자유 속의 독일 통일을 향한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바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였다.⁵⁾

뿐만 아니라 1978년 보스만(D. Bossman)은 서독의 각급 학교 학생들(13~24세)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생각들을 조사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서독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감정적인 반공 의식과 함께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에의 참여 준비성은 결여된 채, 베를린에 대하여는 강한 감정적 유착심을 갖고 있으며, 동독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⁶⁾ 또한 이보다 먼저 1975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학생의 80%가 동서독 기본 조약을, 56%는 1953년 6월 17일의 동독 의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2/3는 베를린 장벽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80%는 베를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⁷⁾

3) *ibid.*, 9.

4) *ibid.*, 9.

5) 문용린 외,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44.

6) *ibid.*, 44.

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 결과와 정계의 지대한 관심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KMK는 1978년 11월 23일 학교에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을 결정 발표하였다.⁸⁾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침은 통일 때까지 서독의 각급 학교를 위한 통일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서독 주 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 지침서는 서독의 모든 주에 적용되었다.

서론에서는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평화와 자유의 이념 안에서 독일 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독과 동독 주민과 동독의 발전과정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이다.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 독일 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무엇보다 학교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일 문제는 모든 학교 수업에서 확고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⁹⁾

1장에서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독의 기본법, 동서독 기본조약, 서독 의회의 입장, 서독 정부의 입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서독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서독을 넘어서서 독일 전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독 기본법에서는 독일 국민들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주적으로 성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동서독 기본조약은 두 독일 국가가 평등의 원칙 아래 국경을 상호 존중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쌓아 갈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서독의회는 1972년 5월 10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의지를 만장일치로 천명하였다. ... 서독 연방정부는 1977년 6월 17일 독일이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와 통일이 모든 독일 민족의

7) *ibid.*, 44.

8)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245-256.

9) *ibid.*, 246.

염원임을 천명하였다. ...”¹⁰⁾

제 2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서독의 청소년들이 독일의 분단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동일하게 분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독 주민들 사이에도 분단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 독일 문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전체 국가 사회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원칙 아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학교의 과제이다.”¹¹⁾

이와 같은 기본 입장 하에 제 3장에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체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 요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10. 동독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12.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 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15. 독일은 서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¹²⁾

제 4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9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10) *ibid.*, 246-247.

11) *ibid.*, 247-248.

12) *ibid.*, 248-255.

제시되고 있다: 1. 독일 문제는 무엇보다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국어(독일어)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학생들은 독일 국가의 멜로디를 알아야 하며, 3절을 암기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독일이 분단 국가임과 베를린이 옛 수도임을 알아야 한다. 4. 역사적인 관점에서 독일 민족의 탄생과 독일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5. 일반사회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구조,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상태를 가르쳐야 한다. 6.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서독 뿐 아니라, 동독과 독일 제국 당시의 독일 영토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7. 국어 교과에서는 특별히 중등교육에서 독일 민족의 성립과정에서 문예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동독의 문학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 8. 기타 다른 교과에서도, 특별히 미술과 음악 교과에서 독일 문제와 동독의 상황에 대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다. 9.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평결은 수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³⁾

제 5장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들이 편찬·제작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끝으로 제 6장에서는, 교사 양성 및 연수과정에서도 이 합의 내용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주의 문교부장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¹⁴⁾

라. 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펴기 전과 후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방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방정책 이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기 전에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문제(Deutsche Frage)”라는 주제 아래서 동독을 비롯하여 동구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서독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동독의 비민주적

13) *ibid.*, 255-256.

14) *ibid.*, 256.

인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동서독 독일 민족과 국가가 하나임과 독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면서도 냉전시대를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은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동서독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의 체결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통일 문제를 현실화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더불어 동서독 국민들이 독일문제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라진 통일환경은 통일교육의 목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8년의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방정책 이전에는 동독을 비하하고 서독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동방정책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객관적인 동독 이해와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강조한 점, 동독주민을 한 민족으로 보고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강조한 점 등은 분단 후 통일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져 온 통일교육의 목적이었다.

마.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

통일교육 기본지침은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주 교육부가 마련하는데 교육내용 선정과 교수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각 교과별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후속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교과서가 개발된다. 이렇게 교과서가 개발되면 교사들은 과정기본계획안, 그리고 교과서를 교육에서 모두 활용하게 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에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교육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교과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즉,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모든 교과활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통일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기본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이 지침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인 “정치”, “사회”, “정치교육” 등을 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말한다.

서독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각 주에 속해 있었다. 통일 전 11개의 주는 고유한 역사적 전통에 기초해 교육제도를 구성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모습은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 역시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명,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시기(학년), 통일교육의 내용 등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의 통일 전 통일교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독일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 전 통일교육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였던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와 독일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교육보다는 일반 정치교육을 강조하였던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를 사례로 하여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교과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1) 라인란트-팔츠 주 “사회”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¹⁵⁾

라인란트-팔츠 주의 “사회” 교과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김나지움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교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학교 9학년

15)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für die Grundschule*, 1971;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Sozialkunde - Gymnasium*, 1984;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Gemeinschaftskunde in der Oberstufe des Gymnasiums*, 1983.

부터 고등학교 13학년까지 개설되어 있었다. 학년별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통일 전 라인란트-팔츠 주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학 년	주요 내용
1학년	- 어린이들의 생활에서의 질서 - 사회기관
2학년	- 생활에서의 질서 - 사회안전기관 - 사회기반시설
3학년	- 민주주의 질서 - 지방자치행정 - 지방의회 - 교통관련기관 - 정보제공기관
4학년	- 민주주의 질서 - 재판소 - 여가 관련 기관 - 소비
9학년	- 공동체(학교, 가정, 단체) - 법 - 서독의 경제질서
10학년	- 서독의 정치질서 - 라인란트-팔츠 주 - 동독의 정치제도 - 국제정치
11학년	- 서독 사회의 특징, 구조, 문제점 -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 -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 동독의 중앙집중경제
12학년	- 서독에서의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 - 서독에서의 정치행위 - 동독의 정치제도
13학년	- 1917년 공산주의 혁명 - 1845년의 세계연합 구상 - 냉전 - 연방군대 - 동서 갈등과 독일문제 - 통일정책 -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서의 베를린 - 유럽연합의 형태와 문제점 - 국제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 - 국제조약 범주 안에서의 정치행위 - 국제정치의 변화와 전망

2) 니더작센 주 “사회”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¹⁶⁾

니더작센 주의 “사회” 교과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김나지움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교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학교 9학년부터 고등학교 13학년까지 개설되어 있었다. 학년별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 통일 전 니더작센 주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학 년	주요 내용
1학년	- 의식주생활 - 가정
2학년	- 소비 - 교통 - 일과 여가
3학년	- 학교 - 환경보호
4학년	- 거주 - 신문 - 도시
9학년	- 사회심리 - 청소년 상황 - 공동체
10학년	- 서독의 사회 - 서독의 정치제도 - 동독
11학년	- 경제의 개념 - 경제 순환과정과 경제행위의 관련성 - 국가총생산 - 현대적인 경제제도 - 초국가적 경제조직
12-13학년	- 산업화와 산업사회 - 민주주의의 구조와 문제점 - 핵무기 시대에서의 세계정치의 긴장과 갈등 - 제3세계의 등장과 개발도상국가의 문제점 - 미래의 세계

16)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Hrsg.), *Allgemeine Richtlinien und Richtlinien für den Unterricht in den Fächern Erdkunde, Geschichte,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Hannover, 1970.

라인란트-팔츠 주와 니더작센 주의 사회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첫째, 통일교육이 주로 9학년 이후인 고학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등 저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정치교육과 사회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서독에서는 사회과 외에도 역사과, 지리과를 다루면서 동독과 독일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루었다. 그러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은 주로 9학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동서독의 정치·경제·이념 등을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의식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저학년에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구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토론 수업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토론 수업이 가능한 연령에 맞게 통일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주 별로 통일교육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사회 교과 가운데 동독과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반면,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에는 독일 문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다루어진 내용은 서독사회의 여러 특징들, 동독의 정치·경제적 상황,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 독일 역사와 동서냉전, 독일 분단 문제, 동서독 비교, 통일정책, 국제관계 등 비교적 폭넓게 통일문제를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단순히 독일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서독의 교육전문가와 행정관료들이 통일교육을 좁은 의미에서 통일과 동독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동시에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서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 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17)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작업이 요청된다.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서독 “사회”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은 “사회” 또는 “정치교육”이라는 명칭의 교과서 가운데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과서 하나를 선택하여 1972년 동방정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통일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과서 내용 분석

동방정책 이후 서독 통일교육의 변화는 서독의 정치교육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민간 출판사가 각 주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고 해당 주 교육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검인증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주에서 사용하게 되고, 특정 주의 특성에만 부합하는 교과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사회 교과서 가운데 동방정책 전후 뚜렷이 대비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교과서는 서독에서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디스터벡(Verlag Moritz Diesterweg) 출판사가 “정치와 법(Politik und Recht)”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교과서로서 당시에 여러 주에서 채택하여 활용되었다. 1970년과 1973년에 각각 발간된 위 교과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즉 12학년과 13학년 학생을 위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제작되었으며, 학년별로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¹⁸⁾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1970년 교과서는 전체 255면 가운데 11면이, 1973년 교과서는 전체 293면 가운데 20면이 통일과 관련되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18) *Politik und Recht: Arbeitsbuch für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Frankfurt: Verlag Moritz Diesterweg, 1970; *Politik und Recht: Lehr- und Arbeitsbuch für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Frankfurt: Verlag Moritz Diesterweg, 1973.

<표 II-4>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1 - 전체목차

	1970년 교과서	1973년 교과서
전체 목차	<p>A. 공동체와 지방자치</p> <p>B. 국가와 헌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 국가 2. 민주국가가 되기 위한 독일의 노력 3. 독일의 헌법 4.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5. 동유럽에서 독일인의 추방 6. 전체주의 7. 민주국가와 전체국가에서의 정치 선전 8.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p>C. 국제조약, 국제기관,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럽통합 2. 세계정치그룹 3.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조약 4. 평화를 위한 조직 <p>D. 권리와 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 2. 자연권 3. 법 	<p>A. 민주주의 국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 형태 2. 민주주의 국가 행정 3.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 5. 민주국가의 정치선전 <p>B. 전체주의 국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주의 형태 2. 전체주의 국가의 정치선전 <p>C. 독일연방공화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일제국(1918-1945) 2. 독일연방공화국과 베를린 3.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p>D. 독일민주공화국(동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련점령지가 동독국가로 발전함 2. 동독의 소련동맹체제로의 편입 3. 독일 통일의 문제점 <p>E. 추방 - 동독국경 - 동방정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유럽에서 독일인의 추방 2. 동독의 국경과 동방정책 <p>F. 세계정치 그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정치 2. 유럽 3. NATO 4. 바르샤바 조약기구 5. 중국 <p>G. 평화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조약 2. 평화를 위한 조직 <p>H. 공산주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산주의의 의미 2. 공산주의 이념 <p>I. 인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법에서의 인권 2. 국가권력에의 저항 <p>K. 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의 기초 2. 정의와 법 3. 법 4. 형벌의 문제 <p>L. 공동체와 지방자치</p>

<표 II-5>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2 - 총론

	1970년 교과서	1973년 교과서
제목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독일민주공화국(DDR)”
분량	11면(106-117쪽)	20면(138-157쪽)
내용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2. DDR의 헌법 3. “사회주의 건설” 4. 1953년 6월 17일 항쟁 5. 소련화의 과정 6. DDR의 동구권에의 편입 과정 7. 독일 통일의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2)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3) 독일 국가와 독일 국민 4)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의 성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나.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DDR 다. DDR의 사회변혁 라.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령 마. 1968년 DDR 개정 헌법의 서문 2. 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정 3. 독일 통일 관련 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헌법 내용 나.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다. 독일 국민, 독일 민족, 독일 국가 라. 외교정책적 측면
내용 서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 체제의 우월성 강조 ○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열등성 및 문제점 부각 및 비하 ○ 동독 국민들의 체제 저항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체제의 특성 및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 ○ 동서독의 헌법, 정치체제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주요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적 사고가 반영됨 ○ 체제우위 및 비교우위 강조됨 ○ 통일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동서독의 상이한 입장차이만이 부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 협력 정신 강조 ○ 객관적 소개 및 비교가 강조됨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 관련 내용의 비중이 높아짐

<표 II-6> 서독 정치교육 교과서 비교 3 - 각론

	1970년 교과서	1973년 교과서
동독 국가 호칭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선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없이”(106쪽) ○ “보통 강제 선거”(106쪽) ○ “선거인은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다”(108쪽) ○ “강요로 인해 선거 참여율은 대단히 높고, 찬성비율도 99%로 대단히 높다”(10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없이”(139쪽) ○ “찬반투표”(139쪽) ○ 삭제 ○ 삭제
동독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은 이름만 민주주의적이다”(107쪽) ○ “동독의 사이비 민주주의적인 헌법 규정은 현저히 모순적이다”(10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삭제
동독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사회당(SED)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10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동독 국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국가제도(행정부, 입법부 등) 객관적으로 소개 ○ 동독 국가(國歌) 전문 소개 ○ 동독 의회 선거결과 소개 ○ 동독 지리(면적, 인구) 소개
동독 사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철조망 설치 ○ 교회와의 투쟁 시작 ○ 공산주의 경제 도입 ○ 결과 : 난민 및 서독으로의 이주자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개혁 및 국유화 ○ 기업의 국유화
1953년 6월 17일 항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주민의 항쟁 ○ 항쟁의 구호: 자유선거, 독일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신정책 ○ 동베를린의 데모 ○ 6월 항쟁의 성격과 영향 ○ 동독 신정책의 종말
동독의 소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이후 “사회주의 건설”이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추진됨(11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1968년 제정된 동독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의 서문 소개
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편입과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동구권 편입과 서독의 서구권 편입과정 비교 서술 ○ 동서독의 군대 비교 ○ 서독의 동방정책 소개
독일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제국을 잇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113쪽) ○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 동독의 입장 변화 : 1국가론에서 2국가론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의 독일 통일 관련 헌법 비교 ○ 동서독의 성명서, 인터뷰 비교 ○ 동서독 기본조약 소개 ○ 통일과 외교정책과의 관련성 소개

2) 통일교육 교과서의 특징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과서 가운데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동방정책 이전과 동방정책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형식면에서 볼 때, 위 교과서는 정치, 경제, 국제, 법 등 일반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여러 사회 내용을 다루면서 조금씩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이 넓은 의미의 사회과 교육, 즉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량면에서 볼 때, 1970년 발간된 정치교육 교과서에서는 동독에 대하여 10페이지 정도의 분량만 다루고 있으나, 1973년 통일 출판사에서 발간한 동일한 정치교육 교과서에는 그 양이 20페이지로 두 배 가량 증가한다.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것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에도, 1970년 교과서와 1973년 교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동독에 대한 인식의 커다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통일교육관련 내용의 제목을 보면, 1970년 교과서에서는 동독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Die sowjetische Besatzungszone in Mitteldeutschland)”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1973년 교과서에서는 “독일민주공화국(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70년 교과서에서는 동독을 소련의 식민지 또는 위성 국가 정도로 표현하고 있으나, 1973년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1970년 교과서에서는 동독의 체제를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로 비하하고 있으나, 1973년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대폭적으로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동독 체제에 대한 내용서술에 있어 서독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19) 교과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서술하기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의 역사와 동독 국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대폭적으로 보강되었고,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동독 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동서독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입장, 통일정책, 통일관련 헌법과 조약, 성명서 등을 전문 또는 일부분이 가감 및 삭제 없이 소개하여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통일교육 활용 자료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교육에서 활용한 자료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였다. 주교육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교사들의 통일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 학교 및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통일교육 활용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는, 교과서 제작시 교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통일교육 설명자료이다. 교사용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료에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다루는데 필요한 설명자료와 참고자료 등 각종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둘째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자료이다. 각종 정치교육 보고서, 시청각 매체, 정기간행물, 통일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세미나 등에서 교사들은 관련 정보를 얻고 교수학습활동에서 활용하였다. 특별히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는 학교에서 사회 또는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서, 교사용 교재와 학생용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교재에는 관련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교수방법, 그리고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용 교재는 교사용 교재의 순서에 맞추어 텍스트와 더불어 통계, 표, 그림, 만화, 토의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주제”는 각급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역시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된 1952년부터 발간되었는데, 1년에 4회씩 인쇄되어 학교교사들에 보급되어, 통일교육과 관련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비디오 등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제공하는 시청각 매체 역시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셋째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제공하는 학생용 정치교육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 “확대경(Zeitlupe)”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 관련 소식을 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받았다.

넷째는, 체험학습이다.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학교 내에서 독자적인 연구활동, 공동작업,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체험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스스로 제작한 교수학습용 자료들이다. 주 교육부나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교사들은 각종 연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한 자료들을 스스로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 등 통일교육기관들은 학교의 정치교육을 돕기 위하여 각종 도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었다. 학교 당국과 교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자율적으로 정치교육에 활용하였다. 위 자료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는 매우 높아, 대부분의 사회 교과 교사들이 위 자료를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통일교육 자료는 통일 이후에는 동독 지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대학(서독지역)과 막데부르크(Magdeburg) 대학(동독지역)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독일 교사들의 36.4%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자료를 자주 활용하고, 61.1%가 가끔씩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97.5%의 교원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²⁰⁾ 통일교육 자료의 가치성과 신뢰성이 자료활용도를 높이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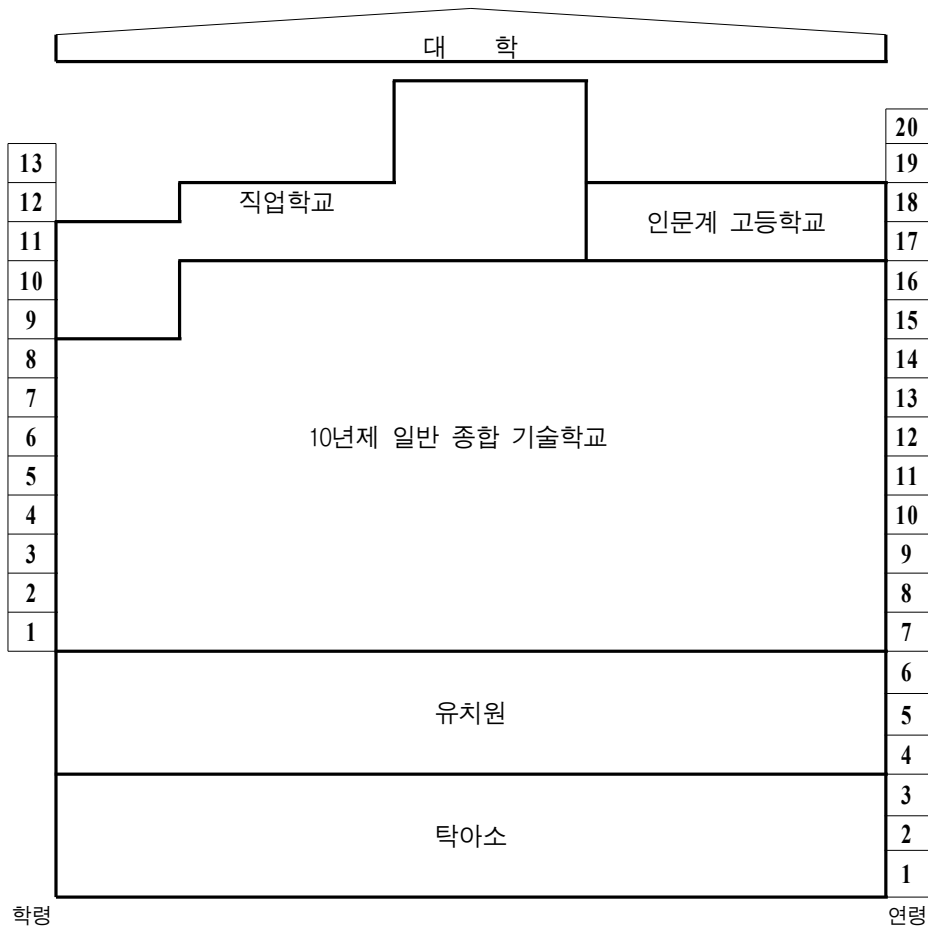
2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120-121.

2. 통일 전 동독의 학교통일교육

가. 학교통일교육 개요

1) 구 동독의 교육제도

구 동독의 학교제도는 서독과 같이 분화된 형태가 아니라, 통일되고 획일적인 형태로서의 10년제 종합기술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POS)와 2년제의 확대 고등학교(Erweiterte Oberschule: EOS) 형태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림 II-2】 구 동독의 학교 제도

2) 학교통일교육체계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이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통일 전 동독에서도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독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면,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한 마디로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이념교육의 중요 내용이었다. 서독에서는 통일교육 안에서 동서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과 통일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동독의 이념교육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 동독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만이 가능하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통일교육은 역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국가시민(Staatsbürgerkunde)” 교과가 있었다. 교과외활동으로는 첫째, 군사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로는, 유소년 조직과 청소년 조직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시민” 교과이다. 통일 전 동독은 “국가시민”이란 이름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국가시민” 교과는 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시민” 교과를 위하여 동독 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중학교 1학년(7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12학년)까지 “국가시민” 교과 안에서 실시되었다. 동독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국가시민 교과과정이 차지하는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II-7> 동독의 초·중학교 교과과정

교과목/학년	1		2	3	4	5	6	7	8	9	10
	1학기	2학기									
국어(독일어)	11	10	12	14	14	7	6	5	5	3	3
러시아어						6	5	3	3	3	3
수학	5	5	6	6	6	6	6	6	4	5	4
물리							3	2	2	3	3
천문											1
화학								2	4	2	2
생물						2	2	1	2	2	2
지리						2	2	2	2	1	2
작업	1	1	1	1	2	2	2				
학교정원가꾸기		1	1	1	1						
다기능 수업								4	4	5	5
1) 생산활동입문								1	1	2	2
2) 기술 설계								1	1		
3) 생산활동								2	2	3	3
역사						1	2	2	2	2	2
국가시민교과								1	1	1	2
미술	1	1	1	1	1	1	1	1	1	1	
음악	1	1	1	2	1	1	1	1	1	1	1
스포츠	2	2	2	2	3	3	3	2	2	2	2
주당 수업 시간 수	21	21	24	27	28	30	33	32	33	31	32
바느질					1	1					
제 2 외국어								3	3	3	2/3
주당 수업시간수	21	21	24	27	30	31	33	35	36	34	34/35

다음으로 고등학교 상급반인 상급고등학교(EOS)의 교육과정 편제안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II-8> 동독의 고등학교 교과과정

교과목/학년	11	12
필수과목		
국어(독일어)	3	3
러시아어	3	3
제 2 외국어	2	3
수학	5	5
물리	3	3
천문	-	1
화학	2	3
생물	2	3
지리	2	-
역사	3	-
국가시민교과	1	2
스포츠	2	2
주당 수업 시간 수	28	28
필수선택과목		
학문적-실천적 활동	4	4
음악 또는 미술	1	1
주당 수업시간수	33	33
자유선택과목	3	3
총 주당 수업시간수	36	36

구 동독의 학교통일교육은 철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서독 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의 중심 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독의 학교통일교육은 “국가시민” 교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었다.

7학년 때에는 동독의 역사와 사회적 질서를 배우는 것이 중점 내용이고, 8

학년 때에는 동독의 헌법을, 9학년 때에는 사회주의에로의 사회발전의 법칙과 계급투쟁과정을 배우고, 10학년 때에는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11-12학년 때에는 변증법적 유물사상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국가시민 교과와 더불어 군사교육 역시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강조되었다. 동독의 모든 국가 구성원은 국가 방위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했다. 이 점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었다. 군사교육은 그러한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군사교육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교과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비군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

군사교육의 과제는 1) 국토방위 동기 부여, 2) 목숨을 걸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 함양, 3) 군사정치적, 사회과학적, 군사적 지식과 능력 매개, 4) 용기, 순종, 희생정신 등 성격 형성과, 힘, 인내 등 신체단련 등이었다.

군사교육은 이미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군인을 만나고, 군사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국토방위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군대와 군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도록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중급과 상급단계의 학교교육에서는 특별히 역사와 “국가시민” 교과에서 군사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가능성이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군사지식이 전달되었다.

동독은 통일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조직을 적극 활용하였다. 청소년 조직으로는 자유독일청년연맹(Freie Deutsche Jugend)과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은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²¹⁾과 유사한 조직이다.

2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고등중학교 5학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조직으로서 예술활동, 체육활동, 군사훈련, 노동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주의적 도덕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135-137)

14세부터 26세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동독 청소년 조직을 대표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반제국주의-민주주의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그 기능상 공산당인 SED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목적은 1) 청소년을 사회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가로 교육시키는 것, 2) 청소년들을 동독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 3) 청소년 군대조직의 건설, 4)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확산, 5) 다면적인 여가 선용 조직과 학습활동 장려 등이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1) 자유독일청년연맹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것, 2) 학습과 노동과 연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 3) 군사지식 획득과 노동자-농민 국가 방위태세 확립, 4)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결속력 강화, 5) 공동체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적 규칙을 엄수하는 것, 6)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조직을 홍보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조직은 중앙집권적이었다. 각 지방에는 지회를 두고 있었고, 지회에는 기업체, 행정, 학교, 대학, 공장 등에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속하게 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최고 상급기관은 국회이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휘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일간지를 발행하고, 각종 잡지를 발행하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청소년 조직이라면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은 유소년들을 위한 학생 조직이다. 북한의 소년단²²⁾과 유사한 조직이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지도를 받으며 6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이 가입대상이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1948년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연합단체로 결성되었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들을 평화와 사회주의 이념 아래

22) 북한의 유소년 조직으로 모든 학교의 인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토론회, 연구모임, 노동활동 등을 통하여 “당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용감한 공산주의 전사”를 배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참고,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106-108)

철저한 동독 국가 시민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었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주요 과제는 1) 학교가 사회주의적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하는 것, 2)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 흥미있고, 교육적이고, 어린이에 맞는 활동의 개발 등이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과 마찬가지로 에른스트 텔만 연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여러 상징적인 휘장들을 하고 다녔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 조직은 학교 내의 전체 조직과 학급 내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지원하고 신문과 잡지도 발행하였다.

나. 통일교육정책

통일 전 구 동독은 한 마디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이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어야 하며, “혁명적 정치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로서 구실하였다.²³⁾ 교육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의 통합”이 구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추구하던 핵심 원칙이었다.²⁴⁾ 이 점은 통일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통일교육정책은 공산주의 정당이 만들었고, 교육행정기관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그것의 사상적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의 현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

23)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7.

24)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69.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다.²⁵⁾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로서 나찌시대의 교육제도를 “반 제국주의적이고-민주적인 교육제도”로 개혁하던 시기로서 이 때에는 사회주의 학교를 정착시키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기는, 1949년부터 1962년까지로, 사회주의 이념이 모든 교육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1970년까지로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²⁶⁾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를 거쳐 완전 정착되었다. 1949년 이후 통일교육은 이념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독일공산당(SED)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독일공산당은 통일교육 뿐 아니라, 모든 교육분야에서 완전한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독일공산당(SED)은 위와 같은 통일교육 기본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원칙들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통일교육정책과 교육적 수단은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이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라는 전제 아래서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과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회변혁의 도구이다. 셋째, 정치-이념 교육, 정당의 영향, 학교, 교육, 생산 역시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인 인격의 다면적 형성은 최종의 교육목적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사회주의 도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 노동에 대한 애정,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이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실성과 우월성, 그리고 이념 논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을 소유하여야 한다.²⁷⁾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구 동독의 통일교육 정책은 독일 전체에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도록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교화시키고 사회주의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교육 정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 국가가 건설되

25) *ibid.*, 15.

26) *ibid.*, 17.

27) *ibid.*, 24.

고 1989년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 왔다. 서독에서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바뀐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사례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76년 제 9차 당 대회에서 구 동독 수상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동독의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더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 것을 요청한다.”²⁸⁾고 강조하였다.

다. 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통일교육의 기본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교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독 당국은 “국가시민” 교과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였다. 국가시민교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달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주의 모국과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였다.

통일교육에서 매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인류 역사의 진보과정의 법칙적 귀결이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휘 아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결과요, 반인류적인 제국주의 체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알게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체 국가 시민 교과 수업에서 사회주의 세계가 그 힘과 권력과 권위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28) *ibid.*, 26.

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주의가 역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것이며,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였다.

학생들은 위의 사실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독과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역사적 위치와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야 하였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정당성과 제국주의에 대한 우월성 등을 인식하여야 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하고 선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학생들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배워야 했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세계관 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이었다. 학생들은 먼저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초 능력이 강조되었다.

-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발전 모습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사회발전 현상을 볼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세계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독자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할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문헌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관련 문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대중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현재의 정치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이 고유한 경험을 사회적 삶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하고, 사회적-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라.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 동독에서는 구 서독과 같은 통일교육기본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교육의 변화를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구 동독 통일교육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구 동독은 중앙집권적 국가였기 때문에 교육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구 서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각 주 문교부장관들이 모여 합의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구 동독에서는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 통일교육 관련 기본지침들을 모두 담고 있었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통일교육지침 뿐 아니라, 통일교육목적, 교육방법적 원칙, 교수활용자료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았다.

구 동독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사회주의 정당(SED)의 기본 지침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었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어떤 교육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각 교과별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후속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교과서가 개발된다. 즉,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모든 교과 활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활동에서 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지침에 따라 그리고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 구 동독에서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별히 이념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인 “국가시민” 교과를 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말한다.

구 동독은 중앙집권적 국가이였기 때문에 교육부가 만든 통일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다. 각 주별로 통일교육과정이 약간씩 차이

가 있었던 구 서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구 동독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이 기본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1946년 처음 공포된 이후, 이후 계속 연구·개발되었다. 1952년 7월 29일 독일공산당(SED)의 결정에 의하여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교육목표로 제시되면서, 사회주의 교육과정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²⁹⁾ 통일교육과정 역시 이 때부터 만들어졌다.

구 동독의 통일교육은 “국가시민”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이 교과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분석하면 구 동독의 통일교육의 기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7학년은 1983년, 8학년은 1984년, 9학년은 1988년, 10학년은 1988년) 구 동독 교육부에 의하여 개발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분석하도록 하겠다.³⁰⁾ “국가시민” 교과는 보통교육과정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정규과목으로 가르쳐졌고, 상급고등학교인 11-12학년과 직업학교의 직업교육과정에서도 필수교과로 강조되었다.

1) 국가시민 교과의 목표와 과제

국가시민 교과 안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는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학생들은 과학적이고 확고부동한 계급관념에 입각해서 모든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의무를 지각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열성적인 과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적-이념적 도야와 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민을 교육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성과 행동이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사회주의

29) O. Anweiler,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1988.

30)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1988.

적 애국심과 프롤레타리아 국제동맹의 정신을 갖도록, 그리고 그들의 사회주의 조국,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SED)과 그 혁명적 투쟁에 대한 정치적 확신과 확고한 유대의식을 갖도록 각인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가 매개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는 인간 발달의 합법적인 결과, 즉 비인간적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 아래 노동자 계급이 투쟁한 결과이며, 노동자 계급은 인류를 공산주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학생들은 전체 국가시민 교과를 통하여 언제나 사회주의 세계에 대하여, 즉 그 각성된 힘과 권력과 자율성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포괄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하였다. 그 때 학생들은 사회적 사실과 관계들을, 즉 역사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공격적인 입장과 제국주의의 방어적인 위치에 대해서, 또한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투쟁들이 변증법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확실히, 그리고 논리적인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동성 안에서 동독과 소련의 역사적 위치와 위임관계에 대해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차이와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의 본질과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힘과 제국주의에 대한 우월성과 사회주의 정당의 경제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언제나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아래 노동자 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적 투쟁의 변증법을 이해하여야 하였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첨예화된 계급갈등의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해야 하는 높은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회주의 정당이 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다 힘겨워진 과제를 위한 일꾼이 되었으며, 그러한 결론을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여야 하였다.

철학적 관점에서, 국가시민 교과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형성과, 그 역사적 성취와 폭넓은 확산에 대한 전망과 신념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 굳건하게 하는 확고한 인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계관적, 정치-도덕적 교육의 상호 연관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회적 발전이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아래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였음을,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 역사적 소명임을,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격과 지식과 기능과 능력을 사회주의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는 또한 학생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통한 근로자들의 지도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가 사회주의의 불가침의 원리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어야 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이 획득한 세계관적 기초지식과 정치적 지식이 학생 자신의 고유한 사유와 행동과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유한 세계관적 낙관주의가 학생들의 능동적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물음이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응답될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와 능력이 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국가시민 교과는 전체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특별히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 현재와 과거의 정치적 투쟁들에는 언제나 사회적 계급들의 객관적 관심이 개입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사건들의 배경에 있는 사회적 바탕을 이해하며, 그 역사적 전개와 발전의 전망을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사회발전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과 세계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자기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지식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적대 계급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대

- 항하여 적극적이고 당파적으로 논쟁하는데 적용하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건들과 사회주의적 대중매체들을 통해 실제적인 정치적 인포메이션과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
- 학생 스스로의 사회적 삶에 대한 참여의 경험들을 객관적인 행위규범과 건설적인 표상들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정치적 삶에 스스로의 제안과 활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2)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수업의 요점

국가시민 교과목의 목표로부터 연간계획과 각각의 단원들의 이념적-이론적 강조점이 도출된다. 7학년과 8학년의 수업은 동독의 사회주의국가로의 형성은 사회주의 정당(SED)의 지도를 받는 근로자들의 커다란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지켜나가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확신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론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동독의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한 확실한 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7학년 수업에서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료를 기초로 동독 국가의 형성과 성장과정, 사회주의 정치와 경제의 탄생과 전개과정이 설명되었다. 이러한 기초지식은 8학년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확대, 심화하여 이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7,8학년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와 발전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었다. 이와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시민” 교과의 기초가 다져지게 된다.

동독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으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위해 성공적으로 투쟁하도록 이

끝었고 이끌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수업은 이렇게 사회 발전이 국민 대중의 행동의 결과임을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 계급이 현대 사회 발전의 혁명적 원동력이고, 그러한 혁명적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7,8학년의 수업은 사회주의가 제국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동독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과제로 갖고 있었다.

국가시민교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7학년과 8학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매개하고 동화시키도록 해야 하였다.

■ 7학년

- 1945년 이후의 반파시스트적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모든 근로자들의 연대와 소련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적들과의 고된 계급투쟁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서독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반파시스트적-민주적 질서를 확립한 과정이었음을 인식한다.(단원 7.1)
- 사회주의 정당(SED)과의 연대 하에 노동자 계급이 우리들의 발전을 이룩해낸 모든 정치적 힘을 창출해 내었고, 동독의 건설은 곧 노동자-농민의 국가 건설을 의미하며, 국유제도는 사회주의의 절대적인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였다.(단원 7.2)
- 산업과 농업, 사회 제도, 교육과 문화의 사회주의적 발전은 제국주의에 대한, 특히 제국주의적 서독에 대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된 노력의 결과이고, 사회주의 정당(SED)의 지도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정초 위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동독이 사회주의적 국가로 형성되었으며, 높은 성취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은 성장세대에 주어진 사회적 명령이다.(단원 7.3)
- 노동자 계급이 국가소유제도의 기초 위에서 사회적 부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창출하며,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사회

주의 정당(SED)은 동독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며, 노동자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동독 안에서 노동자계급은 농민계급이나 지식인 혹은 다른 근로자들과 확고한 연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대는 모든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동의 기초적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도는 사회주의의 불가침의 토대이다. (단원 7.4)

■ 8학년

-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지도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권력기구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적 특징을 갖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과업과 동독의 사회주의적인 국가권력의 수립과 작동방식에 대한 근로자들의 포괄적인 참여가 사회주의적 국가원리 아래서 창조적인 공동작업과 주도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보다 민주주의적인 특징을 만들어 내었다.(단원 8.1)
- 동독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사회주의 헌법이 다음과 같은 기본권리를 보증한다. 사회주의 안에서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결정과 공동형성의 권리, 노동·교육·문화향유의 권리,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 대한 권리 등이다. 사회주의 국가시민에게 부여된 이와 같은 기본 권리들은 사회주의의 성취이다. 사회주의 조국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실행하는 것은 그 권리를 완전히 지각함과 더불어 국가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단원 8.2)
-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 서독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로 대립관계에 있고, 상반되는 사회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 통합 불가능성은 동독과 서독의 상반되는 권력과 소유 관계에서, 동서 양 독일국가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제국주의

서독은 미 제국주의 및 NATO와 동맹관계에 있으며, 그들은 사회주의를 멸망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은 동독의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과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인간 적대적인 국방정책에서 드러난다. 평화 수호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사회주의 정당(SED)의 정책은 모든 이들이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9, 10학년의 수업의 주안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사회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충돌할 것이고, 결국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성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수업에서 획득하는 지식들을 이론적으로 심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은 구체적이고-역사적인 투쟁조건들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투쟁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방법을 연구하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제공하고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은 특히 10학년에서는 동독이 선진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인 필연성이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교육되어야 하였다. 이렇게 하여 9,10학년에서 학생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것이며,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혁명적인 세계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주도권,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인 위치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9학년과 10학년 수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생각들을 매개하여야 하였다.

■ 9학년

-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가 인간사회의 합법칙적 발전을 해명하였다. 모든 착취사회의 역사는 그러한 착취적 사회 질서에 대한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주된 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합법칙적인 상호관계에 토대하고 있다. 발전된 생산력과 현존하는 생산관계는 곧바로 착취사회 안에서 불가피하게 진보적 계급의 혁명적 활동을 요청하며, 사회혁명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모순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은 무엇보다도 근로 대중의 생산활동과 계급투쟁의 결과이다.(단원 9.1)
- 자본주의 안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서로 상반되는 주요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가 자본주의적 착취의 원천이다. 잉여가치론이 이러한 착취질서의 근본적 작동원칙이다. 제국주의는 독점적 자본주의이다. 독점은 내적·외적 반작용과 공격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원인이 된다. 제국주의는 스스로 모든 모순들을 첨예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날카로운 계급대결은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이의 첨예화된 모순의 결과이다. 제국주의 몰락은 역사적 필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언제나 인류에 대한 위협적이고 강력한 적이다. 제국주의의 정책과 이념은 자본주의적인 착취질서의 유지와 사회주의의 파괴와 세계지배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단원 9.2)
-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며, 착취와 억압이 없고, 전쟁의 원인들이 철폐된, 모든 인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실현된, 그리고 사회적 평등이 확보된 사회에 대한 인간주의적인 꿈의 실현이다. 자본주의의 전복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이러한 역사적 과업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으로 부름 받은 노동자계급이 이끄는 혁명적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부여

된 역사적 사명의 일부분이며 현대의 계급투쟁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인도는 역사적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성과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의 창출은 거부할 수 없는 기본 과제이다.(단원 9.3)

■ 10학년

- 이 시대는 과업의 단계로 볼 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다. 역사적 공세의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사회주의는 소련과의 연대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제국주의의 반 공산주의적 정책, 제국주의적 군비확장과 전쟁준비, 눈앞의 인류 문제에 대한 무능력함은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수세적 위치와 깊은 위기의 내적 모순이 표출된 것이다. 사회주의와 평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평화유지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국제적 계급대결의 주된 전장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주요 조건이다.(단원 10.1)
- 동독을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로 만드는 것과 공산주의를 향한 점진적인 과정의 근본적인 전제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정당(SED)의 목표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에 깊이 뿌리 내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문화적 변화이며,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지켜내어야 할 영역이다.(단원 10.2)
- 핵심과업에 대한 정책은 자명하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와, 그 생산관계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본원칙들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핵심과업에 대한 정책을 다른 내적·외적 조건 안에서 지속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모든 역량과 장점을 총동원하여 국민경제를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SED)의 경제 전략은 핵심과업의 지속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 중심적인 과제는

사회주의적 생산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키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사회주의의 장점들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과업수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와 창조적인 노동은 모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과학기술적 발전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단원 10.3)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인도 아래서, 계급들과 계층들의 발전을 통하여, 노동자계급과 농민조합 그리고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 구조와 정치적 조직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이 이끄는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장과 완성은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의 국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지향점이다.(단원 10.4)
-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필연적이며 과학적인, 어떤 한 편으로 치우침 없는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식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실천을 안내한다. 따라서 모든 젊은 공산주의자들과 국가시민들은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계급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단원 10.5)

3) 국가시민 교과와 교수학적 원칙

국가시민 교과와 이념적-역사적 요청은 그 교수학적-방법론적 특징을 결정한다. 국가시민 교과와 기본적인 지식을 정초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였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모든 다른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과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행한 혁명적인 투쟁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하나의 지식으로 매개되고 결합되어야 하였다. 모든 지식들이 연관계

획들과 단원들 안에서 연계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들을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확장해가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과 맥락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정선된 지식을 어떻게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적 권력관계와 소유관계,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 및 여타의 과제들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는 계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해당 단원의 내적인 강조점을 통해서 각각의 새로운 내용적 핵심과 목표한 높은 수준을 확실하게 실현하여야 하였다. 7학년의 예를 들면 동독의 형성이, 8학년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민주주의의 실천적인 기능발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였다. 단원 10.4에서는 선진 형태의 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그 기능과 발전의 주요 방향에 대한 지식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단원 10.5에서는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이 정치적 힘에 대한 물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적이고 정치적인 물음으로 연결되었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세계관적이고 정치적인 지식을 가식적으로 숙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동화시키고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토론하고 계급에 걸맞는 가치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경험과 학생들의 경험들과 사실들이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진실성에 대한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명과 결정의 상황들은 확신에 찬 논쟁과 증명과정, 계급에 합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자신의 고유한 혁명적 행위에 대한 결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그와 같은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미 획득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본 인식을 언제나 보다 명확하게 하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고유한 방향정립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의미와 논쟁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확신의 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보았다.

교사들이 자신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수업 안에서는 다루기 힘든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정치적인 사건들을 학생들이 논의하는데 할당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미 배운 지식들을 확실하게 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국가시민 교과 수업은 투쟁적이고 논쟁적인 특징을 띠었다. 나아가 기존에 학습한 객관적인 사회의 요구들을 국가시민의 자세와 행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자기비판적인 논쟁의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신중한 습관과 사고방식들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의 투쟁적이고 논쟁적인 정신은 무엇보다도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와의 확신에 찬 논쟁을 요청하였다. 논쟁은 적극적이고 무당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 전체적인 스타일은 사회주의의 공격적인 위치와 그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의 의식에서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적대계급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와의 논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본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매개하고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가치에 대한 폭로와 반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도록 하여야 하였다. 또한 논쟁은 학생들의 지식을 강화하고 심화하며, 그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논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논쟁은 학생들이 제국주의적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계급적 특징과 비인간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게 해야 하였다. 수업은 학생들을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특징과 그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정신적인 작동의 기법 및 이데올로기의 차이들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어야 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들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서들로부터 선정된 텍스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 선언”과 사회주의 정당(SED)의 정강이 국가시민 교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9학년과 10학년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수업과 숙제는 학생들을 이러한 원천들로 안내하여야 하

며, 교사의 설명과 해석적 강의와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 등의 텍스트 해명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사회주의의 고전들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건들을 신뢰할만한 충고자로 여길 수 있게 되어야 하였다. 그 안에서 합리성과 감성의 풍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교과서와 사건들을 수업의 매개물로 처리하기 위한 의미 깊은 단초들, 그리고 교육방송의 내용들, 그리고 선동적이고 각성적인 용어들을 수업 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의 배열은 다른 교과들 및 교사의 수업외적인 전략의 내용, 형식과의 조화 안에서 국가시민 교과의 특수한 목적과 과제들의 관점에 기초한 결과들에 맞추어져야 하였다.

따라서 국가시민교과 수업은 학생들의 변증법적-유물론적 사유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역사적 인식들과 역사적 사유능력을 매개하고, 사회적 발전과정의 깊이 있는 파악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시민 교과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서로 반대되는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의 특징과 본질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였다.

이성과 감성의 통일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사회주의의 영웅으로 정립하고, 계급에 적합한 자세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일어 및 독일 문학과 예술과 문학 영역과 관계 안에서 이를 다루어야 하였다. 학생들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어수업(모국어수업)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국가시민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주의 정당(SED)의 산업 및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일치가 학생들이 사회주의적 과제를 위한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획득하는데 유용하였다. 따라서 국가시민 교과의 수업은 학생들의 인식들과 경험들이 경제적인 근본지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문제 중심적이고 국민경제의 역동적인 실천 과정에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은 무엇보다도 정규 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의 수

업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어린이 및 청소년 조직 안에서 학생들의 지식과 정치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유용하였다. 여러 교과들에서 이루어진 도야와 교육의 효과와 다양한 방식의 세계관적 정치적 도야들이 결합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4) 국가시민 교과의 교육과정 분석

구 동독 국가시민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구 서독보다 일찍 통일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학교인 7학년부터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직 학생들의 추상적-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이전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이 획일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서독과는 달리 중앙에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모든 학교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7학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단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셋째, 통일교육을 위한 전담 교과를 갖고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구 서독에서는 “사회” 교과 안에서 부분적으로 통일교육이 다루어졌으나, 구 동독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전담교과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동독 사회의 특징, 공산주의 정당, 사회주의 역사관, 동서독 체제 비교 등이다. 서독처럼 폭 넓게 통일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동독체제의 우월성과 상대방 체제의 비난을 선전하고 주입하는데 교육의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다섯째, 구 동독 통일교육과정은 주요 교육내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교수방법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 동독에서 실시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화(Indoktrination)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교사들 역시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

되어 있었다.

바. 통일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 : 국가시민 교과³¹⁾를 중심으로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국가시민”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³²⁾ 국가시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형식면에서 볼 때, 국가시민 교과서는 하나의 별도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 동독이 교육에서 이념교육을 가장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을 전체 사회 교과 가운데 하나의 부분으로 정하고 포괄적 교육을 실시한 서독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구 동독은 7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 학년 별도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그 분량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0페이지나 20페이지 정도로 통일문제를 다룬 서독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구 동독에서는 이념교육이 그만큼 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에도, 구 동독의 교과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 동독에서는 이념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간주하였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7학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8학년 때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에 대하여, 9학년 때에는 사회발전의 법칙과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하여, 10학년 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와 이를 위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사회주의 국가 형태, 동서독 체제 비교 등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다루었다. 둘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은 발달심리학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먼저 가르치고,

31)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K der SED, *Staatsbürgerkunde - Klasse 7-10*, Berlin, 1984-1989.

32) 교과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람

그것의 현실태인 동독 사회주의 국가를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이나, 구 동독에서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쉬운 내용인 동독 국가체제의 특징을 다루고 동서독을 비교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으로 확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은 철저히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구 서독의 체제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존경심과 상대방인 구 서독의 체제에 대한 적개심을 품도록 가르쳤다. 넷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에서는 가치적인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소개나 비교를 찾기 어렵다. 객관적인 사실을 편파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였다. 동독 체제에 대한 내용서술에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던 구 서독과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문제는 나중에 동독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이중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고, 통일 후 학생들의 사회 부적응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구 동독의 통일교육 내용은 엄격히 말하여 통일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 가르침과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과 의지를 심어주는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체제옹호교육이었다. 서독의 교과서에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입장, 통일정책, 통일관련 헌법과 조약, 성명서 등 등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 점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사. 통일교육 활용 자료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에서 활용한 자료는 구 서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였다. 구 서독에서는 각 주 교육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교사들의 통일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 반면, 구 동독에서는 통일교육활용 자료를 교육부에서 전담하여 개발하고 제공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구 동독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서는 통일교육 시 활용할 자료

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시민교과 수업보조자료³³⁾라는 자료집에서도 통일교육 활용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일 전 통일교육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보도 자료이다. 학생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면서도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둘째는, OHP 자료이다. OHP 자료는 시청각 자료로서 작성하기도 쉽고, 학습 내용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보조자료로 대단히 폭넓게 사용되었던 방법이었다.

셋째는, 역사적이고-현재적인 사례들이다. 사례라는 것은 대상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대표성 있고 설득력 있는 사건 또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통일교육 내용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각 교과내용을 다룰 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사례를 다루도록 강조하였다.

넷째는, 교사들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한 통일교육 보충자료이다. 이 자료는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보조설명자료와 참고자료를 담은 것이다.

다섯째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제작한 활동자료이다. 활동자료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자료를 말한다.

여섯째, 비교자료이다. 예를 들어, 동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비교한 자료로서 두 가지 상이한 체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일곱 번째, 각종 이념교육 관련 문서들이다. 사회주의 문학 작품,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문건, 동독 헌법, 공산당 선언 등 교과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 문서들이 통일교육에서 폭넓게 활용되었다.

여덟 번째, 학생들의 경험활동과 체험활동이다. 이것은 문서나 시청각 자료는 아니지만,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강조된 방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조직이나 청소년 조직에서의 활동 역시 통일교육을 위한 중요한 매체이었다. 학생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체

33) W. Feige u. a., *Unterrichtshilfen Staatsbürgerkunde*, Ost-Berlin, 1980, 12-13.

득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다.

한가지 부연할 점은, 구 동독에서 통일교육은 이념교육으로서 구 동독의 당과 상급관청의 핵심 관심사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내용 뿐 아니라, 교수학습시 활용할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구 서독의 교사들과는 달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통일교육 활용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지정된 내용에 기초해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3. 통일 후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가. 통일 후 환경의 변화

통일 이후 동서독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변화 상황으로 인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면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별히 구 동독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구 동독 학생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는 구 동독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식 특징과 통일 후 의식의 변화과정, 그리고 적응상의 문제점을 구 서독 학생들과 비교하며 고찰하고자 한다.

1)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 과정

독일 통일 이후 변혁 상황에서 많은 구 동독지역 학생들은 기대와 희망, 염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살았다. 그들에게 통일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일은 불확실한 상황 전개, 가치관 혼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걱정, 고민,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가) 독일 학생들의 통일관

(1)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동서독 학생 모두 찬성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구 동독 학생들의 83.2%가, 구 서독 학생들의 65.6%가 통일에 대해 찬성하였다.

<표 II-9> 동서독 학생의 통일에 대한 태도

(단위 : %)

	구 동독	구 서독
매우 찬성	47.3	25.3
찬 성	35.9	40.3
반 대	12	23.1
매우 반대	4.8	11.4

※ 출처: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84.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분단)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 동독 지역에서는 단지 7%가 찬성을, 77%가 거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구 서독지역에서는 23%의 학생들이 찬성을 64%의 학생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³⁴⁾

1995년 바이어(Beyer)의 조사에 의하면, 구 동독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대해서는 37%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 동독으로의 회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1.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³⁵⁾

1990년 이후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독일 주민들 역시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³⁶⁾ 1992년에는 73%(동독)와 66%(서독)의 주민이 찬성을, 1995년에는 각각 87%(동독)와 82%(서독)의 주민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통일이 기쁜 일인가 아니면 염려스런 일인가 하는 질문에도 1994년에 동독 주민의 50%가, 95년에는 60-68%가 기쁜 사건이라고 응답하였다.

34) 통일원, 「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 1994, 228.

35) H.-J. Beyer,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32.

36) I. Spittmann, "Fünf Jahre danach - Wi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3.

(2) 통일이후 상황에 대한 불만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은 통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기쁨을 가져다주진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2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초기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무척 컸다. 1991년에는 23%의 주민이 통일이 기쁨보다는 걱정을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는데, 1993년에는 27%로 증가하였다.³⁷⁾ 1995년 구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5주년 평가에서도 53%의 주민들이 기대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³⁸⁾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의식의 장벽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2년의 조사에서 구 동독 학생들의 80%가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평가하였다³⁹⁾. 1995년 독일의 슈피겔(Spiegel) 잡지의 조사에서도 구 동독 지역 주민의 72%가 자신을 “2등 국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27%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⁴⁰⁾ 1995년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83%의 구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지만, 67%가 동서독 사람들 사이의 의식 장벽이 성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⁴¹⁾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동독 청소년과 주민들의 서독인들에 대한 마음의 벽이 통일 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질감이 높아 가는 상황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즉 완전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 독일 학생들의 동·서독관

통일 이전 1980년대부터 통일 직후인 1990년까지 구 동독 학생들은 구 서독인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통일 직후까지만 해도

37) 통일원, 「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 1994, 229.

38) *Der Spiegel*, 27/1995, 41.

39) Institut für empirische Psychologie(Hrsg.), *Die Selbstbewußte Jugend-IBM-Studie '92*, Köln, 1992, 155.

40) *Der Spiegel*, 27/1995, 41.

41) *Die Welt* vom 3. Juli 1995.

구 동독 학생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구 서독의 체제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우호적인 감정과 평가는 찾기 힘들게 되었다. 통일 과정에 대한 실망과, 인색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한 구 서독 시민에 대한 원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구 동독의 사회보장제도가 훨씬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서독 지역 학생들은 서독의 체제를 구 동독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 지역 학생들은 구 동독의 체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0> 학생들의 동독과 서독에 대한 비교 평가

(단위 : %)

구 분	서독에 대한(동독과 비교하여) 서독 학생들의 평가				동독에 대한(서독과 비교하여) 동독 학생들의 평가			
	좋다	같다	나쁘다	무응답	좋다	같다	나쁘다	무응답
남녀 평등	37.2	21.4	9.2	32.2	29.6	32.2	20.8	17.4
표현의 자유	59.4	17.9	5.8	16.9	10.1	36.2	43.6	10.1
환경 보호	60.2	18.0	4.7	17.1	2.3	8.3	82.6	6.9
여행의 자유	59.5	23.0	3.2	14.2	1.3	37.8	56.5	4.4
교육기회의 균등	35.0	19.3	7.6	38.2	35.8	27.1	18.7	18.4
노동의 권리	21.0	23.1	19.4	36.5	47.6	27.4	8.1	17.0
법 앞의 평등	32.3	20.4	6.0	41.3	15.6	24.6	18.7	41.4
자유 선거	41.9	33.4	4.1	20.6	6.4	63.2	17.7	12.7
의료 보장	44.8	11.1	4.3	39.8	41.4	17.9	13.6	27.1
자유 경제	31.5	8.0	1.9	58.6	1.1	13.7	46.3	38.8
소수의 의견 존중	27.3	17.5	4.7	50.5	24.2	23.1	14.2	38.5

※ 출처: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87.

그러나 1994년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 조사에 의하면⁴²⁾,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구 동독 학생들은 자신들의 특성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 의하면 서독인들은

42) P. Förster, W. Friedrich,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25.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별로 똑똑하지 못하며, 신뢰성이 부족하면서도 자만감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1992년과 비교해 볼 때, 모든 특성에서 서독인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친근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동독인들에 대한 친근감과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구 동독 학생들의 자기출신에 대한 자기동일성이 강화되고 있고, 서독인들과의 경계지움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통일 초기 구 서독 학생들의 우월 의식은 체제에 대한 우월 의식이고, 구 동독 학생들의 열등의식 역시 열등한 체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구 동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구 동독 주민들 역시 처음에는 자신과 구 동독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점차 구체제가 열등하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면서 의식이 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11> 구 동독 주민의 동·서독관

(단위 : %)

	1990		1995	
	서독 우월	동독 우월	서독 우월	동독 우월
생활수준	서독 우월	91	서독 우월	85
	동독 우월	2	동독 우월	8
범죄예방	서독 우월	13	서독 우월	4
	동독 우월	62	동독 우월	88
남녀평등	서독 우월	10	서독 우월	3
	동독 우월	67	동독 우월	87
학문과 기술	서독 우월	87	서독 우월	63
	동독 우월	2	동독 우월	6
사회보장	서독 우월	16	서독 우월	3
	동독 우월	65	동독 우월	92
학교교육	서독 우월	36	서독 우월	11
	동독 우월	28	동독 우월	64
직업교육	서독 우월	36	서독 우월	12
	동독 우월	33	동독 우월	70
건강, 의료제도	서독 우월	65	서독 우월	23
	동독 우월	18	동독 우월	57
주거문제	서독 우월	34	서독 우월	21
	동독 우월	27	동독 우월	53

※ 출처: Spiegel, 27/1995, 45.

다) 독일 학생들의 국가관

구 서독 학생들은 통일 전후 국가관에서 큰 변화를 찾기 힘들다. 자신들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구 동독 학생들은 통일 초기 통일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으나, 점차 독일인이라는 의식 보다는 구 동독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년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 조사에 의하면,⁴³⁾ 약 83%의 학생들이 자신을 독일 국민으로 의식하였다(그 가운데 42%는 무조건적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통일 독일 국민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1992년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통일 독일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는 학생의 비율은 약 5% 정도 감소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상당수 학생들이 통일 독일 국민의식과 구 동독 국민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73%의 학생들이 자신을 독일국민이라는 점과 구 동독 국민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에 비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구 동독 국민이라고 본 학생들은 13%에서 34%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점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해당된다. 국가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1990년에 45%의 동독인이 통일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994년에는 28%로 줄어들었다. 반면 1990년에 61%의 구 동독인이 동독인이라기보다는 통일 독일인으로 의식하였으나, 199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1993, 1994년에도 그 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 독일 국민의식은 줄고, 동독 국민의식은 늘어난 것이다.⁴⁴⁾

통일 후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불안 요인과, 통일 과정에 대한 불만과 구 서독인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 동독에 대한 향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3) *ibid.*, 25.

44) I. Spittmann, "Fünf Jahre danach - Wi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3.

한편, 극우주의에 가까운 국가주의(Nationalism)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은 전체 가운데 약 12-15%에 해당되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좌익보다는 우익 성향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국가주의 성향을 보다 많이 나타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인 태도는 통일 전인 1989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급격히 증가하여 1992/93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1992년과 1994년을 비교하면, 약 40-50% 가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이후에는 다시 1989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극우주의인 국가사회주의(나찌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에 24%에서 1994년에는 16%로 감소했다.

동서독 학생을 비교해보면, 국가주의적인 성향은 구 서독 학생들보다는 구 동독 학생들이 강했다. 1992년 “독일 국민인 사실이 자랑스럽다”라는 대답에 21%의 서독 학생들이 ‘대단히 그렇다’ 라고 대답한 반면, 구동독 학생들은 25%에 달했다. 반면, 유럽통합에 대한 찬성에서 52%의 서독 학생들이 찬성한 반면, 구 동독 학생들은 31%만이 찬성했다.

라) 동서독 학생들의 의식 비교

통일 이후 구 동독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구 동독 학생들은 통일 초기 통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구 동독의 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서독식의 새로운 체제에 자신을 동일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통일의 진행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동서독의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통일 자체에 대하여 점차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국민의식과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사고 역시 점차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찬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통일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통일 초기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등 혹독한 통일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 구 서독 지역 학생들은 통일 전후 그다지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통일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특

별히 적응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관련 의식에 있어서 통일 전후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

2)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

통일 전 동·서독인들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이질성은 동·서독인들의 내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낳았다. 더불어 통일 후 제기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은 정신적인 충격, 개인적 실망, 상호불신 등을 낳았다. 특히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통일 초기에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 동독의 청소년들은 1970, 80년대 서로 다른 세 가지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았다. 즉, 그들은 공적인 생활,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그리고 TV에 비취진 서구 세계를 경험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동독 체제에 의례적 행위로서 순응하며 살았지만, 내적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세계를 TV로 접했다고 해서, 그들이 민주사회의 다원적인 가치와, 행동방식, 의사표현 등에 익숙해진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사고와 행동은 그들의 교육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독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독자성과 비판능력을 강조하였다면, 구 동독 부모들은 순종, 질서, 명예 같은 것들을 덕목으로 가르쳤다.⁴⁵⁾

가치와 행동에서의 이중성은 구 동독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구 동독 시민운동가 클리어(Klier)는 말하기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키워졌다.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비참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환영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⁴⁶⁾ 가르치는 것과 실제적 생활의 괴리와 모순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45) D. Sturzbecher, K. Kalb, “Elterliche Erziehungsziele in der ehemaligen DDR und der alten Bundesrepublik”,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0(1993), 143-147.

46) K. Freya, *Lüg Vaterland*, München, 1990.

전도하고, 이중적인 삶을 강요하고, 정신분열증 환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그들에게 구 서독의 청소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통일에 지나친 기대를 걸게 된 것도 구 동독 시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통일 이후 서독의 것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서독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꿈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구 동독 학교는 구 서독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 동독의 학교는 철저히 학습학교(Lernschule)로서 교사가 전달한 지식을 학생들은 단지 복습하는 것에 열중하였다. 반면, 독자적인 작업수행과 의사소통 능력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교육방법 면에서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교화와 훈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교육 통제는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낳았다. 교사중심-강의중심의 수업 아래서 학생들은 복종심을 함양하고, 엄격히 훈육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결여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되었다. 때문에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율적-아동중심적 수업에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⁴⁷⁾ 학생들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일부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학생들의 폭력은 가치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 내 집단주의적인 가치관 소멸과, 과도한 학업 성취 능력의 요구, 학교에서의 자유시간의 철폐 등에서, 즉 새로운 학교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데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교사들도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수많은 과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제공하는 지식에 대한 깊은 불신이 학생들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단지 소수의 교사들만이 수업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학생들

47) F. Pöggeler,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1992, 17.

48) M. Papst, D. Schuster,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35.

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구 동독 학생들은 통일 후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확신하였던 가치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르쳐졌던 이념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 이전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존속하였던 체제가 영구히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 동독 학생들의 부적응 표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능하면 신속히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할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좌절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면서 학생들은 점차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1993년 드레스덴(Dresden) 공과대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2.3%의 대학생들이 구 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독일사회당(PDS)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이러한 회귀현상은 열등학생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을 찬성하지만, 여전히 40-60%에 달하는 상당수의 구 동독 학생들이 구 동독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고 조사되었다.⁴⁹⁾

셋째,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좌절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으로 인한 폭력성은 구 동독의 학생들이 구 서독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49)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1993, 4.

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51.9%의 청소년들이 폭력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⁵⁰⁾ 구 동독 학생들의 폭력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로 향하였다. 1992년에는 단지 2.2%만이 외국인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반면, 1993년에는 외국인 적대감이 훨씬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성과 외국인 적대감정은 극우주의 성향의 표현이다. 비록 조직적이거나 이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구 서독 학생들에 비해 극우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다.

1990년 통일 직후 대부분의 구 동독 학생들은 분명 적응 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방향상실감, 행동의 불안정, 적대감, 편견, 공격성과 폭력 등으로 부적응이 표출되었다. 특별히 1992/93년은 외국인 적대감, 극우주의 등 수많은 부정적인 양상이 강하게 표출된 해였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높은 실업률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극우주의 같은 현상들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이점은 구 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점차 잘 적응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특별히 이점은 구 동독의 학생들이 구 서독의 학생들보다 폭력적이고, 외국인에 적대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은 변혁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듯이, 1992년에는 약 42%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졌으나, 1994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반면, 1992년에는 17%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졌으나, 1994년에는 28%로 증가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호적이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과의 우호적인 접촉도 1992년 20%에서 1994년에는 38%로 높아졌다. 더불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도 1992년 17%에서 1994년에는 12%로 감소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점차 다양한 의견을 소유하게 되었다.

50) L. Böhnisch, u.a., *Gesellschaftsstudie*, Dresden, 1992., 27.

3)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부적응 및 갈등의 원인

가) 이해의 차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에서의 성장은 동서독 학생들의 가치관의 차이 뿐 아니라, 동일 대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권리와 특성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1992년의 조사를 보면, 동서독 학생들의 이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구 서독의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자유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면, 구 동독의 학생들은 평등권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대답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점은 동일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상이한 이해가 의사소통의 문제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따라서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II-12> 동서독 학생의 민주주의 이해

(단위 : %)

	구 분	서독	동독	전체
자유권	의사표현의 자유	93.7	95.8	94.7
	자유 선거	92.7	96.6	94.5
	여행의 자유	77.5	68.5	73.4
	자유 경제 질서	59.5	58.4	59.0
	소수 보호	63.0	50.8	57.4
평등권	법 앞의 평등	88.6	84.7	86.8
	교육기회의 균등	76.8	87.0	81.5
	남녀 평등	82.1	84.9	83.4
	근로권	74.4	86.7	80.1
	국가의 의료 보장	73.1	77.7	74.2

※ 출처: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85.

또 하나의 사례로 1993년에 렌쯔(Lenz)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서독 학생들 상호간의 이해의 차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옛 동독 생활에서 “사회적 확실성이 크다”라는 질문에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은 84.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서독학생들은 47.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시각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밖의 문항에서도 동서독 학생들의 이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표 II-13> 동서독 학생의 구 동독 생활에 대한 이해

(단위 : %)

구 분	서독	동독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34.5	60.5
활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63.2	31.8
인생이 지루하다	29.6	15.3
감시가 심하다	77.2	66.4
사회적 확실성이 크다	47.6	84.2
자신의 창의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53.5	43.3
자신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안다	24.5	53.8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	53.0	65.2
질투와 경쟁이 없다	26.4	30.7
너무 통제되었다	87.3	67.1
순응하는 사람은 잘 산다	72.5	79.2
서로 서로 돕는다	41.0	58.3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70.1	66.7
정치가를 믿지 않는다	55.9	56.9
청소년에게 좋은 사회다	40.0	59.4
자신이 감금되었다고 느낀다	76.4	53.0
성인에게 좋은 사회가 아니다	32.4	44.8

※ 출처: Lenz, 1993, 24.

나) 생활수준의 차이

통일 이후 양 지역의 경제적 차이와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양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구 동독 국민들이 독일의 통일을 찬성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신들도 서독인들과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행의 자유,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선거 등 서독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을 몸소 체험하였지만, 그들의 보다 중요한 관심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경제적 부가 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게 되자, 동서독의 경제적 평등 문제는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다. 1995년 구 동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통일 이후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 서독 지역 근로자의 74% 수준에 있었고, 실업률은 구 서독 지역이 8.3%인데 반해, 구 동독 지역은 14%에 달하였다.⁵¹⁾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불균형은 서독 시민을 “1등 국민”으로, 동독 시민들을 “2등 국민”으로 나누고, 서로 멸시하고 미워하도록 이끌어, 동서독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통일이 된 지 5년이 지난 후인 1996년의 조사에서도 구 동독 주민의 3이 여전히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1993년 Die Zeit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서독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동·서독인들 간의 의사소통의 근본적 장애요인이다”라는 물음에 77%의 구 동독 주민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⁵³⁾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동서독의 생활수준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주요 원인과 책임을, 서독 지역 주민들은 구 동독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통일 파생 문제점으로 보는 반면,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그 책임을 서독 주민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뚜렷한 시각의 차이이다.⁵⁴⁾

51) Weidenfeld, W., Korte, K.-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1996, 781f.

52) *ibid.*, 253.

53) 통일원, 「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 1994, 300.

54) Weidenfeld, W., Korte, K.-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1996, 392.

다) 성격과 기질의 차이

동서독 주민들과 학생들의 가치관, 행동방식, 생활습관을 규정하는 특성과 기질 역시 양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4년의 동·서독인들의 특성에 대한 자기 평가에 의하면, 동·서독인들의 차이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⁵⁵⁾ 분단 이후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성장한 두 국민들은 특성과 기질에서 예상대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14> 동서독 주민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

구 분	동독인	서독인
인성 특징	<p>사회성이 뛰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입장을 고려함 협동심이 강함 친근하고 사교적임 타인을 걱정함 	<p>개인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음 협동심이 약함 사교적이지 못함 타인의 일로 걱정하지 않음
자존감	<p>“겸손한 동독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스스로를 자주 비난함 자신에 대해 불만족함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비해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낌 자신의 작업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함 	<p>“거만함 서독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 대해 거의 비난하지 않음 자신에 대해 만족함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비해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음 성취지향적이고 자신의 작업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음
성격 및 태도	<p>연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함 자신의 감정상태를 잘 통제하지 못함 자신의 내적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함 억압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가짐 	<p>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 요인에 별로 민감하지 않음 자신의 감정상태를 잘 통제함 자신의 내적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음 억압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갖지 않음
자기 평가	<p>훈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이고 정돈된 생활 방식 노력을 많이 함 돈 관리를 잘함 	<p>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분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품행이 방정하지 못함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함

※ 출처: E. Brähler, H.-E. Richter, 1995, 15-16.

55) E. Brähler, H.-E. Richter, “Deutsche Befin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0-41/1995, 13-20.

나. 통일교육의 필요성

1989년 구 동독의 붕괴는 민주주의, 인권, 다원주의, 법치국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 정치적 구조는 해체되었고, 경제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여러 사회적인 제도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불어 독일과 유럽의 통합과정, 소련의 붕괴, 전세계에서의 독립운동 등 국제정치적인 변화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통일과정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상황에서 학생들은 적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구 동독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 그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많은 경우 혼자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부모나 교사 등 기성세대 역시 가치 혼란과 방향 상실 등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 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 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반 파시즘 요법”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극우주의 성향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 동독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정권이 나찌 시대의 파시즘 정권에 대항하여 반 파시즘을 강조하면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구 동독의 반파시즘 정책과 혼동하게 하였고, 따라서 파시즘 개념이 구 동독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적응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 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적이고 다원주의 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주 과제가 되었다.

통일 후 독일의 통일교육은 모든 주에서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실시되었다. 구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와 이념교육은 폐지되었다. 각 주는 고유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 전인 1978년 주 문교부장관회의에서 만들었던 통일교육기본지침은 통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주에서 만든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과서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의 통일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교육의 권한이 주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 역시 주 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대표적인 주를 선택하며 살펴보면, 통일 후의 구 동독 지역의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 동독 지역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를 사례로 통일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⁵⁶⁾ 브란덴부르크 주는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6개 주를 선도하는 주로서 인정받고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 아래 수행하였다.

다. 통일교육의 목적

브란덴부르크 주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적인 의견

56)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Hrsg.), *Vorläufige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ische Bildung*, Potsdam, 1994.

형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관용, 책임성, 비판능력, 타인의 개인성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념적인 교화를 배제한다. “정치교육”은 단순한 민주사회에 대한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원칙, 인권, 계몽이념을 지향한다. “정치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복잡한 세계를 파악하고, 사물관련지식과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과정이다. 지식과 인식의 전수는 한편으로는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관용, 협동, 결속력, 갈등해결 등의 사회적 행동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이다.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의 함양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 요소이다.

정치교육의 목적을 교수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 능력, 자질, 통찰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지배관계의 의미, 목적, 필요성, 강요 등을 묻고, 그 안에 숨겨진 이해와 규범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지배관계 및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묻고, 이해하고, 이용하고, 만들어 가는 능력과 의지
- 대화와 의사소통이 민주사회, 민주정치, 민주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아는 것
- 정치적인 대안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립을 해결하고, 상이한 집단에서 함께 일하고, 그와 관계되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능력과 자세

- 자아실현, 자율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회적인 책임 아래서 계획하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이해를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해를 인식하고 때로는 그것에 우선권을 두는 능력과 의지
- 다른 사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는 능력과 자세
- 개인적으로 또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능력과 자세
- 노동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존립근거요 자아실현과 정치적인 참여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작업세계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참여하려는 자세와 능력

라. 통일교육의 내용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의 학습영역은 4가지로 구성된다: 사회 - 경제 - 민주주의 - 하나의 세계. 이 네 가지 영역은 정치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조직체계가 된다. 위 네 영역은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 아래 있다.

1) 학습영역 : 사회

위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조와 사회 변혁이 사회문제를 다루는 배경이 된다. 이 영역의 주요 내용들로는 계층과 계급, 사회화와 개인화, 규범과 가치, 집단과 제도, 정치 문화, 성(性)과 세대, 변혁 상황에서의 동일성 발견, 정치사회화, 민주주의 학습 등이 해당된다.

2) 학습영역 : 경제

이 영역에서는 특별히 경제 행위의 구조와 과정이 중심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정책, 경기정책, 분배정책, 경쟁적 경제체제, 기술정책과 환경정책, 직업세계와 작업세계 등이다.

3) 학습영역 : 민주주의

이 영역에서는 정치체제의 국내적 질서, 정치참여의 과정이 중점을 이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헌법, 정치적인 의지 형성, 민주적인 참여와 영향력 행사, 이념과 지배관계, 민주적인 체제와 권위적인 체제 등이다.

4) 학습영역 : 하나의 세계

이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국외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화와 안전정책, 독일과 유럽, 동서 갈등의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 세계경제질서, 문화적인 다양성 등이다.

위 과제영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위에서 제시한 교육목표 외에도 “사회적인 핵심문제(gesellschaftliches Schlüsselproblem)”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문제”들로는

- 전쟁, 평화, 평화보장(시민전쟁, 무기감축, 무장감시, 제 3세계, 민족이해 등)
- 자연적인 삶의 기초에 대한 안전보장(삶의 기초 파괴, 이해관계 갈등, 생태적으로 책임지는 경제질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경제적 이해와 사회적·생태적 결과의 간극 차이, 하나의 세계로서의 여러 사회에 대한 이해)
- 여러 상이한 문화와 민족의 더불어 사는 삶(복합문화적인 사회, 극우주의, 극좌주의, 인간화, 인권, 관용), 사회와 사회적인 집단의 존립과 동일성 상실(변혁 상황의 사회적 영향, 민주적인 착점의 성립)

-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결정과정의 점진적인 복잡성과 권력구조 문제(민주적인 결정, 민주적인 통제, 민주주의 학습)
- 정보 독점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정치적 통제(정보공학과 대중매체로 인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동일성의 위태)
-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자본주의 건설, 노동과 소외, 효율성과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책임

마.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는 통일교육 교육과정 안에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방법적 원칙은 정치교육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구 동독에서 사용되었던 교화 중심의 방법은 지양되고, 구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활용되었던 방법적 원칙들이 수용되어 제안되고 있다.

1) 학생 지향성과 생활 지향성

학생 지향적이고 생활 지향적인 원칙이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과 관심을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문제, 갈등을 주제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이 수업의 계획과 진행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위지향성

행위지향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와 행위, 직접적인 경험이 여기서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독자적인 관찰, 비교, 탐구, 구상, 시도, 실험, 기록, 독자적 표현, 숙고, 변화, 생산 등의

행동이 수업시간에 기대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3) 문제지향성

문제지향성의 원칙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 의해 규정된 문제들이다. 문제지향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과 사실을 되묻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고, 관련성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것에 따라 시도해보게 하고,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것과 논쟁하도록 고무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제지향적인 과제 설정은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사고와 작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은 문제를 제시하고, 논점과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절제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것에 국한된다.

4) 상충성과 다면성

상충성과 다면성의 원칙은 어떤 대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타협과 의견일치와 다른 의견에 대해 존중(관용)하는 자세를 촉진시킨다. 여기서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상충되는 여러 관점들과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이다.

5) 범례적 학습

범례적 학습 원칙은 수많은 교육내용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사례로 뽑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유사한 경우의 문제들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범례적 학습은 동시에 문제중심적이고 학생중심적인 측면들 가운데 중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업에서의 상호협력 원칙

수업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들은 상호 협력적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여기에는 상호 비판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신뢰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의 형성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바. 통일교육 수업 방법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은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이끌어 내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는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보다 주안점이 주어진다. 점에서, 여타의 교과들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1) 토론

토론, 논쟁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인내력, 의사표현력을 키워주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화는 민주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중요하다.

2) 문제연구

어떤 주제나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있어서 문제연구는 효과적이다. 문제제기, 가설설정, 정보수집, 자료분석, 가설 검증, 대안적 해결방법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3) 사례연구

문제연구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형태가 사례 연구이다. 현대사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사례나,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사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연구방법은 학생들의 뛰어난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요구한다.

4)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수업, 개별적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간 등의 여러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방법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한 문제 설정,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계획,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작업, 결과의 검증.

위에서 제시된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들은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주의 학교통일교육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서독식의 학생이 중심이 되고, 토론이 중심이 되고, 프로젝트나 사례 수업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은 처음에는 매우 낯선 것으로 여겨졌다. 교사들 역시 새로운 교육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동독 지역에도 점차 확산되고 토론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교사들의 재교육과 점진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위에서 제시된 교육방법들이 새로운 통일교육방법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 외에도 교사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자유롭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각자 개발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통일교육과정기본계획안

브란덴부르크 주는 위와 같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⁵⁷⁾ 기본계획안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15>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학년	사회	경제	민주주의	하나의 세계
7/8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집단 ·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 오쎬스-베쎬스 · 여가 이용 · 중독의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와 광고 · 소비행태 · 일자리와 실직 · 사회보장제도 · 노동단체 · 독일통일의 경제적 결과 · 교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과 참여사이의 학교 · 법치국가의 특징 ·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 · 구 동독 체제의 목표와 현실 ·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 · 시민과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과 저개발의 문제점 · 자연의 착취 · 환경보존을 위한 세계 협력의 필요성 · 유럽통합의 문제
9/10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선택 · 공동체적 삶 · 중독과 마약 · 구 동독의 구조변혁 · 인권으로서의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사회의 생태적 구조변화 · 동독 경제적 변혁의 문제점 · 사회적 시장경제 · 노동시장 · 작업세계에서의 이해관계와 갈등 · 생태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의 갈등 · 정치선거 · 극단주의와 폭력 · 통일 이후 시민운동의 역할 · 대중매체의 영향 · 국가적 권력구조의 형태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장 정책 · 유럽통합과정의 문제점 · 전세계적 상호협력의 가능성과 난점 · 부국과 빈국사이 문제의 상호관련성
11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과 서독에서의 사회화 · 외국인적대감과 극우주의 · 청소년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소비행태 ·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일자리 · 브란덴부르크 주 산업화와 구조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권력으로서 대중매체 · 민주주의 모델 비교 · 미래의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의 변증법 ·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 종교
12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 교육제도와 기회균등 · 소수민족의 존립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경제정책 · 선진산업사회의 생태적 구조변화 · 석탄과 기타 에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와 시민운동 · 학교법, 지방법, 기본법 · 통일조약과 그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대결의 종료와 국가주의 추세의 강화 · 제 3세계 · 세계문제 해결에서 첨단기술의 역할
13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정책 · 나찌시대의 인종정책 ·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여성노동자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 20세기 경제발전과 과학 · 개인과 국가의 경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시즘과 사회주의 비교 · 바이마르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비교 · 1945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위기와 냉전 · 동유럽의 역사와 후기사회주의의 미래 · 아프리카의 역사

57)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4를 참조하기 바람

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서독지역의 정치교육과정의 기본 형태가 도입되어 동독지역의 정치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육 전반에 걸쳐 서독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점은 정치교육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은 서독지역의 정치교육(통일교육)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구 동독에서 행해졌던 이데올로기 교육은 완전히 사라졌다. 둘째, 통일교육이 정치교육의 형태를 띠면서 그 목적 역시 민주적 사고와 태도의 형성 등 민주시민교육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통일 이후의 문제점, 예를 들어, 동서독간의 차이, 동독 지역의 상황 등의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통일 직후 사회문제가 되었던 동서독의 의식의 갈등과 구 동독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부적응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 그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결여와 적절한 대책의 부재는 결국 통일 11년이 지나도 의식 통합 문제 등 통일후유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은 스스로를 “잠정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구 동독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통일교육과정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아. 통일교육 담당 교원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의 각 주는 서독식의 교육제도와 함께 교원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서독식의 교원임용제도는 다단계로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원 지망생들은 4-5년간의 대학학업을 마치면, 1차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하고, 그것에 합격하면 2년간의 교원연수과정을 거치

고, 그것을 통해 교수능력이 검증되면 2차 교원임용고사를 치러 최종 합격하면 교원으로 발령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교원지방생이 교원이 되려면 최소한 7-8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구 동독 지역의 각 주는 정치교육과 같이 이념적인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는 새로운 교원임용제도에 따라 교육과 연수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구 동독 시절 “국가시민” 교과는 서독식의 “정치교육” 교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학생들은 “국가시민” 교과 담당 교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사 양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구 동독 지역의 각 주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정치교육” 교과는 1991/92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992/93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상급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치교육” 교과를 가르칠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정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교사부족,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자질 부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잠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실행되었다. 첫째로, “정치교육” 교과 교사는 처음에 모두 타 전공 교사들에 의해 잠정적인 수업 허가 아래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교사들은 성격상 이념시비를 받는 주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일부는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연구소에서 3년간의 추가 교육을 받았다. 셋째, 일부 교사들은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2년간의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넷째, 또 다른 부류의 교사들은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연구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교사 재교육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는 물론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통일문제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구 동독의 이념교육에 질린 상황에서, 새로운 이념교육인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조차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념교육과 같이 가치가 개입된 교과를 교사들이 신념을 갖고 가르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쿤젤(W. Künzel) 박사는 구 동독지역에서 정치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성장배경 및 동독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⁵⁸⁾

4. 통일 전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비교

가. 통일전 동서독 학교통일교육 비교

1) 학교통일교육정책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행하였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동방정책 이전에는 서독체제에 대한 우월감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동방정책 이후에는 동독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매개하고, 양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평화와 민주, 자결의 이념 아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어 넣어 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독은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반면, 동독 통일교육의 기본 정책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그 이념의 현실대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58) 구 동독 출신 쿤젤 박사와의 면담은 2000년 5월 17일 포츠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본부에서 개최됨

2)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서독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동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동독 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서독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비교,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반면, 동독에서는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정,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등을 주 내용으로 가르쳤다.

4)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비교,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양 체제를 비교하고, 어떤 체제가 우월하고 통일 후 어떤 체제를 지향하여야 하는 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

라서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토론 수업이 강조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방적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교화(Indoktrination)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비록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방법으로서 논쟁과 증명 등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을 체득하는 것에 모아졌다.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판단과 입장을 강조하였던 서독의 교육방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중 인격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생각과, 내면적인 진실된 생각이 서로 다른 이중적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5) 학교통일교육의 특징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분단 직후에는 상대방의 체제를 비난하거나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 동방정책과 함께 냉전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통일관련 교육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학생들에게 매개하는 교육이 강조되는 변화를 맞게 된다. 그리고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이 올 것을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독은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통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 점은 통일 이후 여러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통일 이후의 평화공존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의 모습이 서독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동독에서는 분단 이후 구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되게 체제를 옹호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제국주의로 몰아 세워 후진성과 문제점을 강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세뇌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 이러한 교육은 민주적인 방식의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구 동독의 정치

-이념 교육은 사실상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독의 교육에서보다는 동서독 관련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나. 통일전후 독일 학교통일교육 비교

1) 통일전후 서독 학교통일교육

독일 통일은 구 동독의 붕괴와 함께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동독이 편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통일 전후 서독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 반면, 구 동독 지역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모든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독 지역의 통일교육 역시 통일 전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통일 이전과 같이 통일 이후에도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통일교육의 비중 역시 구 서독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통일 이전에는 동독 체제와 통일정책을 가르치고 통일의식과 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통일문제(갈등 및 후유증)와 국민통합이 주요 주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2) 통일전후 동독 학교통일교육

반면, 구 동독 지역의 통일교육은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르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뒤바뀐 것이다. 사회주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로 뒤바뀌었다. 이제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형태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동서독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통일은 서독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전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동독 지역 학생들에게는 자기부정 및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 요인 때문에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서독식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통일 초기 학생들의 부적응과 폭력문제를 초래하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구 동독이 붕괴된 직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이 만약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구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신속히 전개되면서, 구 동독의 교육정책가들은 시간을 두고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서독식 교육과정을 수용하는데 급급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상황에 적합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통일 11년이 지난 오늘 통일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기초로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Ⅲ.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

-
1.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2.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3.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4.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
교육 비교
-

Ⅲ. 통일 전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

통일 전 독일의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본 장에서는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제도와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다.

1.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 개요

사회통일교육은 성장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말한다. 기성세대는 이미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통일교육은 성인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차원에서 폭 넓게 이루어졌다. 원래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나찌즘(Nazism)을 극복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것이 제 1,2차 세계대전과 나찌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서독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952년 내무성 장관령으로 “향토 봉사를 위한 연방본부(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를 설치하였다. 1963년에는 명칭을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로 바꾸고, 66년 9월에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통일 전 서독에서의 사회통일교육은 정치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연방정치교

육본부는 관련기관인 11개의 주 정치교육본부(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함께 통일교육을 주도해 나갔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 내무성 산하 기관이지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었으며, 그 기능상 성인 정치교육기관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다. 11개의 주 정치교육본부와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 및 지원하였다. 전독연구소도 내독성 산하기관으로서 통일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정치교육 재단과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들 역시 사회통일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경제교육, 사회교육, 법교육, 국제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바탕에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일교육의 주 목적이었다. 주요 통일교육내용으로는 동독에 대한 이해, 동서독 체제 비교, 동구권과 서유럽의 갈등, 국제정세 등이었다. 교육방법면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주된 방법이었다.

나. 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더불어 정당의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등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독일 4대 정당의 정치교육 재단, 그리고 내독성(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내독성⁵⁹⁾의 주요 과제는 독일정책을 입안하고, 독일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지만, 통일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내독성의 통일교육은 산하 기관인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와 함께 수행하였다.

59) 독일문제와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1949년에 설립되었다.

<표 III-1> 서독의 주요 사회통일교육기관

주요 통일교육 담당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방정치교육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본부 ○바이에른 주 정치교육본부 ○베를린 주 정치교육본부 ○브레멘 주 정치교육본부 ○함부르크 주 정치교육본부 ○헤센 주 정치교육본부 ○니더작센 주 정치교육본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치교육본부 ○라인란트-팔츠 주 정치교육본부 ○잘란트 주 정치교육본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정치교육본부
내독성	○전독연구소
정당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스-자이텔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개신교 정치교육기관
	○카톨릭 정치교육기관
	○경제단체 정치교육기관
	○정치관련 연구소
	○기타 각종 정치교육 단체

1) 연방정치교육본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서독 국민의 정신에 민주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으로 1952년에 발족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목적은 독일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설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었던 테마를 정치

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1950년대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기능이 핵심 주제이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독일 역사에 대한 회고, 특히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계몽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학생 운동 등 사회적인 변혁이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당시 주요 사회적 관심사였던 경제문제, 동방정책, 테러리즘이 핵심 사업이 되었고, 더불어 정치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개발이 핵심 테마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그리고 사회운동이 핵심주제가 되었다.

2) 내독성과 전독연구소(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내독성은 독일통일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1) 독일 민족의 통합에 기여하고, 2) 독일 국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3) 동서독 관계를 강화하고, 3) 연방정부의 독일정책과 관련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⁶⁰⁾ 내독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내독성이 수행한 주요 업무로는 정치교육 연수 및 세미나 프로그램 지원, 사설정치교육기관의 정치교육 지원, 동독여행 정보 제공 및 지원, 정치교육 간행물 발간, 정치교육 영화 제작 지원,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하였다.

전독연구소는 내독성의 산하기관으로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과, 정치교육과 관련해서 독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전독연구소는 1985년에 247명의 직원이 있었다.⁶¹⁾ 전독연구소는 1) 행정 및 통일사업지원본부, 2) 독일정책 자료 정리 및 분석 본부, 3) 정치교육 및 정보 본부, 4) 홍보출판 및 지원본부 등 네 부서를 갖고 있었다.

60)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bericht 1985*, Bonn, 1986, 4.

61) *ibid.*, 61.

전독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당시 동독과 관련한 최대 도서관으로서 140,000여권의 서적과, 24,000권 이상의 잡지와 신문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년 수만명의 방문객(학자, 언론인, 교사 등)이 동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독연구소는 자체 연수 및 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통일교육관련 정보를 학교 등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사설정치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다.

전독연구소는 통일 직후인 1991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1992년에는 해체되어 이 가운데 정치교육 분야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 편입되었다.

3)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은 사회민주당(SPD)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에베르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1)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2) 유능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국제 이해와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많은 정치교육 행사와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유망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정치교육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다.

4)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 Stiftung)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은 기독교민주당(CD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서독 초대 대통령인 콘라드-아데나우어의 이름을 따서 1956년 설립되었다. 평화, 자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치교육 행사와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정치교육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5)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 Stiftung)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FDP)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자유민주당을 창당한 프리드리히-나우만의 이름을 따서 재단이 설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이었다.

6) 한스-자이델 재단(Hans-Seidel Stiftung)

한스-자이델 재단은 독일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1966년 기독교사회당수인 한스-자이델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다. 기독교적인 기초 하에 민주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과 장학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7) 기타 사설 정치교육기관

정치교육본부, 내독성 및 전독연구소, 정당의 정치재단 외에도 서독에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설 정치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였다. 민주사회의 원리 아래 교회, 직능단체, 대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 등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서독 연방정부는 이러한 사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전독연구소의 주관 아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8) 정치교육기관들의 관계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기관은 설립형태별로 그리고 재원의 출처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정당의 재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민간기관으로서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세 가지 형태는 근본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위 정치교육 기관들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첫째, 서독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을 공유하였다. 둘째, 동서독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매개로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독일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운영이 유사하였다.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들로 해서, 서독 정부는 서독 내의 모든 정치교육기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임무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에 부여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경우 1985년 한 해 동안 총 95개 기관, 2,400회의 연수 또는 세미나를 지원하였고, 7,173,000마르크(한화 35억원)를 지출하였다. 전독연구소는 1985년 한 해 동안 1,060개의 연수 또는 세미나와 32,000명의 참가자를 지원하였다. 많은 소규모 정치교육기관은 이러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전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독 내의 정치교육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필요시 공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관련기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나갔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주도한 기관은 물론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이다.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인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 모두 정치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보다 정치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전독연구소는 보다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 전 독일의 최대 과제가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중심적인 기관이었으나, 통일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전독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 정치교육본부의 관계는 독립·협력·지원 원칙이 적용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이었지만, 주 정부교육본부는 주 정부의 직속기관이었다. 따라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각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어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정치교육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주 정치교육본부는 관련 자료로 지원하였다. 일년에 2회에 걸친 정기 회합에서 연방 정치교육본부장과 주 정치교육본부장은 국가 정치교육의 주요 사업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 전 서독에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포괄적이었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연수프로그램과 간행물 발간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서는 통일 전 서독 사회통일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전독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통일 전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별히 독일 분단 40주년이 되는 1985년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방정치교육본부⁶²⁾

가) 정기간행물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간행물 발간 사업이었다. 간행물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로 나눌 수 있다.

(1) 정기간행물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는 주간신문인 “국회(Das Parlament)”, “국회”의 부록인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85*, Bonn, 1986.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 “확대경(Zeitlupe)”,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e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이 있었다.

시사주간신문인 “국회(Das Parlament)”는 1952년부터 발간되었다. “국회”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그리고 유럽의회의 토론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치현안의 배경설명, 인터뷰, 찬반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을 유도하였다. “국회”는 중등학교, 대학교, 청소년조직, 교회, 병원 등에 배포하였다.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는 “국회”의 부록으로 발간되는 잡지로서, 전문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 잡지의 목적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판단을 돕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85년에는 매 번 평균 106,000권이 발간되어 배포되었다. 독자들은 주로 정치에 관한 정보잡지(63%), 학교교육 자료(32%), 학교 외 정치교육자료(19%), 학문적 작업(14%) 등에서 활용하였다.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된 1952년부터 발간되었는데, 1년에 4회 발간되는 계간지이다. 1회에 약 1백만 권이 인쇄된다.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1985년에는 독일의 역사, 독일문제, 동독, 동서독 비교, 안보정책, 국제정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이 간행물은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 때문에 학교 정치교육과정에 있는 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1985년에는 1,050,000권이 발간되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서독 전역의 학교, 정치교육기관, 기업체, 공공사업장 등에 배포되었다.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역시 1년에 4번 발간되는 계간지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별히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간행되었다. 1985년에는 매 번마다 600,000권이 발간되어 배포되었

다.

“확대경(Zeitlupe)”은 1975년부터 발간된 것으로 전기 중등학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다루는 사회과 교과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학교 외 정치교육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었다.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 발간되었는데, 1985년에는 매 회 평균 530,000부가 발간되며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었다.

(2) 도서 발간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도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매년 각종 도서들이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고 폭넓게 읽혀졌다.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되는 도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교육 시리즈 간행물이었다. 편집서, 핸드북 또는 모노그래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시리즈 간행물은 1985년까지 모두 230권이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일반 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 지식과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위 모노그래피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된다. 1) 역사와 정치연구(파란색 표지), 2) 정치교육 자료집(오렌지색 표지), 3) 정치교육 교수학 저서(초록색 표지). 위 모노그래피는 매 회 평균 10,000권에서 15,000권이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1970년부터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학교 외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자료 연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유관 정치교육기관 또는 성인교육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간행물로 출판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 보조자료(Arbeitshilfen für die politische Bildung)」를 비정기적으로 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일차적으로 대학생들의 세미나에서 또는 중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치교육 관련 기타 목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85년에는 정당의 재단, 독일개신교회협의회(EKD), 주 문교부장관회의(KMK)와 협력하여 자료집을 펴내었다.

(3) 팜플렛

일반도서 외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팜플렛으로 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쟁점(Kontrovers)”이라는 팜플렛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주 대상으로 다루었고, 1968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출판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고등학생과 일반 성인들이 주요 대상으로 기획 및 편집되었다.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교과 수업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기획되었다.

“주요현안(Themenhefte)”은 “국회”라는 정기간행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치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민 자료집이다. 1985년에는 매 회 20,000권이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이러한 간행물들은 정치교육 담당자, 교사, 연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나)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매 년 100건이 넘는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연수 프로그램(Fachtagungen)과 동서 지역담당지부 세미나 그리고 해외연수로 나누어진다.

(1) 전문연수 프로그램

먼저 전문연수 프로그램은 교원연수프로그램, 언론방송인 연수프로그램, 대학강사 연수프로그램, 사설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프로그램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전공영역과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정치교육 연수를 하는 것이다. 대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중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었다.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주 문교부장관회의(KMK), 각 주의 교육부, “서독 정치교육연합(DVpB)”, “서독 교원연수원”과 협의를 거쳤다.

언론방송인 연수프로그램은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보통 2박 3일의 일정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동안 45개의 연수 프로그램에 총 1100명의 언론방송인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강사 연수프로그램은 대학강사들의 전문적 소양과 정치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85년 한 해 동안 6개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사실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프로그램은 학교 외 정치교육기관에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치교육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세미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토론이 중심을 이루었다. 정치교육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2)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동방지역담당지부(Ostkolleg)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제는 주로 동독을 포함하여 동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유럽의 정치 현황,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세미나의 주목적이었다. 이를 통하여 동서유럽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독일 통일 전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것이었다. 동방지역담당지부는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동서 유럽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촉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1985년 한 해 동안 동방지역담당지부는 총 50개의 정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쟁점 주제는 “동서독 비교”, “국제정치”, “소련” 등이었다.

<표 III-2>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주제(1985년)

1985년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주제	
동독 및 동서독 비교	15건
국제정치 및 안보정책	10건
소련	9건
국가 비교	6건
마르크스-레닌주의	4건
중국	4건
국제공산주의	2건
	총 50건의 세미나

<표 III-3>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참석자 현황(1985년)

1985년 동방지역담당지부 세미나 참석자 현황	
고등학교 교사(김나지움과 직업학교)	32.4%
초등학교 및 중학교교사	15.2%
군인(장교)	11.9%
고위 행정관료	8.1%
대학생	7.9%
중간급 행정관료	5.8%
대학교수	3.7%
대학의 학술조교, 연구조교(시간강사 포함)	3.2%
성인교육기관 교·강사	3.1%
기타 직업	2.6%
언론인	1.8%
경제인	1.5%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1.4%
성직자	0.8%
정당과 단체의 임원	0.6%
합계	100%

(3) 해외연수 프로그램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주관하였던 해외연수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이스라엘 연수와 동방지역담당지부의 해외세미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963년부터 매년 실시된 이스라엘 연수는 독일의 정치사회적 대표자들과 일반인들로 단체가 구성되어 이스라엘로 정치교육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연수의 주요 주제는 이스라엘과 독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편견을 제거하고 이해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85년에는 176명이 이스라엘 연수에 참가하였다.

동방지역담당지부는 보통 1년에 1회씩 해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치교육

담당자들이 초대되어 주로 동유럽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교육, 언론의 주요 인사들과 대화 및 경험교환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발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다) 시청각 매체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시청각 매체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이 주요 매체로 활용되었다.

(1) 영화와 비디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영화를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였고, 동시에 영화산업을 정치교육적인 관점에서 뒷받침하였다. 매체 관련 전문서적 발간, 영화 세미나, 전문가와의 대화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영화 세미나는 영화관이 연방정치교육본부와 함께 영화 속 주제들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상업적인 영화들이 정치교육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영화 세미나에서는 여러 사회적인 관심 주제들, 예를 들면, “외국인”, “사회적 소외 그룹”, “권위”, “50년대” 등을 다루었다.

(2) TV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영화 외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TV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교육을 하였다. TV를 이용한 정치교육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에는 “미래사회”라는 TV 시리즈물을 제작하였는데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지원하였다. 이 시리즈물에서는 당시 서독 사회의 모습을 특징짓고 쟁점화 되었던 주제, 예를 들면 근로조건, 질병과 죽음, 환경파괴, 여가활동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문제해결 방법과 대안들을 암시하여 미래 서독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시리즈물은 나중에 학교 외 사회통일교육기관에서 시청각 매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더불어서 사회정치적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

는 공익광고 형태의 화면을 여섯 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라)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1970년부터 실시된 경연대회의 참가대상은 독일 전역의 학교에서 6-1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동아리, 특별활동그룹이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총 50,000개 학급의 1,500,000명의 학생들이 정치교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연구활동, 인터뷰, 예술활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였다. 학급 또는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준비를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작업과 팀정신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1985년에는 총 2,846 그룹의 85,000명이 정치교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III-4> 연방정치교육본부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참가 그룹(1985년)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참가 그룹		
주	1985년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316	11.10
바이에른 주	560	19.68
베를린 주	28	0.98
브레멘 주	23	0.81
함부르크 주	36	1.26
헤센 주	215	7.55
니더작센 주	388	13.6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946	33.24
라인란트-팔츠 주	192	6.75
잘란트 주	25	0.8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94	3.33
외국 주재 독일학생 그룹	23	0.81
총 계	2,846	100

마) 서비스 사업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각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비스 사업은 크게 문의 안내, 출판물 우송, 방문객 안내 등이 있었다.

(1) 문의 안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서독 정치교육의 본산으로서 매년 많은 국민들이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정치교육 출판물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서비스하였다.

(2) 출판물 우송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우송하는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1985년 한 해 동안 282,866건의 간행물이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3) 방문객 안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사전 예약을 통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방문객을 접대하고 안내하였다. 1985년 한 해 동안 50그룹이 본(Bonn)에 위치한 본부 건물을 방문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역사, 조직,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사전 예약 없이도 모든 국민은 연방정치교육본부 건물에 있는 전시 안내관에서 필요한 정보와 간행물을 얻을 수 있었다.

2) 내독성과 전독연구소⁶³⁾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마찬가지로 내독성과 전독연구소 역시 다양한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가) 통일교육 연수 및 세미나

내독성과 전독연구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일교육 연수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1985

6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bericht 1985*, Bonn, 1986.

년 한 해 동안 내독성은 3,080회의 행사에서 94,000명을 지원하였고, 전독연구소는 86회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였고, 1,060회의 행사에 31,500명을 지원하였다.

지원 받은 기관으로는 정당재단, 청소년 단체, 성인교육 담당기관, 아카데미, 연구소 등이었다. 이들 정치교육기관이 주최하는 통일교육 행사에는 주로 학생, 대학생, 교사, 학자, 군인, 근로자, 동독 및 외국에서의 이주자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문제는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독성은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별히 외국의 정치교육담당자들이 주요 목표 그룹이었다.

이들 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주제로는 동독, 동서독 관계, 동서독의 공통점, 독일문제의 국제적 관련성, 동서 대립, 사회주의 이념, 안보-평화정책, 환경보호,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체제 등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이 폭 넓게 다루어졌다.

나) 간행물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통일과 관련하여 매년 다양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보급하였다. 1985년에 출간된 주요 간행물로는 “동독 핸드북”, “독일정책 도큐먼트”, “독일정책 관련 텍스트”, “수치로 비교해 보는 동독과 서독”, “동독과 서독에 사는 우리들”(청소년 잡지), “통일 정보”(정기간행물) 등이다.

다) 동독 여행 정보 제공 및 지원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동독과 국경지역에 정보 획득 목적으로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1985년 한 해 동안 총 1,108회의 정보획득 여행, 289,340명의 청소년과 10,922명의 성인, 13회의 세미나, 2,180회의 스포츠인 여행을 지원하였다.

라) 영화 사업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학교통일교육과 사설정치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보급하였다. 1985년에 새로 제작된 영화

는 1) “민족의 통일은 우리의 의무이다”, 2) “이웃으로의 여행 - 동독국경 지역 방문”, 3) “국경폐쇄 - 동독 국경지역의 생활”, 4) “벽돌 건축물의 흔적 - 동독 해안 국경 지역” 등이다. 이를 포함하여 총 160편의 영화가 세미나, 연수, 학교교육 등에 활용되어 1,300,000명이 시청하였다.⁶⁴⁾ 위 영화는 전국 각지의 지정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1) 독일문제(독일역사, 독일분단), 2) 독일정책(동서독 관계, 베를린, 국경지역), 3) 동독(개관, 정체제도, 역사관, 일상생활, 동독여행) 등이다. 이 가운데 동독의 일상생활에 관한 영화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⁶⁵⁾

마) 전시회 개최

내독성과 전독연구소는 통일교육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1985년 한 해 동안 76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라. 사회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은 서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대학생, 교사, 학자, 군인, 근로자, 동독 및 외국에서의 이주자 등이 참가하였다. 특별히 학생, 교원, 공무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은 주요 목표그룹이 되었다. 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운영되었다. 여기서는 1984년 한 해 동안 독일의 여러 정치교육기관이 운영한 정치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통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 주관 : 부르크 리벤젤(Burg Liebenzell) 국제포럼

64) Gesamtdeutsches Institut -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Filmkatalog 1985 - Filme zur deutschen Frage*, Bonn, 1985.

65) 자세한 내용은 부록 7을 참조하기 바람

- 주제 : 독일의 정치·경제·사회
- 목적 : 공무원들에게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하여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함.
- 주요 내용
 -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
 - 국제관계, 유럽의 통합, 남북관계, 동서관계
 - 서독의 평화안보정책
 - 동독과 서독의 비교와 동서관계
- 참가자 : 행정 관료 및 군인 등 공무원
- 연수방법
 - 세미나(100%)

2) 교원 연수프로그램

- 주관 : 튀빙겐(Tübingen) 평화교육연구소
- 주제 :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 목적 : 학교 교원들에게 평화교육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 비폭력행위
 -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안보정책 구상
 - 평화교육 매체
- 참가자 : 학교 교원
- 연수방법
 - 세미나(40%)
 - 주제발표(40%)
 - 강연(20%)

3) 대학강사 연수프로그램

- 주관 : 만하임(Mannheim) 대학 동독 연구소
- 주제 : 동독의 역사와 발전과정
- 목적 :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젊은 학자들이 동독의 역사와 현재 체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동독의 역사
 - 동독의 발전과정
 - 동독 체제의 문제
- 참가자 : 대학에서 강의하는 신진 학자들
- 연수방법
 - 주제발표(80%)
 - 세미나(10%)
 - 강연(10%)

4) 통일교육 전문위원 연수프로그램

- 주관 : 국가와 사회 연구 재단
- 주제 : 동독과 서독의 관계
- 목적 : 독일 분단 상황을 이론적이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독일정책을 토론을 통해 모색함
- 주요 내용
 - 독일 분단의 총체적 문제
 - 동서관계와 동독과 서독의 관계
 - 독일정책
 - 동서독 체제 비교
 - 분단 현장 견학(동독 및 베를린)
- 참가자 : 사설 정치기관의 통일교육 담당 전문요원
- 연수방법
 - 주제발표(35%)
 - 세미나(40%)

- 강연(5%)
- 현장 견학(20%)

5) 학생 연수프로그램

- 주관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정치교육연구소
- 주제 : 동독과 서독의 체제 비교
- 목적 : 학생들에게 동독과 서독 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서독 체제를 비교하고 토론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동독과 서독의 정치제도 비교
 - 동서관계
 -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 국제정치와 평화보장
 -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독일현대사와 독일문제
- 참가자 : 학생과 청소년
- 연수방법
 - 세미나와 토론(100%)

6) 대학생 연수프로그램

- 주관 : 튀빙겐(Tübingen) 대학 평화연구소
- 주제 : 서독 정치
- 목적 : 대학생들이 동서갈등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평화적인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게 함
- 주요 내용
 - 동서관계
 - 동서관계에서의 평화정책 및 안보정책
 - 서독 외교정책 분석
 - 국제기구
- 참가자 : 대학생

- 연수방법
 - 주제발표(70%)
 - 세미나(30%)

7) 근로자 연수프로그램

- 주관 :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Freidrich-Ebert-Stiftung)
- 주제 : 서독 정치
- 목적 : 근로자들이 서독의 정치 및 정책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동서체제 비교
 - 서독과 동독의 체제 비교
 - 서독의 외교, 안보, 평화정책
 - 노동시장에 미치는 세계경제의 의미
 - 서독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 참가자 : 경제와 행정 분야의 근로자
- 연수방법
 - 세미나(100%)

마. 통일 전 서독 사회통일교육의 효과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하였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독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큰 효

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사실 서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9년부터 나찌가 집권한 1933년까지 민주주의를 시험할 기간이 있었으나, 국내 정세가 혼란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국가적 최대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치교육은 그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서독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통일 진행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보냈다. 사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면, 서독 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주민들은 기꺼이 신속한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민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통일 이후 통일 후유증이 극대화 될 때 서독 국민들이 취한 자세와 행동이다. 1992년 동서간의 심리적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때, 서독 지역 국민들은 폭력 등 극단적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민주적인 가치 아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일부 극단론자들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서독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동서간의 심리적인 갈등은 존재하지만,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 때문에 연방정치교육본부 직원 뮐러-호프슈테데(C. Müller-Hofstede)는 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 사회에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

한 서독 국민들의 반응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⁶⁾

2.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 개요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이 정치교육이라는 폭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일관성 있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통일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서도 이념 교육은 핵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동독은 모든 국민의 모든 능력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는 명목 아래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회교육을 강조하였다. 사회교육에서도 사회주의적 가치관, 인격, 도덕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체 사회가 사회주의화 되고, 자본주의-제국주의와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교육개념에서는 이념교육과 사회주의적 의식과 행동의 개발이 사회주의 인격의 핵심 가치로 간주된다.”⁶⁷⁾

통일 전 동독의 교육은 공산당이 그 방향을 결정하였다. 1967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던 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통일교육에서 이념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독 의회는 1970년 9월 16일 “성인 교육기관이 사회주의 체제에 기여해야 할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성인교육기관의 목적은 다면적으로 개발된 사회주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식을 확고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소유하고, 동독사회주의 사회와 경제의 특징을 잘 알고, 현대 기술과 생산관계를 잘 이해하여, 사회

66) 뮐러-호프슈테데(C. Müller-Hofstede)씨의 면담은 2002년 4월 26일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개최됨

67) G. Neuner, *Zur Theorie der sozialistischen Allgemeinbildung*, Berlin, 1973, 35f.

주의 국가·경제·문화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경제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조국인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수호하는 데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다.”⁶⁸⁾

나.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사회교육을 수행하였던 모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서독처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었다. 모든 주요 교육기관에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성인대학, 기업체부설대학⁶⁹⁾ 등이 대표적인 사회통일교육기관이었고, 동시에 각종 강연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⁰⁾

<표 III-5> 통일 전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학위과정 사회통일교육기관	성인대학
		기업체 부설대학
		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비정규 사회통일교육기관	각종 강연회
		문화행사, 문화관, 도서관, 대중매체 등

68)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über die Grundsätze für die Aus- und Weiterbildung der Werktätigen bei der Gestaltung des entwickelten gesellschaftlichen Systems des Sozialismus in der DDR vom 16. Sept. 1970*, 200.

69) 북한의 공장대학과 유사한 성인 고등교육기관이다.

70) J. Olbrich,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Bonn, 2001, 289.

다. 사회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 배경 요인이 되는 사회교육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통일 전 동독 사회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동독이 소련 점령지였을 때 성인교육의 최대의 목적은 정치교육을 시키는 것에 놓여있었다.⁷¹⁾ 정치교육이란 여기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교육이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동독국가가 건설된 이후 사회교육에는 직업교육 또는 직업자질 함양이 주요 과제로 첨가되었다. 1948년 제 1차 경제계획이 선포되면서 직업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듯이, 1950/51년부터 기업체부설대학이 건립되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두 번째 목적은 성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54년 6월 “학문적 인식을 준비하는 사회”라는 헌장이 선포되면서, 사회교육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되었다. 기존의 이념교육, 직업교육과 더불어 일반적 교양의 함양이 사회교육의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때부터 동독 사회교육의 세 가지 과제, 즉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 동독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⁷²⁾

통일 전 동독의 교육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비록, 사회교육이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이념교육이었다. 따라서 이념교육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교육을 논할 수 없다.

동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이념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점에

71) E. Emmerling,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1958, 66ff.

72) J. H. Knoll, H. Siebert, *Erwachsenenbildung - 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1968, 16.

서 동독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독의 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체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 대상으로만 가르쳤다. “성인대학의 과제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인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어, 반 파시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⁷³⁾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일반 성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인대학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통로이다. 성인대학은 정치, 과학, 기술, 예술 등 제 분야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의식을 매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⁴⁾

라. 사회통일교육의 내용

통일 전 동독에서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이념교육, 마르크스-레닌주의 가치관교육, 반혁명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가치관과의 논쟁,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우월성 인식, 제국주의적인 서방세계와의 정치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과 논증능력 등이었다.⁷⁵⁾

동독 사회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전 라이프찌히(Leipzig)에 있었던 성인교육연구소(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an der Universität Leipzig)⁷⁶⁾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⁷⁷⁾ 1968년 라

73) E. Emmerling,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1958, 80.

74) *ibid.*, 89.

75) H. Klein, *Bildung in der DDR - Grundlagen, Entwicklungen, Probleme*, Hamburg, 1974, 32.

76) 1948년에 설치된 위 연구소는 동독의 대학에 설치된 유일하고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성인교육기관으로 주로 교장, 장학사, 대학강사 등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7) J. H. Knoll, H. Siebert, *Erwachsenenbildung - 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1968, 35.

이프찌히 성인교육연구소에는 약 9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전공, 부전공, 추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전공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교육과정이었다. 부전공교육과정에는 정치경제, 철학, 역사, 과학적 사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교과목이 중심을 이루었다. 추가교육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과목은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사회주의 경제의 정치경제적 기초, 소련교육학, 성인교육심리학, 개별 교과목의 교수학 등이었다. 전공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교과목이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교과목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동독에서 사회통일교육이 교육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주로 이념교육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사회통일교육의 특징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동독 사회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동독의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⁷⁸⁾ “다면적으로 도야된 사회주의 인격”을 갖춘 사회주의 인간 육성을 완성하는 것이 사회통일교육의 목적이었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유일한 과학적인 철학으로 인정되고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졌다. 더불어 사회과학(역사, 마르크스 사회이론 등)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었다. 사회교육의 주요 분야인 교양교육이나 직업교육 역시 마르크스 교육학이 기초 학문으로 수용되었다. 셋째, 교육방법에 있어서 성인들에게 필요한 대화나 토론 방법보다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교화(Indoktrination)가 강조되었다. 성인 학생들은 수업활동에서 피동적으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 넷째로, 사회통일교육기관은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움직여졌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민간 교육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점은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체계에 관한 법”이 뒷받침하였다.

78) *ibid.*, 17.

3.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 개요

통일 직후 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은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을 매개하는 것과 더불어 동서독 주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통일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통일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은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 모아졌다.

통일 독일 정부와 정치교육담당자들은 과거 서독에서 정치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구 동독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구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대아래 통일 이전 구 서독지역에 있었던 정치교육기관들이 구 동독 지역에도 확산되어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 동독 지역의 각 주에 정치교육본부가 설치되었다. 정당의 정치교육재단과 교회 등 사설 정치교육기관도 구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서독 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구 동독 지역에 확산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구 서독의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단지 구 동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이러한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독일 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1년 말 통일 전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정치교육 기능을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이관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1993년 이후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내적 통합”이란 이름의 별도의 본

부를 설치하고,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통합을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이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사회 통일교육 담당기관

통일 이후에도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더불어 정당의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등이다.

1) 연방정치교육본부

가) 역사와 설립목적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독일 국민의 정신에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으로 1952년에 발족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목적은 독일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설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었던 테마를 정치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1990년 통일 이후에는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2001년 현재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⁷⁹⁾

-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의회민주주의와 그 기본 원칙
- 독일연방공화국 및 구 동독 지역의 발전, 나찌즘, 바이마르 공화국 등 현대사 관련 주제
- 동·서관계의 변화, 국제 사회의 정치적 관심사, 남·북관계, 국가안보 및 경제정책 등 국제적 주제
- 외국인 적대감과 폭력, 정치혐오증과 정치적 극단주의 등 국내의 현안 사회 문제

79) <http://www.bpb.de>.

- 유럽 협력, 생태 의식, 기술·대중매체·세계화에 의한 사회적 변화, 통일
일의 과정 등 미래 문제 등

통일 직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1991년에는 신설 5개 주에 주 정치교육본부가 설치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1990년 이후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 최우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치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그 시행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정치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았으나, 그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구 동독 지역에는 정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이었다. 정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국가가 관장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 역시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동독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은 그것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정치교화 활동으로 오해할 소지가 컸다. 기반자원의 부족과 국민들의 편견 등이 정치교육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이러한 배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구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정치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인력 및 예산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직원은 2001년 현재 총 150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40명,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주 정치교육본부의 인력은 주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작은 주의 5명에서 큰 주의 60명 사이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간 예산은 1999년 기준으로 76,900,000DM(한화 461억원)이다. 16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주 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는 관계없이 주 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주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작은 주인 잘란트(Saaland) 주 정치교육본부의 연간 예산은 약 800,000DM(한화 4억8천만원)이고, 가장 큰 주인 바이에른(Bayern) 주 정치교육본부의 연간 예산은 약 10,000,000DM(6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⁸⁰⁾

다) 주요 사업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간행물 발간,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시청각 매체 개발 및 대여, 대중매체의 활용, 사설 정치교육기관의 연수 프로그램 지원, 정치교육경연대회, 정치교육 전시회, 서비스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라) 홈페이지 내용 소개

연방정치교육본부 홈페이지는 정치교육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홈페이지는 크게 새소식, 연방정치교육본부 소개, 주요 현안, 출판물, 영화/영화관, 온라인 출판물, 정치교육행사, 정치교육 경연대회, 관련 정보, 찾기, 도움말, 홈페이지 관리인 등이 주요 메뉴로 설정되어 있고, 각 메뉴별로 수많은 세부정보를 담고 있다.

<표 III-6> 연방정치교육본부 홈페이지 내용

주요 메뉴	세부 내용	비고
새소식	○ 최신 소식 소개	
연방정치교육본부 소개	○ 주소 ○ 법적 규정 ○ 이상(방향)과 주요과제 ○ 자문위원회(학술고문단, 감독단) ○ 조직과 임무 ○ 목표그룹 ○ 파트너 ○ 16개 주 정치교육본부(주소) ○ 동서문제담당지부 ○ 유관기관 지원지침 ○ 승인된 사설정치교육기관 소개 ○ 개방 및 방문시간	

80)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주 정치교육본부의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례보고서(Tätigkeitsbericht 1999) 및 2001년 10월 16일 본(Bonn)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개최된 Lothar G. Kopp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임.

<p>주요 현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연방정치교육본부 사업 ○ 쟁점 : 대중매체 안에서의 폭력 ○ 쟁점 : 9.11 테러와 그 영향 ○ 쟁점 : 선거 ○ 정치와 테러 ○ 전문가연수프로그램 : 문명사회에서의 e-민주주의 ○ 국제회의 : 성평등 ○ 학술대회 : 예술과 민주주의 ○ 이민논쟁 ○ 정치교육 전시회 ○ 극우주의 ○ 폴란드 견학 안내 ○ 이스라엘 견학 안내 ○ 언론방송인 연수 프로그램 	
<p>출판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물 신청 안내 ○ “간추린 정치” ○ “현대 독일상” ○ CD-Rom ○ 시리즈 간행물 ○ 일반도서 ○ 법 관련 서적 ○ “국회” ○ “정치와 현대” ○ “정치교육 정보” ○ “쟁점” ○ “확대경” ○ “수업주제” ○ “정치잡지” ○ “정치교육 보조자료” ○ 매체교육학 자료 ○ 언론방송인을 위한 도서 ○ “정치교육 달력” 	
<p>영화/영화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교육 영화/비디오 리스트 ○ 대여 장소 안내 ○ 최신 영화 정보 ○ 관용을 주제로 하는 영화 ○ 영화관 소개 ○ 출판물 “영화” 	

온라인 출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교육 정보” ○ “정치와 현대” ○ “국회” ○ “간추린 정치” ○ 법 및 조약 ○ 뉴스레터 ○ 정치교육 컴퓨터 게임 ○ 지방정책 ○ 독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현황 ○ “영화” ○ “수업주제” ○ 언론방송인 연수프로그램 문서 	
정치교육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프로그램 안내 ○ 동서문제담당지부 ○ “과거와 미래” ○ “여성이 보는 이스라엘 문제” ○ “e-민주주의” ○ “세계의 빈곤국가” ○ “신 테러주의” ○ “성평등” ○ 이스라엘 견학 안내 ○ 폴란드 견학 안내 ○ 정치클럽 ○ “21세기의 중국” ○ “세계화” ○ “정치참여” ○ “NATO 확대와 그 영향” ○ “새로운 세계질서형성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립” 	
정치교육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 제 5회 “연극에서의 정치” 페스티벌 ○ 대학생 경연대회 : “민주주의 이미지 아이디어 공모”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및 응답 ○ 연방정부 및 주요 관공서 소개 ○ 학문 연구 관련 기관 ○ 청소년 경연대회 관련 기관 ○ 온라인 정치교육 정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보 찾기 	
도움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설명서 ○ 정간물 “정치와 현대” 찾는 방법 소개 	
홈페이지 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관리인 소개 	

2)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가) 역사와 설립목적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은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정치교육 재단이다.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에베르트(Friedrich Eber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1)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2) 유능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국제 이해와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 인력 및 예산

2000년 현재 본부와 지부 그리고 해외 파견 직원을 합하여 총 5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0년 예산은 204,000,000DM(한화 약 1,200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금이다.

다) 주요 사업

2000년 한 해 동안 약 3,000회의 정치교육 행사를 개최하였고, 약 150,000명이 정치교육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총 1,700명(외국인 학생 340명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3)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 Stiftung)

가) 역사와 설립목적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은 기독교민주당(CD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서독 초대 대통령인 콘라드-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의 이름을 따서 1956년 설립되었다. 평화, 자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주요 사업

2000년 한해 동안 3,100회 이상의 정치교육 행사를 개최하였고, 126,000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국내와 국외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연수하는 활동을 펼쳤다.

다) 인력 및 예산

2000년 현재 국내 516명(본부 337명, 지부 169명), 국외 74명으로 총 582명

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0년 예산은 202,660,000DM(한화 약 1,200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4)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 Stiftung)

가) 역사와 설립목적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FDP)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자유민주당을 창당한 프리드리히-나우만(Friedrich Naumann)의 이름을 따서 재단이 설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나) 주요 사업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돕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예산

2000년 예산은 76,429,223DM(한화 약 450억원)이고 주요 재원은 역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금이다.

5) 한스-자이델 재단(Hans-Seidel Stiftung)

가) 역사와 설립목적

한스-자이델 재단은 독일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정치교육재단이다. 1966년 기독교사회당수인 한스-자이델(Hans Seidel)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다. 기독교적인 기초 하에 민주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 사업

2000년 한해 동안 1,632회의 정치교육 행사를 개최하여 57,482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74회에 걸쳐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여 4,200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155명의 대학생, 61명의 전문대학생, 110의 박사과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31개국의 101명의 외국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 후 독일에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대단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매년 그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는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⁸¹⁾ 먼저, 주요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고, 통일 이후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연도별로 중점 추진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요사업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첫번째 주요 사업은 간행물 발간 사업이다. 간행물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는 주간신문인 “국회(Das Parlament)”, “국회”의 부록인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 “확대경(Zeitlupe)”,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e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기간행물 외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매년 많은 정치교육용 도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핸드북 또는 모노그래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시리즈 간행물은 1999년까지 모두 363권이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일반 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지식과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권마다 보통 10,000원에서 20,000권이 발간되는데 수요가 많은 경우는 재판 인쇄된다.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는, 정치교육 연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연방정치교

81)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9*, Bonn, 1986.

육본부는 매 년 200건이 넘는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연수 프로그램(Fachtagungen)과 동서지역담당지부 세미나 그리고 해외연수로 나누어진다. 전문연수 프로그램은 교원, 방송언론인, 군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말한다. 동서지역담당지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제는 주로 동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에는 시청각 매체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있다.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이 주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매년 유관 정치교육기관의 정치교육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300여 개 정도의 성인 정치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정치교육 세미나 또는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많은 소규모 정치교육기관은 이러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70년부터 실시된 경연대회의 참가대상은 독일 전역의 학교에서 6-1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그룹, 특별활동그룹이 된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연구활동, 인터뷰, 예술활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여섯째, 정치교육 관련 내용의 전시회 역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사진 또는 해학 스케치로 구성되는 전시회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과 논쟁을 자극한다. 1999년에 개최된 “독일상 - 외국인의 눈에 비추인 통일 독일”은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전 “독일인이 보는 독일인”과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독일 청소년 사진”은 독일 통일과정과 동서독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진으로 묘사하였다.

일곱째,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각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은 크게 인터넷 서비스, 출판물 우송, 방문객 안내, 각종 행사장에서의 연방

정치교육본부 소개 등이 있다. 특별히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고유한 홈페이지(www.bpb.de)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역사, 구조, 파트너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세미나와 행사, 각종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정기간행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모든 간행물과 세미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2) 통일 이후 추진된 연도별 통일교육사업

가) 1990년

통일된 해인 1990년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구 서독의 정치교육을 동독 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⁸²⁾ 동독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체제를 이해시키고 그러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정치교육을 통하여 도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기존에 해 오던 정치교육용 간행물 발간사업을 확대하여 동독 주민들도 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9년 가을의 동독 시민혁명 사건을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아직 통일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나) 1991년

1991년 독일 사회통일교육의 중심 테마는 신연방국가(구 동독 지역)와 통일이었다.⁸³⁾ 독일 통일이 대단히 신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1991년에 와서야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1991년부터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이후 독일사회통일교육의 과제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1991년에는 신연방 지역에 세워진 주 정치교육본

82)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0*, Bonn, 1991, 5.

83)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1*, Bonn, 1992, 5.

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1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이론/정치교육,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도서 : 독일통일사전
- 정기간행물 “논쟁” : “동독의 전환”
- 비디오 출간 : “낮선 독일 청소년”
- 비디오영화 : “다큐멘터리 통일”
- 비디오영화 : “민주주의 학습”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정보” : 신연방국가
- 정치교육 학습자료 : 독일통일
- 프로젝트 : “동독과 서독의 상이성”
- 튀링겐 주 언론인 재교육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우리는 한 민족이다”
- 교원 연수 : 신연방국가에서 역사, 사회, 정치교과의 상황
- 학생경연대회 주제 : 신연방국가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과정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국가의 산업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정치문화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사회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청소년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경제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정치교육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문학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정보” : 동독의 역사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정보” : 독일의 분단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정보” : 서독의 성립

다) 1992년

1992년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핵심 주제는 동독과 통일이었다.⁸⁴⁾ 그러나 1992년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큰 도전을 맞게 된다. 통일휴유증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독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특별히 급속히 성장한 폭력적 경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정치교육에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배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992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도서 : “독일통일과정: 역사-정치-사회”
- 일반도서 : “독일사회에서의 외국인”
- 일반도서 : “외국인과의 관계, 편견, 적대감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착점”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 : “외국인”
- 정치교육 연수 : 동독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
- 교원 연수 : “신연방 각 주에서의 역사 교과 운영 현황”
- 교원 연수 : “적대감정, 관용 그리고 정치교육”
- 교원연수 : “통일 독일 청소년의 폭력적 잠재성 및 폭력 행위”
- 일반연수 : “정치교육과 극우주의”
- 세미나 : “독일의 외국인”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 지역의 사회상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 휴유증으로서의 심리적 문제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 문제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 지역 청소년의 청지의식

84)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2*, Bonn, 1993, 5-6.

- 정기간행물 “국회” : 브란덴부르크 주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독일의 과거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독일통일 2년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외국인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법치국가
- 정치교육 학습자료 : “동독과 서독의 상이성”
- 정치교육 학습자료 : “통일 독일의 사회”
- 정치교육 학습자료 : “편견, 이방인 적대감, 극우주의”
- 정치교육 학습자료 : “구 동독에서의 학교갈등 - 사례연구”
- 영화 : “구 동독에서 정당은 언제나 옳았다”
- 영화 : “독일의 현재 상태”
- 영화 : “동독인의 삶”
- 달력 : “유럽 안에서의 독일”
- 전시회 : “1945-1955 동독의 선전물”
- 전시회 : “동독의 역사”

라) 1993년

1993년 연방정치교육본부 사업의 핵심 주제는 극우주의와 폭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다원화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⁸⁵⁾ 이를 위해 특별히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신연방 지역에 정치교육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1993년부터 동서독 국민의 심리적 통합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어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졌다.

1993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3*, Bonn, 1994, 5.

- 일반도서 : “독일 역사의 중점”
- 일반도서 : “모순된 문학: 구 동독 40년 동안의 시와 수필”
- 주제별 정치교육 자료 : “동독 역사, 공산당 독재, 공산주의”
- 정치교육 학습자료 : “구 동독에서의 학교 갈등 1,2권”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 공산주의 독재의 잔재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의 문화정책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1953년 7월 17일 민중항쟁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독일 역사에서 동독의 위치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 시절 소련의 경제적 착취
- 전시회 : “분리된 희망 - 전후 독일”
- 전시회 : “독일정책 주요 일지”
- 영화 : 구 동독 사법기관에 미친 스탈린의 영향
- 일반도서 : “독일 통일 핸드북”
- 수업 주제 : “신연방 주의 지방정책”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 : “수도 베를린”
- 교원연수 : “신연방 주에서의 역사 교과 현황”
- 교원연수 :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 - 동서독 통합
- 세미나 : “UN에서의 통일 독일의 책임”
- 세미나 : “독일에서의 외국인 - 외국에서의 독일인”
- 세미나 : “정치교육의 현재 : 기회와 도전”
- 정치교육담당자 연수 : “신연방 주와 베를린”
- 세미나 : 동서독 심리적 통합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 일반도서 : “통일 독일에서의 극우주의 폭력. 사회변혁에서의 청소년”
- 일반도서 : “독일에서의 정치적 극단주의”
- 정치교육 학습자료 : “편견, 외국인 적대감, 극우주의”

- 정치교육 학습자료 : “독일에서의 외국인”
- 워크숍 : “폭력에 대항하여”
- 단편영화 : “외국인이 독일에 없다면?”
- 단편영화 : “너와 나”
- 교원연수 : “독일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잠재성과 폭력행위”
- 교원연수 : “직업학교에서의 폭력과 외국인 적대감”
- 세미나 : “외국인, 정치적 망명, 폭력”
- 연수 : “독일에서의 외국인”

마) 1994년

1994년에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독일 사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⁸⁶⁾ 이를 위해 극우주의 및 폭력과 대항하여 정치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구 동독 주민의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특별히 구 동독 전체주의 체제를 정치교육의 주제로 다루었다. 더불어 구 동독 지역 정치교육 교사들의 재교육과 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4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도서 : “1945-1990 동독의 문화와 정치”
- 전문가좌담회 : “영화, TV에서 나타나는 서독과 동독의 관계”
- 일반도서 : “신연방 주 핸드북”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문화의 위기 - 베를린”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독일인의 고향”
- 정기간행물 “국회” : “과거의 극복”

86)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4*, Bonn, 1995, 5.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 주의 사회 문제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 후 긴장완화정책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 주민에게 실적이 미친 정신적이고 사회-심리적 영향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 주의 경제상태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 후 신탁청의 활동에 대한 평가
- 대회 : “변혁기의 독일과 유럽”
- 대회 : “심리적 통합 - 어떻게 가능한가?”
- 통일교육 전문가 연수 : “신연방 주와 베를린”
- 대회 : “공산당은 독재가 아니다? - 통일 회고”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 모델세미나 : 동독 지역 정치교육담당자
- 정기간행물 “국회” : “정치적 극단주의”
- 교원연수 : “간문화적 학습” - 폭력과 외국인 적대에 대항한 프로그램
- 지역세미나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직업학교에서의 외국인 적대감과 폭력

바) 1995년

1995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1992년 이후 독일 사회를 흔들고 있는 사회집단간의 갈등,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범죄, 폭력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⁸⁷⁾ 특별히 통일 5주년을 맞이하여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심리적 통합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가능성을 제공하며, 관용과 이해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는 향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⁸⁸⁾

1995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87)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5*, Bonn, 1996, 7.

88) *ibid.*, 74.

이론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회 : “분단에서 통일로”
- 교원 연수 : “구 동독의 대중매체”
- 교원연수 : “과거 분석 작업 - 독일 통일 5주년”
- 일반도서 : “동독”
- 정치교육 학습자료 : “같으면서도 다름 - 동서독의 가까워짐”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 주의 도시발전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동서독 주민들의 가치 비교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동독의 변혁과정
- 대회 :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 대회 : “독일통일 - 5년 후”
- 교원연수 : “나찌 독재와 공산주의 독재 비교”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 모델세미나 : 동독 지역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
- 프로젝트 :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 - 동서독 통합에의 기여”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40년 동안의 독일 외국인 정책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유럽에서의 이민과 외국인 적대감
- 대회 : “극단주의적 폭력 - 폭력적 극단주의”
- 지역세미나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직업학교에서의 외국인적대감과 폭력

사) 1996년

1996년에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핵심 과제는 독일 통일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었다.⁸⁹⁾ 동서독 주민들의 의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간의 편견을 극복

89)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6*, Bonn, 1997, 7.

하고 거리를 좁히고, 통일독일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1996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1945-1949 동독의 소련점령기간”
- 정기간행물 “국회” : 독일과 동서갈등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동독의 정당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동독의 역사
- 일반도서 : 구 동독의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역사
- 일반도서 : 동독의 영화와 TV
- 대회 : “학교수업에서의 독일 문제”
- 대회 : “독일 역사에서 두 가지 형태의 독재주의와 법치국가로서 독일의 정치적 책임”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독일 통일 중간평가
- 일반도서 : 공산주의 지배와 그 종말
- 일반도서 : 독일 통일 핸드북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 : 통일의 과정 - 80년대 중반 이후 독일
- 대회 : “공산주의 독재의 희생자”
- 대회 : “공산주의 국가와 독일통일과정에 미친 영향”
- 대회 : “독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 대회 : “신연방 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 학생의 만남 : 동서독 학생들의 만남과 대화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재교육
- 교원연수 : 동독 지역 정치 교과 담당 교사연수
- 모델세미나 : 동독 지역 정치교육 담당자 연수
- 지역세미나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직업학교에서의 외국인적대감

과 폭력

○ 대회 : “극단주의 -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아) 1997년

1997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은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 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⁹⁰⁾

1997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 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새로운 독일 국가의 탄생, 2) 심리적 통합, 3)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4) 환경문제, 5) 개발도상국가, 6)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행사 : 상이한 문화간의 대화(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동독의 역사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독일의 아이덴티티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심리적 통합과정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 주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동독에서의 생활
- 일반도서 : 전후 독일사
- 일반도서 : 두 개의 국가와 하나의 민족 - 독일 역사 1955-1970
- 일반도서 : 동독 반체제의 역사 1949-1989
- 일반도서 : 194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문화사
- 정기간행물 “국회” : 신연방 주의 과거와 미래
- 정치교육 매체 : 심리적 통합(주제)
- 대회 : “동독 공산주의 독재의 역사와 결과”
- 대회 : “신연방 주 학교에서의 구 동독식 사고?”

90)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7*, Bonn, 1998, 101

- 대회 : “구 동독에서의 슈타지와 정치재판”

자) 1998년

1998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사업 역시 1997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 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⁹¹⁾

1998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 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심리적 통합,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 “정치교육 정보” : 변혁의 시대 1961-1974
- 일반도서 : 동독 역사 다큐먼트
- 일반도서 : 독일정책의 역사
- 정기간행물 “국회” : 독일 통일과정에서 공산주의 독재의 영향 극복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신연방 주의 변혁과정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과 신연방 주의 문학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과정 중간평가
- 독일현대사 : 동독의 민주 혁명 1989/90
- 일반도서 : 1971-1989 동독의 일상
- 대회 : 통일 후 동서독 지역의 정치교육과 교육정책
- 대회 : 정치교육과 시민교육
- 대회 : 독일통일의 전설과 사실과 전망. 독일 통일과의 대화
- 세미나 : 동독 - 증인과 역사서술
- 대회 : 독일의 민주주의와 독재
- 대회 : 통일 독일 국민들의 사고

91)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124

- 세미나 : 통일 전후 독일 여성들의 생활
- 대회 : 심리적 통합을 위한 대화
- 대회 : 동독 + 서독 = 독일?
- 대회 : 통일 전후 구 동독 역사 분석 작업
- 세미나 : 구 동독의 노동사회
- 대회 : 40 + 40 + 10 = 50. 독일 50년사
- 대회 : 통일 후 동서독 주민의 생활문화
- 대회 : 극우주의, 폭력 그리고 정치교육

차) 1999년

1999년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는, 독일 통일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 국민의 심리적 통합 가능성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모색하려 하였다. 둘째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⁹²⁾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9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 체제, 3) 사회, 4) 경제, 5) 독일 역사, 6) 유럽, 7)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심리적 통합,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5) 학문과 사회의 미래 등이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력프로젝트 : “1949-1989-1999: 독일 역사 50년”
- CD : “독일 현대사”
- 정기간행물 “국회” : “본/베를린 - 수도의 이전”
- 정기간행물 “국회” : “베를린 장벽 붕괴 10년”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평등과 심리적 통합”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독일의 심리적 통합”

92)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9*, Bonn, 2000, 8-9.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의 생활문화”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구 동독의 역사”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통일 후 10년 - 현 상황 분석”
- 일반도서 : “수도 베를린 - 과거와 미래”
- 일반도서 : “독일 통일 핸드북 1949-1989-1999”
- 일반도서 : “사회주의의 종말”
- 정기간행물 “정치잡지” : “구 동독의 역사”
- CD-ROM : “분단의 과거 - 공동의 역사?”
- 연수 :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노조”
- 대회 : “분단의 과거 - 공동의 역사?”
- 프로젝트 : “독일역사 - 증인들과의 인터뷰”
- 연수 : “미래의 기회로서의 기억”
- 대회 : “동서독 국경 지역의 생활경험”
- 연수 : “과거 - 현재 - 미래의 심리적 통합”
- 연수 : “독일과 유럽의 역사: 통합? 그리고 법? 그리고 자유?”
- 정기간행물 “정치와 현대” : “폭력 - 청소년 폭력 극복 방안”
- 시청각매체 : “관용”
- 직업학교 프로젝트 : “폭력과 증오에 대항하여”

카) 분석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추진한 통일교육 사업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볼 때, 통일 직후에는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적 질서를 동독 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통일 후유증이 심해지고 그것이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의 위기로 보고, 통일 후유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이후에는 독일 통일 문제가 심리적 갈등과 대립 문제로 비화하자 심리적 통합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다루었다. 독일 국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시일 사회통일교육의 핵

심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내용적으로 볼 때, 통일 후 사회 통일교육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 동서독의 역사, 동서독 체제의 비교, 구 동독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의 생활, 심리적 통합 등 통일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 졌다. 이 점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방법적으로 볼 때,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후 사회통일교육을 이전에 정치교육에서 활용하던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였다. 간행물, 연수, 대회, 시청각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사회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은 독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언론방송인,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은 특별 관심 대상으로서 주요 목표그룹으로 지칭되고 있다. 여기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은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연수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연초에 연수프로그램의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담당자들에게 분배한다. 연수 담당자들은 연수장소, 연수일시, 강좌내용, 강사 등을 섭외·확정하고, 인터넷에 연수 내용을 공개·안내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교육대상자들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강좌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참가한다.

1) 공무원 프로그램

공무원 통일교육은 주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연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주제 : 새로운 유럽 안보질서
- 일시 : 2002년 5월 1일(수) - 4일(토)
- 참가자 : 고급 행정관료 및 군인

- 강사 : 유럽 안보정책 전문가
- 담당 : 뮐러(Horst Müller) 박사
- 참가비 : 무료
- 일정 :

일시	시간	내용
5월 1일 (수)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인사, 소개, 안내
	15:00 - 15:45	강연 ◦ D. Wellershoff : 유럽안보와 “국제정치의 카오스”.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가?
	15:45 - 16:00	휴식
	16:00 - 16:45	강연 ◦ Prof. F. Nuscheler : 세계화와 테러 위협 속에서 남북관계
	16:45 - 18:00	클로퀀 및 자유토론 ◦ 진행 : D. Wellershoff, Prof. F. Nuscheler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클로퀀 및 자유토론(속개) ◦ 진행 : D. Wellershoff, Prof. F. Nuscheler
5월 2일 (목)	8:00 - 9:00	아침 식사
	9:00 - 11:00	강연 ◦ Dr. K.-H. Kamp : NATO의 미래모습
	10:00 - 10:30	휴식
	10:30 - 11:30	강연 ◦ Prof. A. Zagorski : EU 확대가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러시아의 입장)
	11:30 - 12:30	자유 토론
	12:30 - 14:30	점심 식사 및 휴식
	14:30 - 18:00	클로퀀 및 자유토론 ◦ 진행 : Prof. Zagorski, Prof. G. Nogradi
	18:00 -	저녁 식사

5월 3일 (금)	09:00 - 09:45	강연 ◦ Dr. M.-J. Calic : 발칸 위기와 남동유럽의 안보 (문제와 전망)
	09:45 - 10:30	강연 ◦ Dr. C. Schetter :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10:30 - 11:45	휴식
	11:45 - 12:30	자유 토론
	12:30 - 14:30	점심 식사
	14:30 - 18:0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 진행 : Dr. Calic, Dr. Schetter
	18:00 - 19:00	저녁 식사
5월 4일 (토)	09:00 - 09:45	강연 ◦ Dr. C. Masala : 유럽연합의 미래
	09:45 - 10:00	휴식
	10:00 - 11:3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 진행 : Dr. Masala
	11:30 - 12:00	연수 평가회
	12:00 -	점심 식사 및 귀가

2) 교원 프로그램

교원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요한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주로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다루는 사회과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참여하여 재교육을 받는다.

- 주제 : 사회주의 체제 변화과정에서의 승자와 패자
- 일시 : 2002년 6월 20일(목) - 22일(토)
- 참가자 :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 교원
- 강사 : 사회주의 국가 및 동유럽 전문가
- 담당 : 제게르트(Dieter Segert) 박사
- 참가비 : 무료
- 협력기관 : 독일 동유럽학회, 브레멘 대학 동유럽 연구소
- 일정 :

일시	시간	내용
6월 20일 (목)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인사, 소개, 안내
	15:00 - 17:30	패널토의 I : 사회주의 체제 변혁의 과거와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Henning Schröder ◦ V. Cvjanovic : 체제변혁 과정의 모델화 ◦ S. Kusic : 체제 변혁의 승자와 패자 ◦ M. König : 체제변혁 이론의 가능성 ◦ T. Beichelt :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
	17:30 - 18:30	저녁식사
	18:30 - 20:30	패널토의 II : 체제 변혁 실패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Dieter Segert ◦ P. Wittschorek : 새로운 헌법의 기초 ◦ M. Zweckstetter :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화 ◦ 토론 : Volker Weichsel
	20:30 -	참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정보교환 및 자유토론
6월 21일 (금)	8:00 - 9:00	아침 식사
	9:00 - 11:00	패널토의 III : 체제 변혁과 노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Iris Muth ◦ P. Radic : 체제 변혁 국가의 노동시장 ◦ A. Kemmerling : 동유럽 고용 시장의 변화 ◦ A. Schüttpelz : EU 고용정책의 시사점 ◦ 토론 : I. Muth
	11:15 - 13:00	패널토의 IV : 농업 분야의 변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Thomas Falk ◦ T. Thelen : 사회주의 농업체제 변혁과정의 승자와 패자 ◦ D. Ursprung : 루마니아 농업의 변혁 ◦ P. Linder : 세계은행의 사유화 정책 ◦ 토론 : L. Hinners
	13:00 - 14:00	점심 식사
	14:30 - 16:00	패널토의 V : 민주화의 승자로서의 국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Heiko Pleines ◦ A. Gawrich : 폴란드 체제변혁과정에서의 소수인종 ◦ K. Keller/ U. Zietan : 헝가리 소수인종의 상황 ◦ K. Dzebisaschwili : 그루지아의 국가주의 ◦ 토론 : H. Pleines
	16:15 - 18:00	패널토의 VI : 러시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Rolf Peter ◦ J. Grävnholt : 러시아 연방이 소멸하지 않은 이유 ◦ P. Moshaew : 러시아 체제 변혁과정의 승자와 패자 ◦ 토론 : A. Heinemann-Gründer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참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정보교환 및 자유토론

6월 22일 (토)	8:00 - 9:00	아침 식사
	9:00 - 11:00	패널토의 VII : EU가 동유럽 체제변혁과정의 승자인가? ◦ 사회: Kai Rabenschlag ◦ G. Kiss: 헝가리의 유럽통합 전략 ◦ K. Pieper: 유럽연합의 동유럽 지방 정책 ◦ R. Gaber: 동유럽 체제 변혁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감정 ◦ 토론: A. May
	11:15 - 12:30	종합토론 ◦ 사회 : Heike Dörrenbächer
	12:30	점심 식사 및 귀가

3) 언론방송인 프로그램

언론방송인 역시 사회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찍부터 주요 통일교육대상으로서 수용되고 있다.

- 주제 :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유럽과 미국의 대립
- 일시 : 2002년 4월 29일(월) - 5월 1일(수)
- 참가자 : 언론방송인
- 강사 : 국제정치학자 등 국제문제 전문가
- 담당 : 뮐러-호프슈테테(C. Müller-Hofstede)
- 참가비 : 무료
- 협력기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미국 영사관, 쾰른 아메리카 하우스
- 일정 :

일시	시간	내용
4월 29일 (월)	13:30 - 14:00	등록
	14:00 - 14:15	인사말 ◦ T. Krüger(연방정치교육본부장) ◦ C. Müller-Hofstede ◦ E. Keeton(미국 영사)
	14:15 - 15:15	강연 : 9.11테러 이후 세계질서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 ◦ D. Gompert(유럽연구소) ◦ H. Müller(헤센 주 평화연구재단)
	15:15 - 16:15	토론 ◦ 사회 : A. Henze(서부독일방송)
	16:15 - 16:45	휴식
	16:45 - 17:45	패널토의 I : 미국과 유럽의 관계 ◦ P. Rudolf(베를린 학문과 정치 재단) ◦ C. Hacke(Bonn 대학) ◦ J. Beltran(파리 국제관계연구소) ◦ D. Gompert(유럽 연구소)
	17:45 - 19:00	토론 ◦ 사회 : A. Henze(서부독일방송)
	19:00 -	저녁 식사

4월 30일 (화)	7:30 - 9:30	아침 식사
	9:30 - 10:30	패널토의 II : 안보정책의 세계화 ◦ M. Assebeg(베를린 학문과 정치 재단) ◦ F. Sen(터키 연구재단) ◦ T. Philipp(Tufts 대학) ◦ M. Pott(출판인)
	10:30 - 11:00	휴식
	11:00 - 12:30	토론 ◦ 사회 : M. Gerner(독일방송)
	12:30 - 14:00	점심 식사
	14:00 - 15:00	패널토의 III : 미국과 유럽의 불균형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 ◦ D. Chollet(조지 워싱턴 대학) ◦ B. Heuser(런던 King's College) ◦ K.-D. Frankenberger(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 ◦ H. Kreft(독일 외교부)
	15:00 - 15:30	휴식
	15:30 - 16:30	토론 ◦ 사회 : R. Clement(독일방송)
	16:30 - 17:30	종합토론 ◦ C. Müller-Hofstede(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 ◦ E. Keeton(주 독 미국 영사)
	17:30 -	저녁 식사
5월 1일 (수)	7:30 -	아침 식사 및 귀가

4) 통일교육 전문위원 프로그램

통일교육 전문위원이란 수백 개에 달하는 전국의 민간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말한다. 통일교육 전문위원 프로그램이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재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주제 : 아시아의 변화 과정
- 일시 : 2002년 5월 6일(월) - 8일(수)
- 참가자 : 전국 통일교육 전문위원
- 강사 : 아시아 전문가
- 담당 : 뮐러-호프슈테테(C. Müller-Hofstede)
- 참가비 : 무료

○ 일정 :

일시	시간	내용
5월 6일 (월)	14:00 - 14:30	등록
	14:30 - 14:40	인사, 소개, 안내
	14:40 - 15:40	강연 ◦ Dr. J. Dosch(Univ. of Leeds) 자유토론
	15:40 - 16:00	휴식
	16:00 - 18:00	패널토의 I : 아시아 지역 ◦ 사회 : S. Blancke ◦ P. Ziltener : 동아시아의 통합과정 ◦ S. Rother : ASEAN ◦ 토론 : J. Dosch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참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정보교환 및 자유토론
5월 7일 (화)	8:00 - 9:00	아침 식사
	9:00 - 10:45	패널토의 II : 아시아 변화의 외적인 힘 ◦ 사회 : P. Ziltener ◦ S. Blancke : 중국/북한의 위협관리능력 ◦ F. Friedrich-Rust : 중국, 올림픽, 인권 ◦ N. Schulte-Kulkmann : 중국 법 개혁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 ◦ 토론 : Prof. Dr. T. Heberer
	11:15 - 13:00	패널토의 III : 아시아의 자본 ◦ 사회 : N. Schulte-Kulkmann ◦ N. A. Achsani : 자카르타 증권시장과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 M. Geiger :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E. Meyer-Clement : 중국 공산당과 사기업 ◦ M. Naundorf : 독일과 일본의 자본 투자 ◦ 토론 : Dr. D. Fischer
	13:00 - 14:00	점심 식사
	14:30 - 16:00	패널토의 IV : 노동시장 ◦ 사회 : E. Meyer-Clement ◦ N. Mevenkamp : 중국 도시 노동자의 사회통합 ◦ T. Pfeiffer : 마닐라 빈곤 어린이 교육 프로젝트 ◦ B. Schulte : 중국 노동과 직업 이해 ◦ 토론 : Dr. B. Alpermann
	16:15 - 18:00	패널토의 V : 아시아의 모습 ◦ 사회 : N. Mevenkamp ◦ F. Jin : 현대 중국 문학에서의 신 ◦ G. Kirsch : 일본 TV 선정에 비친 외국과 아시아 모습 ◦ A. Stolpe : 막스 베버의 중국 연구 ◦ 토론 : A. Heinemann-Gründer
	18:00 - 19:00	저녁 식사

5월 8일 (수)	8:00 - 9:00	아침 식사
	9:00 - 11:00	패널토의 VI : 아시아의 아이덴티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G. Kirsch ◦ N. Altmeier : 일본의 자기동일성 및 지역연대 ◦ J. Hermann :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동일성 ◦ L. Wollweber : 웹 마스터와 국가적 신화(태국) ◦ C. Weitz : 문화의존적인 대중매체 이용 ◦ 토론 : C. Derichs
	11:15 - 12:00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Dr. G. Schucher, Müller-Hofstede, Wacker
	12:15	점심 식사 및 귀가

5) 일반인 프로그램

일반인 프로그램이란 위에서 제시한 특별그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주제 : 세계화와 유럽통합
- 일시 : 2002년 6월 3일(월) - 7일(금)
- 참가자 : 독일 국민
- 강사 : 유럽 전문가
- 담당 : 제게르트(Dieter Segert) 박사
- 참가비 : 무료
- 협력기관 : 함부르크 시 재무청
- 일정 :

일시	시간	내용
6월 3일 (월)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인사, 소개, 안내
	15:00 - 16:00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 Dr. W. Klein(켈른 대학) ◦ 주제 : 독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기회와 위험요소
	16:00 - 19:30	휴식 및 저녁식사
	19:30 - 21:0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Dr. Klein

6월 4일 (화)	9:00 - 10:00	강연 ◦ 강사 : Dr. F.-L. Altmann(독일 국제안보정치연구소) ◦ 주제 : EU통합의 경제적 측면
	10:00 - 11:00	강연 ◦ 강사 : Prof. Dr. J. Kleer(바르샤바 대학) ◦ 주제 :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당시의 경제-재정적 적응과정
	11:00 - 15:00	점심식사 및 휴식
	15:00 - 16:3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 진행 : Dr. Altmann, Prof. Kleer
6월 5일 (수)	9:30 - 10:30	강연 ◦ 강사 : Dr. R. Ullrich(유럽 재무 담당) ◦ 주제 : 독일과 유럽의 관세행정의 발전
	10:30 - 12:3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 진행 : Dr. Ullrich, Dr. Courth
	12:30 - 13:30	점심식사 및 휴식
	오후	그룹토의 또는 문화행사
6월 6일 (목)	9:00 - 10:00	강연 ◦ 강사 : Prof. Dr. A. Raedler ◦ 주제 : 재무경제의 세계적 구조조정과 유럽의 세무회계법
	10:00 - 12:30	전문대화 및 자유토론 ◦ 진행 : Prof. Raedler
	12:30 - 15:30	점심식사 및 휴식
	15:30 - 18:0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 진행 : Dr. Randazio-Plath, Prof. Raedler
6월 7일 (금)	9:00 - 10:00	강연 ◦ 강사 : C. Meier(독일 국제안보정치연구소) ◦ 주제 : 동서유럽 경제협력의 의미
	10:00 - 12:00	콜로퀴움 및 자유토론 ◦ 진행 : H. Meier
	12:00 -	점심식사 및 귀가

6)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수행한 연수 프로그램은 참석자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브라운슈바이크 대학(서독), 막테부르크 대학(동독)에 의뢰하여 1996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독일전역의 12,0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하는 연수자료나 정기간행물을 학교수업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97.5%(자주 활용 36.4%, 가끔 활용 61.1%)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⁹³⁾ 또한 1999년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연수, 세미나, 대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방정치교육본부 행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매우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가 행사를 통해 “흥미 있는 정보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대답하였다.⁹⁴⁾

마. 통일 후 구 동독 지역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독일에서 통일 전후 사회통일교육은 서독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본래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 전후 서독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통일 전에는 동독 실상에 대한 이해, 동서독 비교 등이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이후에는 동서독 국민통합, 폭력과 극우주의 등 통일관련 내용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독 지역의 통일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 전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 후에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즉, 동독식의 사회주의 이념 교육에서 서독식의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익히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도 큰 문화충격을 주었고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통일 정부는 구 동독 지역에서도 단지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시키면 서독 주민들처럼 민주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93)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120-121.

94)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9*, Bonn, 2000, 130.

1) 통일 독일 11년

독일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독의 의회민주주의, 서독의 법과 행정체계 등 서독 식의 제도가 동독 사회에서 정착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균형 문제도 거의 해결 단계에 와 있다. 수입의 측면에서 볼 때, 1998년 연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동독 지역의 근로자는 서독 지역의 근로자에 비해 평균 88%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동독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수준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통일 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 그리고 비록 통일의 과정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국가체제를 인정하고 있고, 통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국가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구 동독 주민들은 아직도 새로운 서독 식 제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신들이 ‘이등 국민’이라는 의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 수준이 대폭 개선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면서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방식이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실패한 측면도 있음을 시사받는다.

2) 동독 주민의 의식

가) 삶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의 구 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보다 개인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⁹⁵⁾ 1990년의 조사에서는 개인경제사정이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993년 조사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48%, 나빠졌다는 응답이 23%, 비슷하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1998년의

95) D. Pollack,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조사에서는 59%가 좋아졌다는 응답을, 16%가 나빠졌다는 응답을, 25%가 비슷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59%의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신들의 생활조건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고, 16%가 나빠졌다고, 25%가 비슷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나) 가치에 대한 평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의 실현에 대한 평가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서독 지역 주민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양 지역 주민들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실현의 자유,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두 항목에 대해 서독 지역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독 지역 주민들은 50%가 개인의 자기실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70%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⁹⁶⁾

안전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동독 지역 주민들은 개인 재산의 보호, 환경의 보호와 같은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70%의 동독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 질서나 사회적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회균등과 정의에 대한 항목에서 동독 주민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신배경과 관계없이 통일 독일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가? 라는 질문에 4분의 1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통일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서도 단지 10분의 1만이 그렇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가 통일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서독 주민들보다는 동독 주민들이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96) T. Bulmahn, "Zur Entwicklung der Lebensqual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다) 정치 체제에 대한 의견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계인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체계 등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독일의 사회과학자들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여기서 발견한다.

사실상 서독 식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평판이 높은 것은 못된다. 정당, 정부, 법, 경찰 등에 대한 신뢰가 서독 주민들보다 높지 못하다. 서독 식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역시 서독 지역 주민들보다 높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 자체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에 의해 가장 좋은 제도로 인식되었다. 1990년에는 77%의 구 동독 지역 주민이 서독 식의 시장경제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23%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에는 60%의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 식의 의회민주주의에 만족하였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대단히 낮아졌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구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경제가 우월하다고 대답한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 즉 표현의 자유나 자유경쟁 체제에 대해 그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구 동독 주민들의 서독 식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규범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구 동독 주민들 불만의 원인

그렇다면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독일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것에 대해 왜 서독 주민들보다 더 불만족한가? 구 동독의 사회주의가 그들을 아직도 각인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경제상황이 서독 주민들에 비해 아직도 나쁘기 때문인가?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기초로 그 원인을 분석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⁹⁷⁾

첫째, 구 동독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많은 구 동독 주민들은

97) D. Pollack,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사회주의가 그 이념은 좋으나, 단지 구 동독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은 통일 직후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동서독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약 40%나 된다. 비록 구 동독 사회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점은 아직도 많은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통일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증한다.

둘째,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질서, 그들을 무시하는 사회질서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구 동독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통일 사회에서 '이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4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구 동독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등국민'으로 남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약 80%의 구 동독 지역 주민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조사에서는 69%로 나타났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등 국민'으로 느낀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할 수도 있고, 동독 사회주의가 남긴 추한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고, 통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위의 세 가지 의미 모두 원인이 되는데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 원인 정도를 비교하자면, 구 동독의 추한 모습이 원인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통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통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이등국민'으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독 식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서독의 불평등과 관련된 질문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 가운데 %가 동서독의 평등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성취한 것만큼 정의롭게 배분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5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는 그 비율이 80%를 차지하였다. 반

면, 서독 지역 주민들은 꾸준히 30%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넷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1991년에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회의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표 III-7> 독일의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동독 지역	서독 지역
1991	+48	+64
1994	-18	-27
1996	-26	-24
1998	-23	-12

※ 표시된 숫자는 긍정적 답변에서 부정적 답변을 뺀 숫자임

동서독을 구분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면, 더욱 분명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서독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동서독인들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비율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조금 더 높다. 반면 동독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역시 동서독인들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구 동독 주민들은 더욱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독일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의식의 차이에 대한 해석

위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독일의 일반 경제 상황은 나빠졌다고 평가하면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개인 경제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주요 원인은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개인 경제 상황의 호전이 구 동독 지역 경제 기반이 튼튼하여서, 즉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라, 서독의 원조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서독은 동독 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총 1조2150억 마르크(약

600조원)를 투입하였다.⁹⁸⁾ 오늘날 구 동독 주민 수입의 1/3이 서독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즉, 서독의 지원 덕분에 동독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부와 복지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사회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이 지적된 바처럼 통일 후 형성된 의식의 장벽은 이러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 편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부를 향유하는 사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되어 가는 경제체제 밑에서 상대방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오늘날의 동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자긍심을 잃고 심한 모멸감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들의 개인 경제 사정은 현저하게 좋아졌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땀흘려 일구어낸 결과가 아니라, 남의 도움에 의한 선물이다. 자신들의 개인 경제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독 제도에 대한 동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족은 제도 자체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파생되고 있다. 자신들이 통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허탈감과 모멸감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성취해내지 못한 것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동독 주민들의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태이다. 서독 사람들은 전후 땀흘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냈고, 따라서 그러한 체제를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독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타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느낀다. 사회주의 독재 시절에도 공산당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통일과 통일 이후의 과정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타율적으로, 즉 서독 정부

98) R. Geißler, "Nachholende Modernisierung mit Widersprüchen - Eine Vereinigungsbilanz aus modernisierungstheoretischer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와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를 높이 평가하고, 현재의 서독 식의 자본주의 체제를 평가절하 하려는 노력들은 그들의 소외감의 표출이요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자존감의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독 주민들은 비록 통일 이후 엄청난 자기희생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감정의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동서독 주민간의 의식상의 차이 문제는 이미 통일 직후 예견된 것이었고, 따라서 의식의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이 시도되었는데, 그러한 통일교육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통일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경험적인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획득 수준면에서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참여 행위면에서나 서독 지역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래 의도하였던 동서독의 균형은 찾을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 참여, 선거참여율 등에서 동독 지역 주민들은 서독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당이나 노조에 대한 참여도 낮고,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 행위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보였던 민주적인 정치 문화의 형성은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거의 상실되었다. 구 동독 시절 정치이데올로기에 회의를 품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도덕적'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정치 이해와 풍토가 현재 구 동독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

구 동독 주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된 원인은 구 동독 정치문화의 영향, 통일의 과정에 대한 불만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특별히 세 가지 점은 언급할 만하다. 첫째는, 통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식이다.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통일사회가 분명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이등 국민'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으로 내면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열등감이다. 구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경제 지원을 건강한 통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난민 구호금이나 자선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무력감이다. 자신들이 통일 독일을 가꾸어 가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통일 이후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점은 구조적인 측면이다.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반면, 서독에서는 동독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면서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안목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동독인의 눈에는 ‘공격적이고 잔인하게’ 서독 식의 정치문화를 매개하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동독 지역 정치문화의 문제점이 동서독의 불균형적인 의식의 문제인 동시에 서독의 지배문화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해갈 수 있는 능력이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결여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한 민주적인 정치역량의 결여는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결과로 가져왔다. 구 동독 지역에서 있었던 최근의 선거에서 구 동독 공산당의 후예정당인 독일사회당(PDS)이 대약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1999년 베를린 주 선거에서 독일사회당(PDS)은 전체적으로는 17.7%로 기민당과 사민당 다음인 제 3정당을 차지하였고,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39.5%로 제 1당을 차지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0년과 1995년의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대약진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베를린은 구 서독 정당을, 동베를린은 구 동독 정당을 택하는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⁹⁹⁾ 또 하나의 사례로 극우주의 성향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극우주의 정당의 당수인 하이더(Haider) 논쟁에 대한 2000년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하이더와 같은 인물이 독일 정치계에도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 주민 가운데 15%가, 서독 주민 가운데 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

99)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 *Berliner Statistik*, 2000, 20-22.

다. 또한 독일 국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극우주의 정당의 출현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 주민 가운데 19%가, 서독 주민가운데 1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¹⁰⁰⁾ 중도적인 정당보다는 극좌와 극우정당 모두에서 동독 지역 주민들의 찬성이 높다는 사실은 모순되면서도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후 구 동독 지역 정치교육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구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은 구 동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서독 식의 정치교육 모델이 그대로 수용되어 전개되었다. 서독의 모델에 따라 신 연방 각 주에 주 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정치교육 담당부서가 동독 지역에도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교회 등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구 동독 지역의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독 식의 정치교육을 그대로 구 동독 지역에 적용하면 정치교육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였다. 곧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¹⁰¹⁾

첫째, 정치교육을 위한 재정이 공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고, 정치교육 장소나 시설도 낡아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둘째, 정치교육 기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동독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교육 담당자들의 의식과 열성과 노력이 서독 지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서독 식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결여는 수요자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참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무관심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넷째, 정치교육 수요자들의 무관심은 공급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질적으로 매력 있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의 개발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히 정치교육 담당자들의 질적인 결여를 가져왔다. 그들은 정치교육 계획이나 정치교육 교수법에 익숙해지지 않아 정치적인 토론을 활발히

100) E. Crome, B. Muszynski,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101) *ibid.*.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 동독 지역은 통일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결속력 있는 단체와 모임이 미약해져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에서처럼 정치교육 단체에 대한 후원이 동독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실천관련적인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읍·면·동 등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만개되어야 하는데, 구 동독 지역에서는 아직도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정치조종에 익숙해져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 동독이 붕괴할 때 시민 연합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원탁회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로 인정되는 시민사무실, 미래설계실 등 시민참여는 동독 지역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현상이다.

4.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비교

가. 통일전 동서독 사회통일교육 비교

1) 사회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졌다. 통일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적 소양을 키우고, 동독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추게 하고, 올바른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에 모아졌다.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를 가르치는데 통일교육의 대부분이 할애되었다.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체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대립과 투쟁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과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2) 사회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서독에서는 동독체제에 대한 객관적 지식 전달, 동서독 체제의 비교, 동서 냉전체제에 대한 이해, 국제관계 등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일반 성인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등 사회주의 이념을 주 교육내용으로 삼았고, 서독에 대해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주로 가르쳤다.

3) 사회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이 대부분 강의와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주요 교육방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성인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교육을 받았고, 그 효과도 컸다.

반면, 동독에서는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식을 주입하고 교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이념은 토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통일교육에 임하였다.

4)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

서독에서는 사회통일교육 담당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인 연방정치교육본부와 11개 주 정치교육본부, 내독성과 전독연구소 등이 있었고, 정당 재단, 그리고 교회,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국가와 민간이 모두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회통일교육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독에서는 모든 사회교육은 국가가 관장하였다. 동독의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관장한 것과 같이 사회통일교육 역시 국가의 소관사항이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

제되었다.

나. 통일전후 독일 사회통일교육 비교

1) 통일 전후 서독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후 서독지역의 사회통일교육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내독성과 전독연구소가 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통일교육기관의 모습에 큰 변화가 없고, 사회통일교육기관의 활동과 프로그램에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는 동독의 체제, 사회주의 이념, 서독의 체제, 동서독 비교, 국제관계 등 일반적인 통일관련 내용이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있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통일 후유증과 관련하여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 심리적 통합 등이 새로운 통일교육내용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93년 이후 심리적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로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오히려 통일 이전보다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이후 줄곧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통일교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 통일 전후 동독 사회통일교육

반면, 구 동독 지역의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의 사회통일교육기관이 모두 해체되었고,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바뀌었다. 통일 이전에는 주입식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통일 이후에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통일교육으로 바뀌었다.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 정치교육본부

등 여러 정치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그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세우고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둔 것처럼, 동독에도 서독식의 정치교육기관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독의 제도를 이식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동서독 주민들간의 심리적 장벽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닫으면 그것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구 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서독식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동서독 주민간의 마음의 장벽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국민통합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동독 지역과 주민의 특수한 사회심리적 상황을 기초로 새로운 사회통일교육 전략 수립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IV. 독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

1.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2. 학교통일교육 분야

3. 사회통일교육 분야

IV. 독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통일교육을 고찰하였다. 동서독의 통일 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독일의 통일이 주는 통일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여 보고자 한다.

1.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독일 통일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통일을 보는 관점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변화하는 것 뿐 아니라,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제도나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상이한 의식과 문화를 통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점은 독일 통일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독일 통일 11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제도적인 통일을 이루었으나, 의식의 통일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논의할 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통일을 제도적인 통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통일은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제도적인 통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의식의 통합의 문제이고, 사실상 의식의 통합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의식이 통합을 이룰 때까지 통일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난 독일 통일 선례에

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제도적 통일은 오늘과 같은 국제환경 하에서는 남북 쌍방이 정치적 합의만 이룩하면 어느 의미에서는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의 내면적 통일, 즉 마음의 통일은 정치 제도가 통합된다 해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쌍방 모두가 구 시대에 심어진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의 변화 없이는 참된 의미에서의 화해와 단결, 협력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둘째, 통일을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통합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통일은 단기적으로 이를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이 유출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의 통일 준비교육, 통일의 진행과정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단된 남북한 사회의 궁극적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통일은 외형적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라 둘로 갈라져 있는 민족 사회의 실질적 통일, 실질적 융합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서로 달라져 있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가치관, 행동양식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현대 한국사인식, 분단현실 인식, 통일의 당위성 인식 등 단기적 과제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셋째, 성급한 통일 논의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화두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통일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화해의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는 공존의 자세를 갖는 것을 더욱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화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한 공존, 나아가 공동체의 수립이라는 목표가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연방정치교육본부 등 정치교육기관은 통일 이후에 더욱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과 통일준비교

육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지만,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요 목표 그룹이 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상황특수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 직후 독일 정부는 구 서독의 제도를 구 동독 지역에 속히 이식하면 사회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회통일교육 역시 구 서독식의 방법을 동독 지역에 적용하면, 민주시민 의식 제고와 통일국민 의식함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현재 동서독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점은 독일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그것이 실시되는 고유한 정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행위는 ‘지금’과 ‘여기’라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특정한 정치적인 조건을 기초로 구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 후 구 동독 지역 통일교육은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서독의 우수한 정치교육 제도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여와 동독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치 불신과 극단적 정치행태를 초래하였고, 동서독 주민의 의식 통합은 요원한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아직도 미완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모멸감과 소외감을 벗고 통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그들은 통일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그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통일 이후 서독 식 정치교육을 통하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의식의 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요청되는 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 사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지금'과 '여기'라는 상황특수적인 통일교육 방안이 제시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의식의 개혁, 그리고 의식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의 통합이 가능해질 때 독일의 통일은 비로소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독일이 맡고 있는 통일 상황은 남북의 통일 이후에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 높은 상황이다. 정치적인 의식과 참여와 능력은 그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와 주제를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앞으로 독일의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전개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통일 준비의 필요성

독일 통일이 낳은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당시 동서독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한 발짝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지금부터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분야에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통합 관련 연구가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시간을 갖고 교육통합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남북한 교육통합 준비위원회(가칭) 등의 기구를 설치해 교육통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독일에서는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통합을 위한 과도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상해 남북한 교육체제의 완전한 통합 이전에 통용되는 잠정적 학교운영 방안, 교육과정 계획안,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낳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통일인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통합, 즉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고, 감상적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학교통일교육 분야

가. 학교통일교육 기본지침

서독에서는 1972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78년 주 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통일교육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을 기초로 하여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선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위 지침서가 학교현장에 하루 속히 착근되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교통일교육의 영역

서독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통일교육기본지침(1978)에서 우리는 정치교육에는 통일교육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민족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 넓은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가치관과 평화로운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독의 이러한 정치교육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남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통일 전 남한 학생들의 통일 준비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서독에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적인 갈등 문화 또는 논쟁 문화의 정착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그 안에 원천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평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은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서, 평화의 이념이 민주주의만큼 중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정치교육에서도 평화교육은 매우 강조되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공격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정치 교육의 내용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실

정이다.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통일의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구 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서도 통일 이후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준비교육은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분단 50여년간 누적되어온 상대방에 대한 대결심리와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로서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에 조직화된 비평화적인 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을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한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평화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통일대비교육은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키워주고, 통일 후 있게 될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 가는 능력을 매개하고,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평화교육은 통일준비교육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통일 전 독일은 비록 두 개의 나라이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서독은 양 독일인들이 공통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동독의 발전에 대한 사실적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동독인들 또한 강렬한 통일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동서독 젊은이들간의 연대감을 강조하였다. 이점은 통일 이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서독을 엮는 끈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일민족 구성체로 존재해 왔다. 수 천년 동안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즉, 한 민족이라는 점은 한국 사회 구성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비록 남북한이 다른 길을 갔지만, 동일민족이란 점은 남북간의 이념 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하고, 남북한을 묶는 중요한 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가 민족주의임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 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의 이념은 한핏줄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창출과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실현과 한민족 공동의 변형은 통일 한국의 일차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민족공동체 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통일대비교육의 수업방식은 ‘이질화의 사례집’ 수준을 뛰어 넘어 동질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후 공동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의 동질화 또는 균등화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신적인 통합, 정신상태 또는 의식의 내적인 통일도 중요한 과제인 바, 민족적인 연대 의식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고하게 하는데 남북의 동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다. 학교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둘째,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 셋째, 이를 위해서 상대방,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도록 가르치고,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의 통일교육 목표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립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해를 중요시하는데, 무엇보다 학교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독일의 경우처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이를 통한 통일의식 함양에 우선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라.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1970년대 동방정책을 편 후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동독에 대한 실상을 편견 없이 바로 알리는 교육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남북한 화해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한 무지와 편견과 불신은 통일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 알리고, 이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동질성과 상이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며, 상호 이해의 수용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통일교육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에서 서독사회의 여러 특징들, 동독의 정치·경제적 상황,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 독일 역사와 동서냉전, 독일 분단 문제, 동서독 비교, 통일정책, 국제관계 등 비교적 폭넓게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통일문제가 단순히 독일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통일 문제는 국내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에서도 남북한 및 아시아의 역사,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등 폭 넓게 내용을 다루어서 학생들

로 하여금 넓고 깊게 통일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마.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학교통일교육방법과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통일교육 자료 발간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북한이해,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답 등의 발간물과 더불어 실제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참고자료,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여 통일교육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통일교육용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체험학습 권장과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학교 내에서 독자적인 연구활동, 공동작업,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체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우수논문 수상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창출 및 실현도 중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독일과 같이 통일교육 학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연구활동, 인터뷰, 예술활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통일교육의 큰 효과를 거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들에게 각종 연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적합한 자료들을 스스로 제작하여 통일부 주최 현장 연구대회에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통일부 주최 현장연구대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 학교통일교육 활용자료

독일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문, 라디

오, TV 등 대중매체의 시청각자료, OHP 자료, 통일교육 보충자료, 교사용 통일교육 보충자료, 학생용 통일교육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노력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눈에 띄는 점은 연방정치교육본부가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독일 정치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사회통일교육 뿐 아니라,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뿐 아니라, 통일부 및 통일관련 여러 단체의 자료 개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일교육활용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여 좋은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사회통일교육 분야

가. 중심적 사회통일교육기관

독일에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교육담당기관이 존재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통일교육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통일교육을 일정한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설치하여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이후 독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 준비 및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 국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구 동독 지역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화해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에 통일교육 주무기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교육 주무기관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통일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주무 통일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본부는 일차적으로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의식의 통합을 위해 교육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본부는 남북의 통일 문제에서 더 나아가 통일 관련 영역, 예를 들면, 현재의 남남갈등 문제, 민족통합, 사회통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요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민족교육, 평화교육 등을 통일교육의 이름 아래 폭 넓게 수용할 때 통일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통일교육 주무 기관으로서 통일교육본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통일교육 기획 : 통일교육의 청사진, 방향 제시
- 2) 통일교육 조정 및 유관기관 지원
- 3) 통일교육 관련 사업(교육, 연수, 행사 등) 수행
- 4) 통일교육 관련 자료(학술지, 신문, 잡지, 시청각 자료 등), 교재(교사용, 학생용, 성인용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발간

나. 사회통일교육 대상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성장세대 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기성세대 역시 통일 후 전개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장세대보다는 기성세대가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인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특별히 공무원, 언론방송인, 교원, 통일교육담당자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치교육 또는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교원 등 통일교육 담당자는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일에서는 학교 및 사회 정치교육기관의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 정치교육 담당자를 포함하여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방송인은 사회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통일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는 언론방송인들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언론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사회통일교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회계층에 따라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 다양한 도서와 잡지 등 간행물 발간사업, 시청각 매체 개발, 경연대회, 전시회,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도서와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간행물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발간물과 관련하여 독일은 “정치

교육용 청소년 달력”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우리도 통일교육용 달력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세대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을 포괄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연수 대상도 언론방송인, 통일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청각 매체를 적극 개발하는 등 통일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일에서 영화를 통일교육 매체로 적극 활용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청소년들이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외 영화 가운데 통일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방영하고, 이념성이 적은 북한 영화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TV 활용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원 산하에 통일방송 설치를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북한 관련 방송 매체의 표본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문제, 북한문제, 통일교육 문제를 고루 다루어준다면 현재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 기관으로 출발하여 한국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벤치 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독일의 사설 정치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승인 심사를 통하여 정치교육기관으로 승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통일교육협의회, 대학통일문제연구소, 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쟁, 심의,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수행되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직후 연수 내용, 방법, 강사, 희망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나

통일교육전문위원 등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원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하였는지를 교육 이수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 사회통일교육의 방법

과거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주입식 강의방식 위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해 교육의 내면화 효과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은 교육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교육대상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이 다양하게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등 다양한 통일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시청각 자료는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현재 국내 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연수방법은 주로 강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방법이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우리의 통일교육 연수 방법이 좀 더 다원화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통일교육에서 인터넷 등 현대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홈페이지는 일차적으로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소개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정치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정치교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정치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교육은 특별히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체험학습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많은 정치교육 연수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현장 방문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이나 동아시아 정치교육 연수는 체험학습이 지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일반 연수에서도 정치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 지역에 장소를 정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수학 여행에서도 정치교육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살아 있는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노력은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 외,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권영경, “통일의식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에 대한 논평,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제 28주년 기념 교육정책 포럼,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과 교육의 과제」, 2000, 63-64.
- 김경웅(편저), 「정치교육론」, 유풍출판사, 1982.
- 김정환, “평화교육학의 이론과 과제”, 김정환, 「현대의 비판적 교육이론」, 박
영사, 1988, 59-86.
- 김창환, “통일 후 나타난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상호 부적응과 갈등 문
제”, 「디다케」(1999년 12월), 103-108.
- 김창환, “독일 통일 10주년과 그 교훈”, 「교육개발」, 2000년 가을호.
- 김창환 외, “통일 후 독일의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한독교육학
연구」, 제 4권 제 2호(1999), 41-90.
- 김창환 외, 「공산권과 비공산권의 통일비교 연구」, 2000.
- 김택환 외,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1987.
- 김학준, “분단사의 재조명”, 이흥구,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
사, 1984, 25-31.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부, “독일 정치교육의 위상과 목표”, 박재윤,
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1992, 81-121.
- 「독일통일백서」, 통일원, 1994.
- 「독일 통일 2주년 중간 결산」, 주독 대사관, 1992.
- 문용린 외,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서독 문교부 회의,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 문교부의 교육지침”, 박재윤, 백
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1992, 51-72.
- 신용철,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 「통일

- 문제연구」, 제 2권 1호(1990년 봄), 102-155.
-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제 2권 3호 (1990년 겨울), 153-183.
- 오인탁, “평화교육의 이념과 내용”, 「기독교사상」, 32권 9호(1988년 9월), 100-113.
- 오인탁, “평화교육의 근거와 조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성숙한 교회와 평화교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195-206.
- 오인탁, “평화교육의 개념과 우리의 과제”, 「우리교육」, (1991년 10월), 38-43.
- 오인탁, “통일독일에서의 교육의 역할”, 「기독교사상」, 416(1993.8).
-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 북한, 통일 연구 논문집(6)」, 통일원, 1992, 387-483.
-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햇빛출판사, 1991.
- 장석은, 「분단국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1990.
- 전득주, 「독일연방공화국 - 정치교육, 민주화 그리고 통일」, 대왕사, 1995.
-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유풍출판사, 1999.
-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 고려원, 1988.
- 통일부, 「2002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원, 「독일 통일 3년 현황과 전망」, 1994.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 교육통합 파생문제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3.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2001.
-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0.
-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

- 개발원, 1998.
- 한만길 · 김창환 · 정지웅,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1998.
- 한상우,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통독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92 북
한, 통일 연구 논문집(6)」, 통일원, 1992, 287-341.
- 한상우, “통독 이후 교육, 문화부문에서의 통합에 관한 고찰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제 5
권 4호(1993년 겨울), 94-127.
- 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문동환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평화교
육과 민중교육」, 풀빛, 1990, 110-141.
-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황병덕, 「동서독간 정치통합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황성모, 「통일독일현장연구」, 도서출판 일념, 1990.
-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K der SED,
Staatsbürgerkunde - Klasse 7-10, Berlin, 1984-1989.
- Anweiler, O.,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1988.
- Baske, S.(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über die Grundsätze für die
Aus- und Weiterbildung der Werktätigen bei der Gestaltung
des entwickelten gesellschaftlichen Systems des Sozialismus in
der DDR vom 16. Sept. 1970*”, 1970.
- Beyer, H.-J.,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 Böhnisch, L., u.a., *Gesellungsstudie*, Dresden, 1992.
- Bosse, H., Hamburger, F., *Friedenspädagogik und Dritte Welt*, Stuttgart,
1973.
- Brähler, E., Richter, H.-E., “Deutsche Befin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0-41/1995.
- Bulmahn, T., "Zur Entwicklung der Lebensqual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1993.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bericht 1985*, Bonn, 1986.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Bonn, 1982.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85-1999*, Bonn, 1986-2000.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 Bonn, 1999.
-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1992.
- Döbert, H., *Das Bildungswesen der DDR in Stichworten*, Neuwied, 1995.
- Dorst, W., *Die polytechnische Bild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1953.
- Dürr, O., *Frieden - Herausforderung an die Erziehung*, Stuttgart, 1971.
- Emmerling, E.,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1958.
-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7-11.
- "Erlaß über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
- Feige, W., u. a., *Unterrichtshilfen Staatsbürgerkunde*, Ost-Berlin, 1980.

- Förster, P., Friedrich, W.,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 Freiwald, H., u.a., *Das Deutschlandproblem in Schulbüchern der Bundesrepublik*, Düsseldorf, 1973.
- Freya, K., *Lüg Vaterland*, München, 1990.
- Fuchs, H. W., Reuter, L. R.,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1995.
- Galtung, J., "Probleme der Friedenserziehung", *Zeitschrift für Pädagogik*, 19(1973), 185-200.
- Geißler, R., "Nachholende Modernisierung mit Widersprüchen - Eine Vereinigungsbilanz aus modernisierungstheoretischer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Gesamtdeutsches Institut -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Filmkatalog 1985 - Filme zur deutschen Frage*, Bonn, 1985.
- Geulen, D.,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Opladen, 1998.
- Glatzer, W., Ostner, I., *Deutschland im Wandel*, Opladen, 1999.
-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 Hafemann, H. "Von der Schwierigkeit, Demokratie und Selbstorganisation einzuüben - Erfahrungen im Aufbauprozeß des Landesjugendrings Thüringen", *ZfPäd*, 30. Beiheft, 1993, 283-297.
- Hicks, D., 고병현(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도서출판 서원, 1993.
- Institut für empirische Psychologie(Hrsg.), *Die Selbstbewußte Jugend -IBM-Studie '92*, Köln, 1992.
- Klein, H., *Bildung in der DDR - Grundlagen, Entwicklungen, Probleme*, Hamburg, 1974.
- Knoll, J. H., Siebert, H., *Erwachsenenbildung - 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1968.

- Küpper, Ch.(Hrsg.), *Friedenserziehung*, Opladen, 1979.
-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für die Grundschule*, 1971.
-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Sozialkunde – Gymnasium*, 1984.
-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Lehrplan Gemeinschaftskunde in der Oberstufe des Gymnasiums*, 1983.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Hrsg.),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Stuttgart, 1982.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Politische Bildung in Baden-Württemberg. Einrichtungen und Aktivitäten*, Stuttgart, 1984.
- Langguth, G., “Politische Stiftung und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4, 1993.
- “Leitbild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
- Lindner, W., u. a., “Ziel, Inhalt, Methoden, Organisationsformen und Mittel der sozialistischen Erziehung”, *Pädagogik*, 9(1971).
- Mietzner, U., *Enteignung der Subjekte – Lehrer und Schule in der DDR*, Opladen, 1998.
-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1988.
-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Hrsg.), *Vorläufige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ische Bildung*, Potsdam, 1994.
- Müller, P., *Praxis der Erwachsenenbildung in der Gemeinde*, München, 1986.
- Neuner, G., *Zur Theorie der sozialistischen Allgemeinbildung*, Berlin, 1973.
- Nicklas, H./ Ostermann, A. “Überlegungen zur Ableitung friedensrelevanter

- Lernziele aus dem Stand der kritischen Friedensforschung”,
Zeitschrift für Pädagogik, 19(1973), 225-233.
-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Hrsg.), *Allgemeine Richtlinien und Richtlinien für den Unterricht in den Fächern Erdkunde, Geschichte,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Hannover, 1970.
- Niehuis, E., *Analys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r BRD und der DDR*, Heidelberg, 1973.
- Niermann, J.,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 Olbrich, J.,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Bonn, 2001.
- Papst, M., Schuster, D.,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 Pfister, H.(Hrsg.), *Friedenspädagogik Heute. Theorie und Praxis. Ein Handbuch für den Lehrer*, Waldkirch, 1980.
- Pöggeler, F.,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1992.
- Politik und Recht: Arbeitsbuch für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Frankfurt: Verlag Moritz Diesterweg, 1970.
- Politik und Recht: Lehr- und Arbeitsbuch für Sozial- und Gemeinschaftskunde*, Frankfurt: Verlag Moritz Diesterweg, 1973.
- Pollack, D.,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Richtlinien zur Förderung von Veranstaltungen 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durch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
- Röhrs, H., *Erziehung zum Frieden*, Stuttgart, 1971.
- Ruddies, G., *Erfolgreiche Erwachsenenbildung*, Villingen-Schwenningen, 1991.

-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Schwalbach, 1999.
- Schlegel, U., Förster, P.(Hrsg.), *Ostdeutsche Jugendliche*, Opladen, 1997.
- Schmidtchen, G., *Wie weit ist der Weg nach Deutschland? – Sozialpsychologie der Jugend in der postsozialistischen Welt*, Opladen, 1997.
- Der Spiegel*, 27/1995.
- Spittmann, I., “Fünf Jahre danach – Wi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 *Berliner Statistik 2000*, 20–22.
- Strohschneider, S.(Hrsg.), *Denken in Deutschland – Vergleichende Untersuchungen in Ost und West*, Bern, 1996.
- Sturzbecher, D., Kalb, K., “Elterliche Erziehungsziele in der ehemaligen DDR und der alten Bundesrepublik“,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0(1993), 143–147.
- Sußmann, R.,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Langfristige Wirkungen*, Opladen, 1985.
- Thierse, W., u.a.(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2000.
- Ulshöfer, R., Götz, Th.(Hrsg.), *Politische Bildung – Ein Auftrag aller Fächer*, Freiburg, 1975.
- Vollbrecht, R.,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Opladen 1993.
- Weidenfeld, W., Korte, K.-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1996.
- Die Welt vom 3. Juli 1995*.
- Wulf, Ch.(Hrsg.), *Friedenserziehung in der Diskussion*, München, 1973.
- <http://www.bpb.de>.

부 록

- 부 록 1.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
- 부 록 2.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과서 내용
- 부 록 3. 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서 내용
- 부 록 4.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 부 록 5.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 전문
- 부 록 6.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
- 부 록 7. 전독연구소 소장 통일 관련 영화

《부 록 1》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육과정기본계획안

1) 라인란트-팔쯔 주 “사회”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

<11학년>

단원주제	학습목적	주요 학습 내용
서독 사회의 특징, 구조, 문제점	독일 인구변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문제점 파악	- 인구변화 -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비판 적 입장	- 직업·수입·재산구조 이해 - 사회적 약자 - 계층, 엘리트, 사회이동, 교육, 사 회적 역할 등
	사회적 계층 결정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 계층특수적인 교육행태와 그 원인 - 기회균등 - 직업교육의 현황, 청소년 실직문 제 -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사회적 규범과 가치변화가 갖는 정 치적 의미 파악	-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사회화의 의미 - 여성과 직업 - 교회 - 여가시간과 여가행태 - 청소년 그룹
마르크스 사회이론 의 기초	- 마르크스 사회이론의 기초와 기 본 개념 파악 - 마르크스 인간학과 소외 이론, 역 사적 사회주의, 정치경제, 혁명이 론 이해	- 계급 - 계급 투쟁 - 잉여가치 - 무계급 사회
	레닌에 의한 마르크스 이론의 수용 과 전개과정 이해	- 당의 역할 - 혁명 이론 - 프롤레타리아 독재
	마르크스 비판주의자들과 신 마르크 스주의자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비판 이해	- 인간이해 - 역사이해 - 마르크스가 보는 역사발전과정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 경제원칙 - 상품과 재화의 순환 - 시장과 가격 형성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 경쟁원리, 카르텔법 - 기본법이 보장하는 경제자유권 -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보장제도
	연방중앙은행과 연방정부의 국가적 경기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	- 통화정책 - 자유시장정책 - 무역정책
	시장경제적 해결책의 가능성과 한계	- 현재 독일 경제상황 - 구조조정 정책 - 투자촉진과 경제지원 - 성장의 한계
	분배 정의 문제에 대한 이해	- 수입과 재산의 분배 - 임금과 수익 - 재산형성 모델
동독의 중앙집중 경제	동독 중앙경제체제의 제도, 과정, 문제점 이해	- 동독에서의 경제정책 결정 조건 - 경제계획 과정 - 경제계획위원회
	동독 경제의 이념적이고 법적인 기초 이해	- 경제, 재산, 노동에 대한 동독 헌법의 규정 -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 작업세계 조직형태로서 협동농장 - 노조의 기능
	동서독 경제체제 비교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	- 비교준거 · 효용성 · 가격형성과 욕구충족 · 사회적 정의 ·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12학년>

단원주제	학습목적	주요 학습 내용
서독에서의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	일상적인 정치경험 분석을 통하여 정치 대상, 과제, 한계에 대한 인식	- 운전면허시험 - 특정집단의 이해와 전체 공동체의 복지 사이의 갈등 - 행정
	정치적 의지 형성의 조건을 이해하고,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전략에 대한 토론	- “정당민주주의” - “이해단체국가”
	정치적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 사례 분석 및 토론	- 정치적 참여 - 시민단체
	정당의 정치적 기능을 국민의 정치참여적 관점에서 분석	- 정당 - 정당법 - 정당 내의 민주주의
	정당 금지의 이유에 대한 이해 및 극단적 정당에 대한 토론	- 연방헌법재판소 - 극단적 정당에 대한 법적 판결 사례 -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

	정당의 득표활동의 방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득표활동과정 - 특정 정당 지지자 - 유권자의 행태 - 선거 분석
	여러 선거제도와 서독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결의 원칙 - 자유·평등·직접·비밀선거제도
	선거에 의한 정당화 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스 베버 :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리적 적법성
서독에서의 정치 행위	국가 헌법기관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권력 분리
	민주적 권력의 기초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20조
	입법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역할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과정 도식 - 입법 사례
	정치적 지도의 헌법적 기초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수상 - 정치지배 스타일 - 관료주의
	입법과정에서 정당, 의회의원, 이해단체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영향력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
	연방의회의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능력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주의-중앙집권주의 -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의회에 대한 평결
	연방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대통령
	정치적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평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정치의 관계 - 법치국가
	집권당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정권 - 다수결의 원리 - 국제적 관련성 고려
	서독 정치제도에서 야당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당
	정치결정에서 타협의 가능성과 한계와 가치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 의견일치 - 타협
	입법과정과 법의 적용에 대한 사례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영향력 - 정권부 - 입법부 - 행정 - 관료주의
	국회의 내부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 국회 운영방식
	소속 정당과 개인의 양심 사이의 국회의원의 갈등상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21조와 38조 사이의 긴장관계
	의회의 조정권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조정권한 - 조사위원회 등 의회 조정권한의 영향력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견의 논거와 착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의회의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 방식 	

동독의 정치제도	동독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서독의 정치제도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성 ·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 정치참여 · 가치 및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 국민 기본가치의 보장
동독의 정치제도	공산주의 정당의 상이한 민주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의 정당”으로서의 독일공산당 - “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
	동독과 서독 선거의 과정, 기능,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선거 - 동독 의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정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위원회 - 정부 - 당수, 국가원수, 수상
	동서독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이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공산당 평결 사례 - 부분적 대표와 전체적 대표

<13학년>

단원주제	학습목적	주요 학습 내용
1917년 공산주의 혁명	1917년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1917년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이념이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이념이 되었음을 알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슨 : 정치의 민주화와 국제조약을 통한 평화정착 - 레닌 : 계급투쟁, 혁명, 제국주의와 전쟁의 원인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해체
	1917년 이후의 국제정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국내문제에만 관심, 외국과의 관계는 경제문제에만 집중 - 소련 : 혁명 후 불안한 국내정세, 잠정적인 외교적 고립
1945년의 세계 연합 구상	제 2차 세계대전이 세계 정치에 미친 영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소련이 세계 정치의 중심국가로 부상 -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강대국에서 제외됨 - 프랑스와 영국은 두 번째 강대국으로 존속
	1945년 이후 국제관계와 평화정착을 위한 루스벨트의 국제연합 구상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를 위한 모든 국가의 협력 -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 - 개방적 시장경제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한 점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대국 · 핵무기 보유
	소련의 반대세력 형성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에서 소련 중심의 평화질서 형성 - 위성국가 연합

냉전	동서 대립의 형성과정, 외교·안보정책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국 회의 - 이념적 대립 - 동유럽의 소련화 - 냉전 -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전략과 정치적 목적의 관련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의 목적으로서 자유 안에서의 평화 - 정치의 과제로서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 - 서방 연합의 안보
	군사위협 정책의 영향력과 위협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위협 정책의 평화유지기능 - 핵무기 증가의 위협요소 - 무기 증가의 경제적 비용
	군비증가 통제에의 동기, 목적, 형태 및 긴장완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비증가 통제 노력 - 군축 - 안보와 군축의 관계
연방군대	연방 군대 설치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유럽 연합의 안보와 평화 - 주권의 확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장 군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으로서의 의미 - 기본법 내에서의 군인으로서의 행동
	병역의무와 징집불응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병역의무법) - 징집불응에 대한 기본권 - 병역에서의 정의
동서 갈등과 독일문제	“두 개의 국가 - 하나의 민족”이라는 테제에 대한 이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 규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146조 -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결정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민족 - 문화민족 - 사회주의 민족
	서독의 민족 개념과 자결권과의 관련성 이해	
	동서독의 통일과 유럽통합과의 밀접한 관련성 이해	
통일정책	독일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5 : 독일연합 - 1871 : 독일제국
	독일 분단이 나찌가 원인을 제공하였고 동서대립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전국 외교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독일 - 소련과 서방국가의 상이한 점령 정책 - 1945년 이후 강화된 동서대립 - 서독과 동독 국가의 건설
	아데나우어 초대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소련의 반응을 분석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인의 인권과 시민권 - 국제관계, 나토,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의 맥락에서의 통일정책
동방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초와 중요 요소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의 접근 - 동서독의 공존 	

	상이한 체제의 두 국가간의 조약의 가능성과 기회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 기본조약 - 조약국의 이해관계와 상이한 해석 - 조약의 영향
	독일정책이 동서 양 진영의 화해 또는 긴장완화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통일과 동서독 관계 - 동독의 폐쇄정책 - 민족적 이해와 국제관계의 발전
	정치적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분단의 불합리성을 이해하고, 자유와 평화의 원칙 아래 통일이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	
독일분단으로서의 베를린	베를린이 독일 분단의 거울임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이고 정치적-법적인 특별 위치로서의 베를린 - 1948/49년의 베를린 위기 -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 1971년 승전국의 합의사항
유럽연합의 형성배경	유럽연합의 근본 동기와 목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 - 유럽의 역사, 지리, 정치
	유럽통합과정의 목적과 방법과 관련한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국가, 연방의회 - 기능적 연합국가
	유럽통합의 노력, 난점,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유럽경제공동체 등 제도와 기능에 대한 이해 - 결정과정의 구조 - 개별 국가의 관심과 예외사항 - 각종 정책(농업, 지역, 경제 등)
	유럽통합 진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선거 - 유럽통합 - 평화, 자유,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 통합 유럽의 기여
국제관계의 상호의존과 복잡성	국제적 갈등구조의 기초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상호의존성 - 국제정치의 주역, 이해관계, 동기, 목적, 수단
	국제관계 변화의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 구조의 역동성 - 양자대립, 다자대립 - 동서갈등과 남북갈등 - 개별국가의 기능 상실 - 제3세계 역할의 증가
국제조약법주안에서의 정치행위	UN의 역할과 기능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총회, 안전보장이사회, 하위조직 - UN 내에서의 갈등 - 국제정치에서의 UN의 기능
	국제정치에서 독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공동체, 나토, UN 안에서의 외교정책 - 개별 국가 외교정책의 한계
국제정치 변화와 전망	국제정치의 변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결, 공존, 협력 - 무력 사용의 증가/감소 - 신식민주의
	이해관계 조정, 사회정의 구현, 평화정착을 동기화 하는 국제관계의 변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이해관계 - 국제정치의 규범과 목적
	국제관계의 변화가 촉진되거나 약화되는 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된 공존 - 상호 협력 - 국제관계의 중심으로서의 UN - 선진국과 후진국의 협력

2) 니더작센 주 “사회” 교과 교육과정기본계획안

<9학년>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사회심리의 기본 개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그룹 ○ 집단심리 ○ 공동체의 편견
청소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과 그것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과 여가 ○ 청소년의 법적 지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와 갈등 ○ 공동체의 과제 ○ 공동체 이해 관련 사례

<10학년>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서독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조의 변화 ○ 서독의 사회계층 ○ 직업의 구조 변화 ○ 이해관계의 갈등양상과 사회단체의 역할
서독의 정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 서독의 정치제도 ○ 서독의 정당 ○ 법, 판결
동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당으로서의 독일공산당과 하부조직 ○ 동독 국가 ○ 법, 판결 ○ 동독 사회의 발전과정

<11학년>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경제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생산 ○ 서비스 산업 ○ 경제 원칙
경제 순환과정과 경제행위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 생산 ○ 시장과 수요공급과 가격형성 ○ 국가의 역할
국가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립과정 ○ 증감 ○ 다른 나라와의 비교
현대적인 경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 모델(서유럽) ○ 중앙집권적 모델(동유럽) ○ 국가와 경제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동서유럽의 변화
초국가적 경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조직의 종류 ○ 개별국가경제와 세계경제의 관계 ○ 개발도상국가

<12~13학년>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산업화와 산업사회	산업화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그룹 ○ 전통적 경제질서와 합리적 경제질서간의 갈등 ○ 시장의 확대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농업 혁명 ○ 기술 혁명 ○ 인구구조의 혁명적 변화 ○ 기업체와 국가 관계의 변화
	산업사회로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탄생 ○ 노동의 조직화 ○ 생산과정의 변화 ○ 생산의 증가 ○ 합리적 계획 ○ 시장경제로의 변화 ○ 국가의 간섭의 확대 ○ 농업 생산성의 증대 ○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형성 ○ 전세계 경제의 산업화의 필요성 ○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관계

산업화와 산업사회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사회구조의 변혁 ○ 노동자 계급의 사회운동 ○ 마르크스의 이론: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계급투쟁 ○ 19세기의 기타 사회적 문제 ○ 19세기와 20세기의 발전 ○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구조 ○ 대안적 사회상
	현대 산업사회의 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분야의 변화 ○ 다양한 직업교육의 필요성 ○ 기업체의 경제권력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안정적 추진 ○ 경제생활(소비와 절약, 재산형성, 노동과 여가에 대한 인식) ○ 계급사회 또는 중산층 사회 또는 다원화 사회 ○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 ○ 다원화된 산업사회의 긴장요인들
민주주의의 구조와 문제점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형태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구조 ○ 서독의 의회민주주의 제도 ○ 서독의 정당과 선거제도 ○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 ○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 현대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초 ○ 여론의 기능
	사회의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적인 요소 ○ 이해집단의 다양성 ○ 교육분야에서의 기회균등의 실현 ○ 남녀평등의 기회와 한계 ○ 사회제도에서 권위구조의 점진적 해체 ○ 민주주의의 모델로서의 비례대표제 문제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현실과의 갈등, 자유권과 평등권의 모순 ○ 비민주적인 세력에 의한 헌법 오용의 가능성 ○ 정치와 법과의 관계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서 경제권력의 집중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범위 ○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구조의 잔재 ○ 현대사회의 기술화와 관료화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 ○ 여론 조작의 가능성 ○ 갈등과 합의의 대립 ○ 기회균등 실현에 있어서의 사회적 저해요인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핵무기 시대에서 세계정치의 긴장과 갈등	냉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정치구조에 미친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 무기개발 기술의 새로운 차원 ○ 서독의 자유동맹에의 편입과 동독의 공산주의 동맹에의 편입
	권력과 이념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사회체제의 경쟁 ○ 정치적 대립의 기본적 문제점 ○ 제 3세계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해방전쟁 ○ 제 3세계 국가간의 갈등 ○ 국가간의 권력 갈등
	위기 해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을 통한 위기 해소 ○ 불간섭을 통한 위기 해소 ○ 군축, 국제경제협력, 이념적-인종적 대립의 해소를 통한 평화와 균형 유지의 가능성
제 3세계의 등장과 개발도상 국가의 문제점	식민지 시대 이후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공백과 소련 공산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영향 ○ 새로운 국가탄생과 세계정치적 문제점들 ○ 선진국으로서의 일본
	아프리카와 세계정치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의 세계정치적 영향 ○ 새로운 국가의 탄생과 동서 진영과의 정치적 관계 ○ 북아프리카 국가와 아랍 동맹과의 관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원조, 개발도상국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 개별 국가 발전의 특수 문제점들 ○ 개발도상국 원조의 동기 ○ 개발도상국 원조의 종류 ○ 개발도상국 정책의 문제점
미래의 세계	기술 발전을 통한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발전의 세계적 영향 ○ 식량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국제 무역의 필요성 ○ 다국적 기업, 국제경제공동체의 탄생 ○ 선진국 산업구조, 사회구조의 평준화
	전통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세계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한 세계 교회의 협력 ○ 국제노동조합
	세계이해를 위한 정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국가의 평등과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UN ○ 세계 평화조직으로서의 UN
	정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시대의 안보 딜레마 ○ 이념적, 민족적, 인종적 편견과 도그마의 극복 ○ 제 3세계의 발전

《부 록 2》

통일 전 서독의 “사회” 교과서 내용

1) 1970년 교과서

단 원 개 관
1.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2. 동독(DDR)의 헌법
3. “사회주의 건설”
4. 1953년 6월 17일 항쟁
5. 소련화의 과정
6. 동독(DDR)의 동구권에의 편입 과정
7. 독일 통일의 문제점 7.1.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7.2.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7.3. 독일 국가와 독일 국민 7.4.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의 성명서

단원주제	1단원 : 소련 점령지가 독일 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점령 및 지배에 대한 소련의 계획 소개 ○ 동독 지역에 공산주의 국가 건설 과정 서술 ○ 동독 지역에 공산주의 정부, 국회의 성립과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점령 및 지배 계획은 1943년부터 시작함 - 공산주의 정당의 성립과정 - 국민 선거 없이 소련의 의지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 건설됨 - 국민 선거 없이 동독지역에 정부와 의회가 구성됨 - 이 모든 과정은 소련의 전략임 - 소련은 술수와 테러를 통하여 반대파를 제거하고 친 소련 위성 정부를 세움

단원주제	2단원 : 동독(DDR)의 헌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헌법은 형식적으로만 민주적임 ○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정당(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행사함 ○ 동독 지역은 5개 주로 구성되며, 고유한 주정부와 주의회를 갖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부가 실권을 행사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헌법은 형식적으로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동독에서는 정당들이 공산주의 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정부의 주요 요직은 공산주의 간부가 소유하고 있고, 강압선거가 행해지고, 찬반투표만 가능한 등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특징을 찾을 수가 없음 - 따라서 헌법과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 - 동독은 5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가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실권을 행사함

단원주제	3단원 : “사회주의 건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 동독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촉진”을 발표함 ○ 이후 동독 정부는 서독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함 ○ 그 결과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탈출하여 서독으로 이주함
주내 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것을 공표함 -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경찰을 강화함 - 서독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함 -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함 - 소련의 모범에 따라 법체계를 세움 - 예술, 학문, 스포츠,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화시키고, 모든 산업과 개인재산을 국유화함 - 그 결과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함 - 이 점은 동독의 농업경제에 치명타를 가함

단원주제	4단원 : 1953년 6월 17일 항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6월 17일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에서 정부에 대항하여 봉기함 ○ 자유선거와 독일통일이 주요 요구사항임 ○ 사태가 확산되자 소련이 무력으로 개입함
주내 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6월 9일 동독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인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1953년 6월 17일 동독 국민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봉기함 - 동독 주민들은 자유선거와 독일의 통일을 외침 - 동독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련이 무력으로 개입하여 봉기를 제압함 - 서독 국회는 6월 17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

단원주제	5단원 : 소련화의 과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 사태 이후 동독 정부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함 ○ 이후 소련의 우방으로서 소련화의 과정이 촉진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 사태 이후 동독 정부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 - 1960년 농업 부분의 집단화를 강압적으로 완성함 - 1961년 새 노동법이 제정되어, 파업이 금지됨 - 동독 의회는 국가원수제도를 철폐하고, 국가이사회 제도를 도입함 - 국가이사회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음 - 국가이사회 의장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게 됨

단원주제	6단원 : 동독(DDR)의 동구권에의 편입 과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은 195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 폴란드와 국경협정을 맺음 ○ 동구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협약기구에 가입함 ○ 1955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 ○ 1955년에 소련과 국가조약을 체결함 ○ 1956년에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체결함 ○ 1964년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상호조약을 체결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50년에 중국, 북한, 몽골로부터 국가로서 승인받음 -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함 - 1950년에 폴란드와 오더-나이스 강을 경계로 국경조약을 체결함 - 서독 정부는 폴란드와의 국경 조약에 반대입장을 표명함 - 1950년에 동구권국가들과 상호경제원조협약(코메콘)에 가입함 - 이후 동독은 동구권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함 -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 - 1955년에 소련과 국가조약을 체결하여 동독을 정식국가로 인정함 - 1957년에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체결하여 소련군이 동독 지역에 주둔하도록 함 - 1964년에는 소련과, 1967년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와 상호 협력 조약을 체결함

단원주제	7단원 : 독일통일의 문제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설명 ○ 독일 통일에 대한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설명 ○ 독일 국가, 독일 민족, 독일 국민의식에 대한 설명 ○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의 성명서 전문 소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 정부는 1949년의 기본법에서 독일 통일까지만 적용되는 잠정적인 헌법을 공표함 - 서독은 독일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동독 정부는 동독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입장만 대변함 - 서독 정부는 보통선거, 직접선거, 자유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선출된 정부임 - 따라서 서독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국내, 국외를 대표함 ○ 독일 통일에 대한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동독 헌법은 독일 지역에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함을 천명함 - 그러다가 동독 정부는 소련의 영향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독일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함 - 독일 통일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방 형태를 통해 가능함을 주장함 - 서독 정부가 이 입장을 거절하기 때문에 두 정부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함 - 그럼에도 두 국가 사이에는 경제 및 인적 교류가 행해짐 -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거리는 점차 멀어짐 - 동독이 새로운 국기를 채택한 점, 1961년의 베를린 장벽 건설이 그 점을 설명해 줌 ○ 독일 국가, 독일 민족, 독일 국민의식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국민 의식은 독일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 때 가능한데 그것을 민족국가라고 부름 - 민족국가는 프랑스 혁명 때에 탄생한 개념임 - 모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국가론은 이후 19-20세기 서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유럽은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간의 분명한 경계설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음 - 국가민족의 대안으로서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음 -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됨 - 국가민족 및 문화민족과 더불어 조국애와 향토애라는 개념이 등장함 ○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국회의장이 1961년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이후 독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가 총 533일이나 개최됨 - 독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임 - 독일과 국제평화를 위하여 평화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음 - 평화조약에는 1) 미래 전체 독일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위치, 2) 법적이고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국경문제, 3) UN 헌장에서 보장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함

2) 1973년 교과서

단 원 개 관
1.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1.1.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1.2.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동독 1.3. 동독(DDR) 사회의 변혁 과정 1.4.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령 1.5. 1968년 동독 개정 헌법의 서문
2. 동독(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정
3. 독일 통일 관련 문서 3.1. 헌법 내용 3.2.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3.3. 독일 국민, 독일 민족, 독일 국가 3.4. 외교정책적 측면

단원주제	1단원 : 소련점령지가 독일민주공화국(DDR)으로 발전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의 주요 사건 ○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동독(DDR) 소개 ○ 동독 사회의 변혁 과정 소개 ○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령 등 일련의 과정 설명 ○ 1968년 동독 개정 헌법의 서문 소개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의 주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점령 및 지배 계획은 1943년부터 시작함 - 공산주의 정당의 성립과정 - 소련 군정의 주요 정책 소개 - 국민 선거 없이 소련의 의지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됨 - 1947년 국민 선거 없이 동독지역에 정부와 의회가 구성됨 - 소련은 술수와 테러를 통하여 반대파를 제거하고 친 소련 위성 정부를 세움 2. 중앙집권적 연합국가로서의 동독(DDR)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모든 기관을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함 - 1950년부터 1971년까지의 동독 의회 선거의 과정 및 결과 소개 - 동독의 주요 국가기관 소개 - 동독 국가(國歌) 소개 - 동독의 지방자치제도, 기관, 영토 소개 3. 동독 사회의 변혁 과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변혁”(1945-5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국유화 단행 - 1945년 사유재산의 국유화 ○ “사회주의 건설”(1952-57년) ○ “사회주의의 완성”(195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집단화 및 학교제도의 사회주의화 4. 6월 항쟁 - 국경폐쇄 - 발포명령 등 일련의 과정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의 6월 항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정부의 “새로운 방향” 선포 - 동베를린에서 대중들이 항의 시위를 벌임(시위과정 자세히 소개) - 6월 항쟁의 성격과 결과 - “새로운 방향”의 종말 ○ 국경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46km 길이의 서독과 맞닿은 국경을 폐쇄함 - 각종 군사시설로 무장함 -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면서 동독의 국경으로 확정됨 ○ 발포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을 허가 없이 넘어갈 때 발포명령이 국경수비대에 부여됨 5. 1968년 동독 개정 헌법의 서문 소개

단원주제	2단원 : 동독(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은 195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 폴란드와 국경협정을 맺음 ○ 동구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함 ○ 1954년 주권국가 선언 ○ 1955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 ○ 1955년에 소련과 국가조약을 체결함 ○ 1956년에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체결함 ○ 1964년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상호조약을 체결함 ○ 서독의 서방세계로의 편입과정, 동독의 동구권으로의 편입과정 소개 ○ 동서독의 군대규모 소개 ○ 서독 연방정부의 동방정책 소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50년에 중국, 북한, 몽고로부터 국가로서 승인받음 -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함 - 1950년에 폴란드와 오더-나이스 강을 경계로 국경조약을 체결함 - 서독 정부는 폴란드와의 국경 조약에 반대입장을 표명함 - 1950년에 동구권 국가들의 상호경제원조협약(코메콘)에 가입함 - 이후 동독은 동구권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함 - 1954년에는 동독 스스로 주권국가를 선언함 -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 - 1955년에 소련과 국가조약을 체결하여 동독을 정식국가로 인정함 - 1957년에는 소련과 군사조약을 체결하여 소련군이 동독 지역에 주둔하도록 함 - 1964년에는 소련과, 1967년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1972년에는 루마니아와 상호 협력 조약을 체결함 -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태에 동독의 군대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으로 참가함 - 서독의 서방세계로의 편입과정, 동독의 동구권으로의 편입과정 소개 - 동서독의 군대규모 소개 - 서독 연방정부의 동방정책 소개 · 1955년 : 서독수상 아데나우어가 소련을 방문하고 외교관계 수립 · 1967년 : 루마니아와 외교관계 수립 · 1970년 : 서독 브란트 수상과 동독 스토프 수상의 정상회담(2회) 브란트 수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무력포기조약 체결 브란트 수상이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무력포기 및 국경조약 체결 · 1971년 : 서베를린에 대한 4개 강대국(승전국)의 협정 체결 · 1972년 : 동서독 교통협약 체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단원주제	3단원 : 독일 통일 관련 문서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내용 소개 ○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소개 ○ 독일 국민, 독일 민족, 독일 국가 ○ 외교정책적 측면 소개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내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서독 기본법 서문 - 서독 기본법 제 146조 - 1949년 동독 헌법 제 1조 제 1항 - 1968년 동독 헌법 서문 - 1968년 동독 헌법 제 8조 제 2항 ○ 성명서, 인터뷰, 기본조약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서독 연방 수상 아데나우어의 정부성명 - 1949년 동독 수상 그로테볼의 정부성명 - 1954년 소련 정부의 성명서 - 1954년 서독 정부의 성명서 - 1960년 철학자 야스퍼스의 TV 인터뷰 - 1964년 소련과 동독의 협정 - 1969년 서독 수상 브란트의 인터뷰 - 1970년 서독 수상 브란트의 국가 현안에 대한 보고 - 1970년 동독 수상 스토프의 정상회담 연설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서독 야당대표의 입장 - 기본조약에 대한 동독 공산당의 입장 ○ 독일 국민, 독일 민족, 독일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국민 의식은 독일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 때 가능한데 그것을 민족국가라고 부름 - 민족국가는 프랑스 혁명 때에 탄생한 개념임 - 모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국가론은 이후 19-20세기 서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유럽은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간의 분명한 경계설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음 - 국가민족의 대안으로서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음 -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됨 ○ 외교정책적 측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독일의 과제임 -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의 지리적 여건상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부 록 3》

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서 내용

1) 7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단 원 개 관	시 간 수
1. 너와 너의 시대(서론)	2시간
2. 의미 깊은 출발점에 대하여	8시간
3. 강력한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위한 싸움에서 이룩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들에 대하여 3.1. 높은 수준의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3.2.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동독의 사회주의 농업 3.3. 사회주의의 높은 사회적·문화적 성취	10시간
4.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 사회주의의 정치적 영도력	5시간
5. 실제 정치적 문제들, 구체적인 사건들, 계급집단(Klassenkollektiv)에 관한 문제와 질문들	5시간
총 시간수	30시간

단원주제	1단원 : 너와 너의 시대(Du und deine Zeit) 2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정치적 발생과 우리들의 공화국 사람들의 삶의 전체 세계와의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 시대 안에서의 사회적인 발전의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세계에 걸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대결에 자신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사회생활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확립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정당(SED)의 정책에 대한 지식과 그 정책의 사회과학적 기초를 결합시키는 것이 과제를 경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의 시대는 세계 안에서 거대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시대이고, 우리들의 사회주의 조국이 강력한 동지들과 함께 평화와 전진을 위한 투쟁을 수행하면서 세계 안에서 점점 더 활동을 강화하고 폭넓게 인정되어 가는 때임 - 너의 시대는 제국주의가 평화를 위협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그 모든 발전적인 운동을 방해하려는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해가는 시대임 - 너의 시대는 사회주의의 강화와 평화 수호에 있어서 명확한 계급적 태도와 역동적인 실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임 - 바른 정치적 세계상과 실천의 정립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책과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임

단원주제	2단원 : 의미 깊은 출발점에 대하여	8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동독의 반파시스트적-민주적 형성을 위대한 역사적 성취로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나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의 황폐함과 혼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동독 형성의 토대로 연결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동독 시민으로서 동독의 형성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 특별히 히틀러 파시즘에 대한 소련의 승리와 반파시스트적-민주적 변혁에 있어서의 소련의 도움에 대한 지식의 획득을 통하여 국제적 조건의 형성에 대한 학습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소련에 대하여 굳은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파시스트적 독일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히틀러 파시즘의 잔재와 서독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적 변혁에 대한 방해에 대한 학습은 특별히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심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독일공산당(KPD)이 독일의 혁명적 변혁을 위한 목적과 길을 마련하였고, 노동자 계급의 인도를 받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KPD가 마련한 길을 따라서 실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관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계급의 단일성과 두 노동자 정당의 사회주의정당(SED)으로의 통합이 반파시스트적-민주적 혁명의 결정적인 토대와 동독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의 노동자-농민 국가의 건설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자유국가의 건설이며, 그것은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통찰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동역자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와 현재에 대하여,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문서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상반되는 계급이익에 대한 두 독일 국가의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들과 대책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 학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습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틀러 파시즘과 독일제국의 유산에 대한 소련의 승리의 의미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독일의 변혁(1945년 6월 11일)과 사회주의정당(SED)의 정초를 위한 독일공산당(KPD)의 목표설정; - 현재 동독 지역에서의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을 위한 투쟁과 그 결실들 - 동독의 설립 - 독일 최초의 노동자-농민 국가
<p style="text-align: center;">주 내</p> <p style="text-align: center;">요 용</p>	<p>■ 1945년 5월 8일 - 독일 제국주의의 파괴적 전쟁의 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제국주의에 대한 소련과 그 연합국들의 승리가 파시즘으로부터의 독일 및 다른 나라 국민들을 해방함으로써 완전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독일 제국주의의 잔재(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측량할 수 없는 슬픔, 피해, 고난, 체념, 혼란) - 독일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독일국민과 소련, 폴란드, 체코 및 여타의 국민들에게 끼친 죄악들 <p>■ 독일의 민주적 변혁을 위한 공산주의적 목표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단계로서 공산주의와 다른 반파시스트 세력의 활동들. 새로운 민주주의적 삶의 시작에 있어서 반파시스트들의 작용, 소련군의 희생적인 도움과 지원 - 1945년 6월 11일의 독일 공산당 선언 - 역사적 교훈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삶의 건설을 위한 과제들(노동자계급의 일치된 행동, 반파시스트적 힘들의 결합, 전쟁유발자, 독점자본가, 지주들의 구금과 무력화, 파시스트적 군국주의적 사고방식과의 투쟁, 독일의 민주주의적 변혁). 민주주의적 정당과 대중조직간의 연대 -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한 주요 과제들의 내면화와 독일의 변화에 대한 포츠담 협정의 확실한 이해(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 - 전범의 처벌, 독일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축출, 민주주의적 질서의 수립) - 독일에서의 민주주의적 권력의 형성 - 1945년: 전체 독일에 걸친 민주주의적이고 발전된 국가수립의 기회

주
요
내
용

■ 사회주의정당(SED)의 탄생

- 독일 노동자 운동의 분열 극복의 필연성.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간의 공동작업. 단일화를 위한 고리들. 독일공산당(KPD)의 주도적 위치. 통일정당탄생일
- 노동자계급의 단일성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과 사회주의적 질서 건설을 위한 전제

■ 동독 지역에서의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의 중요한 국면들에 대한 개관: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권력기관의 형성, 민주주의적 토지개혁, 독점자본가, 전범의 구금과 그들의 소유물의 국유화, 민주주의적 학교개혁
- 사회주의정당(SED)의 영도 아래 독점자본가들과 대지주들의 대항을 분쇄하는 힘겨운 계급투쟁으로서의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예를 들면 작센에서의 국민투표)

■ 점령군의 지원에 의한 서독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복권

- 노동자계급의 연대에 대한 방해, 민주주의적 운동의 억압, 민주주의적 개혁의 제한, 독일의 분열, 서독제국주의자들의 서독 탄생, 파시스트들에 의한 국가기구 장악
- 서독 정책의 목표(독일 제국주의의 복원, 권력의 회복, 사회주의의 탄압)

■ 동독의 탄생

- 국가 탄생 관련 사실들(의회 및 정부의 구성, 공화국 대통령의 선출)
- 반파시스트적-민주주의적 변혁의 결과로서의 동독의 탄생, 독일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농민의 국가, 평화와 진보를 특징으로 함 (정부 선언문 참조).
-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정당의 구성과 노동자-농민 국가의 탄생 -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

<p>단원주제</p>	<p>3단원: 강력한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위한 싸움에서 이룩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들에 대하여 (10시간)</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에서는 동독의 근로자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사회주의적 성취들에 대한 학생들의 분명한 이해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SED)의 영도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동독의 산업 및 농업, 사회제도와 문화에 있어서의 성취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것을 지켜내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필수적임을 통찰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동독에 있어서의 당의 영도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도가 사회주의의 불가침의 기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고되고도 복합적인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이다. -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우리들의 위대한 성취와, 노동과 삶의 조건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발전된 교육과 문화를 위한 원천으로서의 근로자들의 성실하고 과학적인 노력에 대한 지식은 근로자들의 위대한 성취에 대한 긍지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긴장되고 지혜로우며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과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고 그들이 이룩한 성취를 지켜낸 노동자들과 조합농민 안에서, 지식인들과 청소년들의 최고의 변호자들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표상들을 발견하여야 한다. - 동독의 근로자들에 의한 독일의 유일한 사회주의 정당의 효과적이고 강력하며 믿음직한 지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학생들은 노동자계급의 정당에 확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들에 대한 확고한 해명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단원의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를 띠는 사회주의의 성취들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사회의 지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 요 학 습 과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계급과 농민조합 계급의 창조적 열정적 노력, 동독의 발전된 사회주의적 산업과 사회주의적 농업의 높은 생산성을 이룩한 그들의 위대한 노력 - 근로자들의 창조적 노력에 바탕한 산업과 농업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회주의정당(SED)의 영도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근로자들이 사회적 소유제도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위대한 사회적 문화적 성취들
<p style="text-align: center;">주 요 내 용</p>	<p>3.1. 높은 수준의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4시간)</p> <p>■ 동독의 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생산: 현대적 사회주의 경영 및 종합경영(Kombinat), 과학, 기술, 생산 분야에서의 높은 성취의 결과로서의 높은 품질 - 동독 산업과 다른 우방 국가들의 산업과의 뿔 수 없는 연관성. 국제적 연관관계 안에서 명망 있는 동반자로서의 사회주의적 경영 및 종합 경영 - 산업생산의 발전 상태 - 사회주의정당(SED)의 분명한 목표설정예 입각한 인도 아래 근로자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동독 산업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실들 제시: 1945년의 상황, 재건, 불균형의 해소, 소련의 도움, 생산기반의 강탈, 공급의 일원화에 대한 금지, 전문가들의 전직 등의 제국주의의 방해) - 오늘날의 동독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 <p>■ 사회적 부의 주요 산출자로서의 노동자 계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산업과 다른 영역의 생산을 위한, 전체 사회의 부(확실한 사실과 수치의 제시)의 가장 큰 부분을 형성하는 힘이자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의 노동자 계급 - 산업과 기타 영역의 국유제도(국유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적 소유형식이며, 노동자계급의 창조력의 완성을 위한 토대로서의 국유제도 - 사회주의 동독의 산업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창조적 노력과 기술자·과학자들과의 협력, 계획의 완성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필요성, 높은 생산성; 생산품의 높은 품질, 그 결과로서의 국가수요의 충족과 수출책임의 완수, 사회주의적 경영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사회주의적 경영, 사회주의적 노동 집단, 근로자 및 혁신자들의 활동 - 동지들의 표상 - 우리들의 성취력 높은 산업과 계획달성을 위한 투쟁의 결정적인 조건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정당의 지혜롭고 선견적인 인도

주 요 내 용	3.2.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동독의 사회주의 농업 (3시간)
	<p>■ 동독의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 현황: 현대적인 사회주의 농업경영,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서의 높은 생산성에 바탕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 및 원료공급, 높은 농업생산 현황,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 동독의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제 <p>■ 조합농민 계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조합을 만들어낸 조합농민 계급, 노동자 계급의 주요 연대자로서의 조합농민 계급 - 공유제도와 생산적인 집단 소유 제도로서의 조합 소유 제도 - 조합농민, 농민, 기술자, 과학자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철저한 준비와 창조력의 결과로서의 농업분야의 높은 성취수준, 조합 생산과 조합 민주주의의 장점의 지속적인 신장 - 우리들의 생산적인 농업의 결정적인 조건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정당에 의한 지혜롭고 선견적인 지도
	3.3. 사회주의의 높은 사회적·문화적 성취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에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문화적 성취의 기반이 되는 직업 및 의료 보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보장 - 이러한 성취들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정당(SED)을 통한 노동자계급과 다른 모든 근로자들의 지도와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높은 성취 - 보다 광범위한 성취를 위한 사회주의정당(SED)의 사회정치적 프로그램(주택 건축, 근로자들의 수입의 증대, 공급(배급)의 지속적 증대, 의료 및 사회보장의 발전, 교육수준의 향상) - 우리들의 사회정치적 프로그램들을 궤방하려는 제국주의의 시도, 그러한 시도의 격퇴 - 전체 사회와 개개인의 물질적 문화적 삶의 질의 보장과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전제로서의 성실한 노동 - 건실한 전문적 정치적 인식과 높은 문화 수준의 역할, 사회주의 국민의 자격으로서의 높은 성취를 위한 훈련과 노력, 검약, 동참, 동료애에 바탕을 둔 협조

단원주제	4단원 :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 사회주의의 정치적 영도력 (5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수업은 학생들이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지도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며 근본 전제임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단원의 수업은 3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무엇보다도 이 단원의 첫 시간과 완결적인 체계 안에서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의 역할에 대한 지식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업은 학생들을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굳게 결속시켜야 하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의식 안에 노동자계급을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핵심권력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 학생들은 조합 농민 계급과 여타의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관심)과 노동자 계급의 이익의 통일이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인도를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지도적 역할과 생산수단의 공유가 사회주의 사회의 불가침의 토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제국주의의 공격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화된다. 이를 통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의 강화와 공유제도의 보호와 확충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공격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학생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하게 한다. -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주의의 불가침의 토대로 평가하고 이러한 토대에 대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주요 학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핵심권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형성, 노동자계급과 동독의 모든 국민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지도자로서의 사회주의정당(SED) -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 계급, 인텔리 계층, 여타의 근로자 계층들과의 연대 - 사회주의의 결정적인 토대로서의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인도
주요 내용	<p>■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핵심세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사회주의 정당(SED) - 동독 노동자계급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부의 주요 산출자 및 정치적 지도 계급(예: 국가와 산업의 결정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노동자 계급의 전권자로서의 역할; 노동자 계급과 모든 여타의 근로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위임과 수행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노동자 계급과 전체 사회의 지도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와 현재 상황에서 선택된 예들)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가르침과 사회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투쟁 계획에 토대한 투쟁의 자발적인 연대의 동지이며, 노동자계급, 조합 농민 계급, 지식인 계층, 여타의 근로자 계층들의 통일체로서의 당
- 사회주의정당(SED)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 당 대회 - 당의 최고 기구(동독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당대회의 결의들의 소개), 집단적 지도기구로서의 중앙위원회(ZK)와 정치국, 중앙위원회의 서기장(Generalskretaer)
- 공산주의적 세계운동의 일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정당(SED)과 소련공산당(KPdSU)과의 확고한 연대

■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 계급과의 연대, 인텔리겐차와 모든 다른 근로자들을 보는 사회주의적 관점

- 조합 농민 계급, 지식인과 여타의 근로자 계층들 -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파트너
- 연대의 토대로서의 노동자 계급과 여타의 근로자들의 기본관심의 통합(사회보장과 물질적 정신적 삶의 수준의 지속적 증대,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의 관리에 대한 창조적인 동역을 보증하는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과 그 연대의 파트너들의 공동의 관심인 평화)

■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도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불가피성

-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도
-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과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와 여타의 사회주의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러한 도전들의 목적
- 사회주의의 전면적 강화 및 심화와 제국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필연성

2) 8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단 원 개 관	시 간 수
1.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1.1. 일꾼과 건설자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 노동자계급이 앞장선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도구 1.2. 동독 안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건설과 작동방식 1.3.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9시간 (3시간) (5시간) (1시간)
2. 사회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7시간
3.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적 서독 : 상반된 사회체제를 가진 두 국가 3.1. 동독과 서독 안에서의 상반되는 권력과 소유 양식 3.2. 제국주의 서독의 침략적 성향 3.3. 사회주의 강화와 평화 수호를 위한 동독의 정책	9시간 (2시간) (5시간) (2시간)
4. 실제 정치의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들, 계급집단 내부의 문제들	3시간
총 시간수	30시간

단원주제	1단원 :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 9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수업은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과 사회민주주의, 우리의 삶 안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근본 지식들을 매개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힘,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형성의 불가침의 전제라는 7학년에서 다룬 본질적인 인식들이 심화되어야 한다. 수업을 통하여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학생들에게 매개하여야 한다. 수업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자들이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실현된다는 확신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수호와 강화를 위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역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야 한다.
주요 학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권력도구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의 본질 - 의회와 그 사회주의 국가 조직으로서의 대의원회의 과제와 활동 방식 -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원리와 지도원리로서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주요 내용	<p>1.1. 일꾼과 건설자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 노동자계급이 앞장선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도구 (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건설과 평화 수호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인도하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권력기구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 사회적 과정과 권력행사의 지도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포괄적인 참여, 민주적 공동결정과 공동작업 - 계획, 혁신운동, 경영, 국가조직의 지방위원회, 상설 위원회, 원로회의 등에 대한 시민의 다층면적인 참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공동작업의 가능성과 형태들 -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 -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의 계급적 특징(제국주의 국가와 그들의 시민 민주주의와의 비교) -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노동자 계급 권력의 표출과 모든 법률들의 결정적인 토대로서의 동독의 헌법(헌법 개관, 1, 2, 6조 등의 발췌된 조항들을 통한 그 특징의 이해)

주 요 내 용	<p>1.2. 동독 안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건설과 작동방식 (5시간)</p> <p>■ 당 대회와 그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위 국가 권력기구로서의 당 대회와 그 주요 과제(헌법 48조에서 68조까지 조항과 관련하여), 당대회 의장, 법률제정과 노동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결정을 통한 사회 발전의 기본 문제 결정, 당 대회 결정의 실행, 당 대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동독 전 국민과의 연관성 - 당대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들, 위원들 - 당대회의 기구로서의 국가자문위원회(Staatsrat), 국가자문위원회의 역할, 국가자문회의의 의장(헌법, 66조에서 75조) - 당대회의 기구로서의 동독의 내각, 내각의 역할, 내각의 의장(헌법 76조에서 80조) <p>■ 지방의회와 그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선출된 최고 사회주의적 국가권력기구로서의 지방, 지역, 시, 읍·면 의회와 그 위원회(헌법 81조에서 85조 참조), 그 활동 방식 <p>■ 의원들의 과제와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선출, 입후보자 추천과정에 있어서 경영집단 및 노동자집단의 역할, 의원과 그 선출자들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선출자들에 대한 보고의 의무, 개별 의원의 활동
	<p>1.3.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1시간)</p> <p>■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결정의 실현과 완성에 있어서의 사회 발전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중심적인 국가 결정 및 폭넓은 주도와 국가권력, 콤비나트와 영업장, 노동자 집단과 각각의 지역적 기관들의 책임 사이의 불가분의 단일성, 창조적 공동작업 및 지도와 사회주의적 국가원리의 동일성 <p>■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대한 반격</p>

단원주제	2단원 : 사회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7시간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동독 헌법을 토대로 해서 사회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사회민주주의의 생동적인 과정 안에서의 시민의 포괄적인 권리와 성실한 의무 수행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단원에서 다룬 사회민주주의가 새로운 측면에서 고찰된다. - 학생들은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사회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과 국가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책임감 있는 완수가 개인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 학생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며 그들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사회주의에 있어서 사회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노동의 근본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신뢰와 높은 책임의 위임을 특징으로 한다. - 이러한 지식에 바탕해서 학생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시민의 지위와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 정치적 도덕적 책임과 자본주의 국가 시민의 지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주의의 성취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청으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계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사회주의 국가시민으로서의 행동과 태도 안에 간직하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전문적 정치적 지식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학생, 제자로서의 성실한 학습과 창조적이고 엄격한 노력을 통하여, 그리고 의식적인 준비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질서의 강화와 보호를 위한, 시민의 복지와 그 자신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동독인민군 및 국방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개인적 기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주 학 과 요 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걸친 사회주의적 공동의 삶과 사회주의 국가를 포괄적으로 함께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권과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실제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예 - 사회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노동의 권리와 성실한 노동의 의무, 교육의 권리와 배워야 할 의무, 투표권,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권(노동권, 교육권)의 박탈 - 시민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사회기관들의 역할과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 참여의 요청 	

■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지위와 책임

- 사회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포괄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기본 권리, 18세가 되면 주어지는 의원 및 지방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시민의 높은 도덕적 의무로서의 공동결정과 공동형성의 권리의 인식(헌법 21조 및 22조와 관련하여)
- 자본가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시민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배제, 시민적-민주적 권리와 평화를 위한 투쟁(사례)

■ 노동의 권리와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의 의무

(헌법 24, 25조 및 동독의 청소년법에서 발췌한 조항과 관련하여)

- 사회주의의 성과물로서의 노동의 권리,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의 정직하고 성실한 근로의 영광스러운 의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근로자의 정치적 권력의 실현을 통한 노동권의 보장
-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 일터의 보장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보장
- 근로자들의 실업과 삶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일터의 불확실성(실제적인 사례)

■ 교육 및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헌법 25, 26조와 관련하여)

- 사회주의의 뜻깊은 성취로서의 교육과 문화적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 부모들이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에서의 교육적·사회적 보호,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일반교육을 위한 10년 간의 의무교육, 모든 성장세대를 위한 직업교육 및 그 이후의 교육 기회의 보장, 모든 국가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교육 (“통합적 사회주의적 교육체계에 대한 법률”과 관련하여)
- 서독 착취계급의 교육적 특권

■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

(헌법 23조 동독의 “국가방위에 관한 법률” 1장 1항에서 4항까지, 2장 5항과 6항과 “동독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법률” 1항의 1에서 3절까지와 관련하여)

- 동독의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모든 공격을 격퇴하는 것의 필연성, 국경의 불가침성, 바르샤바 동맹국들에 대한 동독의 확고한 연대, 국방의 의무수행을 정직하게 준비할 의무, 군대 복무의 불가피성, 동독인민군의 자유독일청년연맹(FDJ)에 대한 전통적인 관계

주 요 내 용	<p>■ 국가 기관 및 사회 기관을 통한 시민 권리의 보호.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범죄적 행위의 예방과 처벌의 필연성 (형법 1항, 민법 323에서 326항과 관련하여)</p> <p>- 범죄의 감소와 퇴치를 위한 사법 기관의 업무(사례들) 중재위원회의 역할, 자유독일청년연맹(FDJ)의 규율위원회 - 과제와 업무(사례), 위협을 배제하고 범죄적 행위 제지를 도울 모든 시민의 의무, 사회적 소유제도의 보호, 공동의 소유와 시민의 개인적 소유사이의 교환에 대한 권리에 적합한 개방적 태도</p>
------------------	--

단원주제	3단원 :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적 서독: 상반된 사회체제를 가진 두 국가 (9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적 서독의 계급적 본질을 대비시키고, 그 계급적 본질에서 비롯되는 두 독일 국가의 정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동독과 서독의 사회적 질서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서독과 NATO 국가들이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여야 한다. - 서독의 제국주의에 대한 예를 고찰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내부와 외부에 향한 공격적이고 인간 적대적인 경향과 사회주의를 수정하려는 그 정치적 주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서독이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동독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해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두 독일 국가 사이의 계급투쟁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어야 한다. - 학생들은 서독 제국주의가 오늘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국제적 세력관계의 폭넓은 변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향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군비증강 정책, 동독과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과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 수업은 학생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히 서독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서독의 여타의 진보적인 세력들의 노력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여야 한다. - 동독의 정책은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와 자유 수호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이 견고해져야 한다. 학생들은 동독의 대외 정책이 자유를 수호하고 서독과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의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서독의 동독 내부분문에 대한 간섭과 1937년의 국경선에 바탕한 독일 영토의 이해와 동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는데 맞추어져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등한 힘과, 불간섭, 국경과 주권의 존중 등의 두 독일 국가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독의 정책 안에 구현되어 있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두 독일 국가 사이의 정책과, 권력관계, 소유관계의 상반되는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 동독은 그들의 사회주의 조국이며, 제국주의적 서독과 공존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신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고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없는 적대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사회주의 동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켜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단원의 또 다른 본질적인 과제는 학생들이 제국주의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주요 학과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사회주의적 권력관계 및 소유관계의 서독과의 원칙적인 대립과 사회주의적 권력관계 및 소유관계의 우월성 - 서독의 제국주의적 본질에서 비롯되는 내부와 외부로 향한 서독의 공격적 정책 - 사회주의의 지위 강화와 자유 수호를 지향한 동독의 정책
주요 내용	<p>3.1. 동독과 서독 안에서의 상반되는 권력과 소유 양식 (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상반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국가와 그 두 체제 사이의 매개불가능한 간격 -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권력관계와 소유방식에 토대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통합 불가능성 -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힘과 동독의 생산수단의 공유제도 - 주요 생산수단의 독점자본주의적 소유와 강력한 독점자본에 의한 경제 지배, 독점자본가의 권력도구로서의 서독(기존의 지식에 바탕한 실제 사실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서독의 권력 및 소유관계에 대비한 동독의 권력 및 소유관계의 이해) - 동독: 우리들의 사회주의 조국, 서독: 제국주의 국가
주요 내용	<p>3.2. 제국주의 서독의 침략적 성향 (5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독일에 대한 영향력의 회복과 복권을 위한 독일 및 국제 독점자본의 계급이익의 결과로서의 서독의 탄생과 독일의 분단 - 사회주의의 역사적 우월성과 제국주의의 역사적 열성의 표출로서의 동독 안에서 사회주의의 정착과 번영의 결과인 동독의 탄생 -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모든 진보적 세력을 억압하려는 서독의 제국주의적 힘의 시도 - 국민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정신에 반공, 반 소련, 적대적 감정을 심기 위한 조작, 이와 관련된 대중매체와 학교의 역할 - 서독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공산주의자들과 여타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한 진보세력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하여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 제국주의 외교의 핵심적 목표인 1937년 당시의 국경선에 바탕한 전 독일 안에서의 제국주의적 세력의 회복 - 동독의 사회주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서독의 파괴적 시도들: 간첩행위, 사보타지, 분열책, 경제적인 보이콧, 1953년의 반혁명적인 폭동, 1960년과 61년의 즉각적 군사 침략 준비 - 제국주의 침략의 전진기지로서의 서베를린의 역할, 1961년 8월 13일의 제국주의의 분열적 책동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장벽의 설치, 정면공격의 의도 분쇄, 독일 제국주의의 패배,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과 동독 연합의 승리, 유럽 평화의 수호. - 사회주의 힘의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70년대 초반부터의 사회주의의 현실적 세력을 인정하는 정책들, 효과적인 팽창정책의 결과로서의 서독 봉쇄 조약들, 서독의 공격적 힘의 격퇴와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으로서의 동독과 서독간의 정상적인 국제법적 관계의 관철 - 미 제국주의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에 토대한 서독 제국주의의 소련, 동독 및 여타의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에 대한 군비 증강 정책과 여타의 나토 국가들에 대한 군비증강 정책의 강요 - 동독과 서독의 경계를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의 묵인과 조장,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대한 보복적 요구들의 국가적 지원, 동독의 시민권에 대한 무시 - 군비증강정책에 대항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투쟁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의 독일공산당(DKP), 사회민주주의와의 단일 행동과 모든 반제국주의적 평화우호적 세력들과의 협력을 위한 그 투쟁, 서독 제국주의와 그 정책의 공격적 본질, 사회주의 적대적인 정책들의 실패
	3.3. 사회주의 강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동독의 정책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요 정책, 노동자계급과 그 연대세력의 정치적 힘 확대, 사회주의 경제 및 국방력의 증대, 평화수호,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연합에 속한 여타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그 역사적 공격적 위치의 전면적 강화 - 동독과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목표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포기할 수 없는 것임 - 두 독일의 평화적 공존 관계 수립을 위한 동독의 반복적 제안 - 동독의 정책 및 소련의 제안들에 대한 파악,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의 수립과 심화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공동체(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의 예) - 모든 사회주의 국민의 의무로서의 동독의 발전, 평화유지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의 수호를 위한 능동적인 참여

3) 9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단 원 개 관	시 간 수
1.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6시간
2. 자본주의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 2.1.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 2.2. 제국주의	13시간 (5시간) (8시간)
3.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	6시간
4. 실제 정치의 문제들, 지역적인 사건들과 계급집단 내부의 문제들	5시간
총 시간수	30시간

단원주제	1단원 :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6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수업은 역사에서의 계급투쟁의 역할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합법칙적 관계를 핵심으로 다룬다. 학생들은 인간사회의 발전은 객관적인 법칙에 토대한 국민대중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견한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세계관적 통찰에 입각해서 이 단원에서는 사회적 합법칙성 및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실현이 주요 특징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생들은 노동자계급과 그 역사적 역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의 혁명적인 변혁에 대한 고유한 참여를 위한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발전의 일반 법칙과 그 작용방식에 대한 첫 번째 통찰에 기초하여 노동자계급의 편에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발전의 법칙과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실현에 대한 보다 깊고 구체적인 인식들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아야 한다. - 역사적 지식과 실례들을 통하여 사회적 사건들간의 관계와 그 안에 포함된 합법칙성을 파악하는 학생들의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 특별히 공산당 선언의 발췌된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세계관에 대한 인식을 역사와 현재의 사실들을 관련지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칙과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들에 대한 이해를 사회 발전의 원인과 동력에 대한 질문의 과학적 답변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과정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세계관에 토대한 척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학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적인 계급 사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 안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계급 투쟁을 밝혀주는 사례들 -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에 토대한 지배체제 안에서의 계급 투쟁의 사례들 - 사회주의 혁명으로 연결되는 계급투쟁을 첨예화하는 토대로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의 첨예화에 대한 해명 	

■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

- 우리 시대의 사회발전의 기본 방향으로서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원인과 동력 및 그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의 의미
-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한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에 대한 결정적인 해명(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엥겔스의 발언에 의존한 본질적인 해명에 대한 안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업적에 대한 평가)
- 과학적 공산주의의 출생증명으로서의 공산당 선언

■ **계급투쟁**

- 역사상의 계급투쟁과 그 결과들(공산당 선언 I 장 1-5절에 토대해서)
- 사회질서의 사회적 발전의 핵심 역량이자 국민대중의 사회변혁의 역량의 표출로서의 계급투쟁
- 우리 시대의 사회 발전의 핵심적 동력으로서의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전세계적 계급투쟁 및 그 원인

■ **생산력과 생산관계**

- 인간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서의 물질적 자산의 생산
- 원시사회의 인간, 물질적 자산의 생산자로서의 노예, 농민, 수공업자, 노동자
- 생산력으로서의 인간의 생산경험, 숙련성, 지식들 및 생산수단과 노동환경, 역사에 있어서 생산자들의 창조적 활동을 통한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역할
- 생산과정에 있어서, 특히 소유 관계와 획득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대한 생산관계의 의존성, 생산력에 대한 생산관계의 역동적 작용.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서 유발되는 계급갈등

■ **생산수단의 사유에 토대한 생산양식의 몰락의 역사적 필연성**

-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생산양식의 역사적 단일성(봉건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적 특징을 드러내는 사례들)
-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요구와 거기에 바탕한 생산관계 간의 대립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종래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생산방식의 변화(공산당 선언 I 장 24-27조에 바탕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에 대한 사례, 자본주의 몰락의 역사적 필연성의 문제)

■ **체계화**

- 국민대중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요형식으로서의 생산과 계급투쟁
- 계급투쟁의 근본적인 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사유제도, 국민대중에 의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 해소의 표출로서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및 자유진영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간의 대립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계급투쟁 및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론의 해명

단원주제	2단원 : 자본주의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 (13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제국주의의 몰락이 역사적 법칙에 의해 미리 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이 단원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그들의 투쟁의 목표로서의 공산주의 및 우리 시대의 특징이 다루어진다. - 이 단원에서는 사회 발전이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우리 시대 안에서 노동자 계급이 이 합법칙성을 혁명적인 투쟁 안에서 실현해간다는 것을 해명하여야 한다. -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미움이 심화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의 비인간성과 역사적 전망의 불투명성과 패망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논증능력이 더욱 향상되도록 작용하여야 한다.
주요 학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및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잉여생산론에 대한 예증 -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라는 사실과 국가독점 자본주의 안에서의 강력한 독점자본과 국가 권력은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언제나 생산력의 발전, 특히 인간의 핵심 생산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쟁과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생산력 발전의 분명한 가능성을 강조하며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 대한 예증 - 제국주의의 비인간적인 특징의 깊은 뿌리로서의 제국주의적 착취관계, 지배 관계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의 안과 밖을 향한 공격성 및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무력성 - 제국주의의 혁명적 몰락이 합법칙적인 결과라는 데 대한 예증
주요 내용	<p>2.1.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 (5시간)</p> <p>■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특징, 결정적인 계급적 특징으로서의 생산수단에 대한 지위(공산당 선언 I 장과 레닌의 계급 정의에서 발췌된 내용에 토대해서)

주 요 내 용	<p>■ 자본주의적 소유 및 획득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에게 생산력을 팔도록 하는 자본가들의 강요, 상품으로서의 생산력, 필수적 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의 결과로서의 잉여가치, 자본가들에 의한 잉여가치와 자본주의적 착취의 동일화, 착취의 본질을 감추려는 제국주의적 시도의 폭로 (공산당 선언 I,II장 및 마르크스의 “임대노동과 자본”에 대한 엥겔스의 서론에서 발췌한 내용과 연관해서) <p>■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법칙으로서의 잉여가치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불가피한 결과이자 자본주의 생산의 목표로서의 가능한 한 최고의 잉여가치 생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지속적 증대와 생산의 증대. -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고의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자본가들의 강요,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잉여가치론(공산당 선언 I,II장에서 발췌한 조항들과 관련해서), 계급간의 협력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론의 허구성
	<p>2.2. 제국주의 (8시간)</p>
	<p>■ 독점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르주아의 이익 실현을 위한 생산력 증대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단계로서의 자본의 독점,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강력한 독점 자본에 의한 경제 지배, 국제적 독점 자본의 역할 - 국가독점자본주의 안에서 강력한 독점 자본의 힘과 국가 권력의 결합(국가와 독점 자본간의 협정, 개인적 결합, 독점자본의 이익 보호와 증대를 위한 국가권력의 개입 등에 대한 예) - 제국주의와 정치적 반작용의 관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간섭, 근로자들에 의한 제국주의의 목표달성의 무력화를 위한 전제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 권위적 지배형식, 조작, 반공산주의 및 반 소련적 경향의 확산의 저지 -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으로서의 공격성의 가장 깊은 뿌리인 독점자본, 제국주의의 공격적 본질과 가장 공격적인 제국주의, 특히 미국과 서독에 의한 정책에서 비롯된 인간 생존에 대한 위협 - 전쟁과 평화 문제 및 군비확장과 감축에 관한 독점자본 부르주아 정치 권력 내부의 상이한 입장들

■ 기생적이고 부패한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 제국주의의 생산력 증대에 대한 억제적 촉진적 경향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영향으로서의 점증하는 위기의 표출, 생산력 발전에 대한 증대된 억제요인의 표출로서의 생산성 감소, 대량 실업, 제국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성취를 위한 동력으로서의 독점자본 사이의 이윤추구 및 경쟁, 제국주의의 능력, 오늘날의 기술발달의 결과
- 사회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성과의 활용
- 생산능력발달을 노동자들의 복지로 연결시키고 기술을 사회 발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원칙적인 무능력함, 제국주의적 군비생산 - 파괴적 목적을 위한 생산력의 그릇된 사용, 제국주의의 부패와 기생성의 극한적 표출

■ 죽어가는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 제국주의 안에서의 생산력 발전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의 심화, 독점자본의 지배라는 조건 아래서의 생산력, 특별히 인간의 생산력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억제적 요인의 증대, 갈등의 첨예화와 복합적인 결합
 - 공격적인 독점 부르주아와 모든 평화 지향적 세력들 간의 갈등
 -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
 - 제국주의 국가들간, 특히 현대 제국주의의 세 중심국가들간의 갈등
 - 제국주의국가들과 선진국들간의 갈등
- 제국주의가 야기한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변혁
-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불멸성에 대한 시민적 수정주의적 파악과 이러한 파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다양한 실제 정책과 선전에 대한 대응

단원주제	3단원 :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 (6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과 공산주의의 투쟁 목적의 본질적인 특징과, 왜 노동자 계급이 인간을 착취 및 억압하고 전쟁을 야기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소명을 담당하게 되었는지를 학습하여야 한다. - 이러한 기본 지식을 통해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집행자로서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세계관적 지식을 매개하여야 하며,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개인적인 방향정립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이 단원을 통하여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이 사회 발전의 과정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계급이익과 여타의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이라는 학생들의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목적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인류의 전망으로서 파악하여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정당성과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주요 학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목표로서의 공산주의의 본질적 특징(“공산당 선언”과 SED의 강령) -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노동자계급의 객관적 지위에 대한 토대와 사회 발전의 과학적 이론과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소명과 역량에 대한 사실들의 입증 -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의 성취와 강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평화와 균축을 위한 투쟁이 그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근본적인 과제라는 데 대한 입증
주요 내용	<p>■ 역사적 사명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의 혁명적인 전복의 역사적 필연성 -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을 통한 착취와 억압, 전쟁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자본주의에 대한 합법칙적 대안 - 공산주의 -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목표(SED의 정강에 기초한 공산주의의 특징 이해; SED의 정강 제V부 “공산주의 - 우리의 목표”에 대한 학습)

주 요 내 용	<p>■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노동자 계급의 근본 과제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 획득(프롤레타리아 독재), 부르주아의 반발의 분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의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대한 입증(“공산당 선언” II장 참조) -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구성요소로서의 세계평화 수호를 위한 투쟁 -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핵심과제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한 공격 <p>■ 자본주의 극복을 지도하는 사회적 힘으로서의 노동자계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의 자멸불가능성과 혁명적 투쟁을 통한 전복의 불가피성,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의 형태들 - 자본주의의 몰락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계급의 본질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대량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 위치 •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된 계급이라는 것과 객관적인 사회적 발전요구와 여타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이익과 합치되는 노동자 계급 이익에 관련된 사실 • 국제적 특징 • 노동자 계급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과학적 이론과 혁명적 투쟁정당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사실들(공산당 선언의 I 장 29조에서 끝까지, II장 처음부터 7조까지)
------------------	--

4) 10학년 국가시민 교과서

단 원 개 관	시 간 수
1. 우리 시대의 특징과 평화 수호를 위한 투쟁	9시간
2. 동독의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한 사회주의정당 (SED)의 전략적 과제설정	3시간
3.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3.1.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법칙과 동독의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 과제 3.2. 사회주의와 과학기술 혁명 : 사회주의정당(SED) 경제 전략의 요강 3.3.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노선과 계획 3.4. 경제와 사회정책의 단일성 : 우리들의 중심 투쟁 영역	20시간
4. 사회주의의 사회구조와 정치조직 4.1. 동독의 사회 구조 4.2.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의 증대된 역할	10시간
5.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할 세계관	6시간
6. 실제 정치의 문제, 본질적인 사건들, 계급집단 내부의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학습	7시간
총 시간수	55시간

단원주제	1단원 : 우리 시대의 특징과 평화 수호를 위한 투쟁 (9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핵심과제는 사회주의가 현대의 전세계적인 혁명적 변화과정의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과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가 우리시대의 사회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라는 학생들의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가장 힘겨운 계급대결의 시대라는 것과,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 및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획득하여야 한다. - 이 단원을 통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계급이 사회발전의 과정을 실현하고 그들의 계급이익과 다른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확신이 심화되어야 한다. - 이러한 확신은 우리 시대 안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물음 안에서 분명해진다는 것과, 사회주의 정책이 이성과 실재에 바탕하고 있다는 데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주의가 지도적 힘으로서의 소련과 더불어서 인류를 핵의 지옥에 떨어뜨리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세계의 혁명적인 변화과정을 억제하고 퇴보시키려는 가장 공격적인 제국주의의 모든 시도들에 대항하여 세계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며, 필수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의 평화 주도적인 특징과, 특별히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과 평화적 공존정책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동독을 지원하는 소련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세계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계급에 적합한 척도를 획득하여야 하며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와 모든 반제국주의 세력들과의 역동적인 연대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보다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주요 학 과 요 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대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 모든 정치적 관점들의 축이라는 것과 핵의 위협에 직면하여 그 힘을 극대화하고 있음에 대한 입증 - 사회주의가 전세계적인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힘이며, 사회주의의 강화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과 세계 안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위한 힘을 창출하는 유익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방어적인 위치에 있으며 스스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위기가 오늘날 제국주의적 공격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 대한 입증
- 사회주의와 평화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에 대한 입증: 진정한 사회주의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결정적인 원천이며,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연합의 평화정책과 모든 평화 우호적이고 반 제국주의적인 세력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형성

■ 우리 시대의 주요 특징

-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으로서의 우리 시대, 사회발전의 핵심동력, 사회의 핵심역량으로서의 국제적 노동자 계급, 세계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의 축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화해불가능한 투쟁

■ 국제적 세력 관계 - 사회주의의 역사적 공격적 위치와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방어적 위치의 표출

- 사회주의적 세계체제와 여타의 사회발전의 주요세력들이 한편이 되고 제국주의가 다른 한편이 된 우리 시대의 국제적 세력관계
- 국제적 노동계급의 역사적 성취로서의 사회주의
- 국제적인 세력관계의 보다 폭넓은 변화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 반 제국주의적 세력들의 전진의 본질적인 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고 국민의 사회보장과 민주적 권리를 위한 혁명적인 노동자운동의 투쟁과 민족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대한 사회주의의 증대된 영향
- 현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입지의 강화, 민족적 사회적 해방운동의 결과,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사회의 발전과 그 반대의 경향 및 다양한 반대들의 변화된 양상
-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위기
-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방어적 위치와 공통적인 위기, 위기를 내포한 발전과정 및 오늘날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침략성
- 제국주의의 변함없는 핵심 목표로서의 세계 안에서의 그들의 근본적인 영향력의 관철, 모든 국민들의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예속 및 사회주의의 부정

<p>주 요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국가의 삶의 관심과 대결, 억압, 세계 지배를 지향하고 특별히 침략적이고 반동적인 제국주의 세력사이의 전 세계에 걸친 깊은 갈등, 이러한 조건 아래서의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근본 갈등의 표출 <p>■ 사회주의의 평화공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와 평화의 동일성(1917년 이래의 사회주의적 평화정책) - 평화 수호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강화. 동구권의 위협에 관한 제국주의의 거짓말에 대한 논파,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위한 투쟁, 가능한 한 최소 수준으로의 군사적 균형상태 유지의 의미 - 상반된 사회질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상호 존립 정책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의 형식으로서의, 전쟁과 제국주의적 억압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투쟁의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평화적 공존 정책 - 현대적 조건 아래서의 평화적 공존 정책의 본질적인 양상(상이한 사회질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유일한 이성적 대안으로서의 평화적 공존정책,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전쟁과 모든 위협의 포기, 내정에 대한 불간섭, 완전한 동등권 인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평화적 경쟁 체제, 포괄적인 국제적 안전보장체제의 구축) - 국제적 차원에서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세력의 활동공간을 축소하기 위한 소련과 여타의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활동들, 최고로 반동적인 미 제국주의의 격렬한 반항, - 이성과 실재주의의 연합으로서의 동독의 정책, 안전보장, 긴장완화, 군비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과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의 불가분의 연관성
----------------------------	--

단원주제	2단원 : 동독의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한 사회주의정당 (SED)의 전략적 과제설정(3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선진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정당(SED)의 정강 안에 포함된 전략적 개념들이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요청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 이 단원의 수업은 학생들이 동독 안에서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가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매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의 강화와 높은 경제적 생산성을 위한 투쟁이 생산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분야라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우리들의 투쟁의 실제적인 전망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제국주의의 시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주요 학 과 요 수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의 모든 장점과 역량이 펼쳐지며, 사회적 삶이 모든 방면과 영역에 걸쳐서 계획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 정치, 경제, 사회, 정신-문화적으로 깊은 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데 대한 입증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공산주의의 성취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의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주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일한 사회형식의 두 가지 양상 - 사회주의정당(SED)의 지향점: 선진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주의로의 점진적인 과정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형성, 이러한 지향점의 핵심 내용으로서의 사회주의 의미의 지속적인 심화 - 우리의 투쟁의 실제적인 전망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대한 대항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SED의 정강 II부의 서론에 대한 개관), 정치, 경제, 사회, 정신-문화적으로 철저한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 사회주의 모든 장점과 역량을 발전시키고 발휘해야 할 필연성

단원주제	3단원: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20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정당(SED) 경제 전략의 주요 과제와 기본 특징이다. - 학생들은 핵심과제 정책의 내용의 본질과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당의 결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핵심적인 투쟁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이를 위해서 요청되는 모든 근로자를 성숙시키는 것이 불가분의 요청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 법칙의 표출로서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들 사이의 합법칙적인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 당의 경제 정책의 실천과 함께, 과학-기술적 혁명의 완수와 함께 깊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수업은 사회적 법칙의 실현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여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아래 이러한 법칙들에서 비롯되는 객관적인 요청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과제들을 목적지향적인 실천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 수업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높은 성취가 앞으로의 전진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가 된다는 학생들의 신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습득이 동독 청소년들과 그들의 혁명적인 실천에 주어진 과업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해야 한다. -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와 행동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민소유에 대한 학교와 공장과 여타의 사회 영역에서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사용을 위한 노력과 자기 자신의 노동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효율성을 위한 노력 등을 다루어야 한다. - 학생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제국주의 이념적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주요 학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물질적 문화적 삶의 수준의 보장과 향상이 사회주의 의미를 대변하며 당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라는 데 대한 입증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이 구체적 역사적인 조건 아래서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상응하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법칙의 요청이라는 데 대한 입증

<p>주 학 과</p> <p>요 습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인 에너지의 자유로운 분출과 근로자들의 이익과 필요를 언제나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에 대한 입증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안에서 단일하게 구현되는 당의 경제 전략의 근본 특징과 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그 시사점 - 국민 경제의 과정에 대한 중심적 지도와 계획과 콤비나트,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창조적인 주도과 고유한 책임의식 형성의 필연성 - 사회주의의 장점과 과학기술적 혁명의 성취사이의 효과적인 결합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
<p>주 내</p> <p>요 용</p>	<p>3.1.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법칙과 동독의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 과제 (6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핵심적인 과제로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높은 발전 속도, 효율성의 증대, 과학기술적 진보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토대한 국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취의 변화, 사회주의의 경제적 성취력의 발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새로운 주도권의 토대 - 선진 사회주의의 여타의 영역의 발전의 결정적 토대로서의 경제적 발전 과정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법칙 노동자 계급과 여타의 근로자들의 이익 - 그들의 삶을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전반적으로 성숙시키려는 - 실현의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사회적 특징, 근로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완전 충족,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수단, 발전된 과학과 기술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토대한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최고 수준으로의 개선 - 사회주의 경제적 근본법칙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표와 목표달성의 수단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법칙의 구체적-역사적 조건의 변화 - 사회주의의 경제적 근본법칙과 자본주의의 잉여가치론에 대한 비교 논의(목표, 수단, 사회적 영향)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과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실천의 목표지향적 조직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의 필연성 - 사회주의의 작업원리(실천원리)의 경제적 근본법칙과의 연관성 -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략적 과제로서의 평화 수호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
	3.2. 사회주의와 과학기술 혁명 : 사회주의정당(SED) 경제 전략의 요강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강도 높은 확대 재생산의 과정: 국민경제의 역동적 성장, 국가소득의 증대, 국민경제 성장의 길, 시대의 경제적 법칙의 요청으로서의 노동, 에너지·원료·금융산업의 성장의 과정 - 과학기술적 혁신과 국민경제의 강력한 확대 재생산: 포괄적인 집약화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으로 하는 제품과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생산방식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혁신에 대한 요청(높은 성장률, 신속한 유통체계, 소비자의 요구와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과학-기술적 혁명의 촉진을 위한 주요한 발전방향과 그 사회주의의 장점과의 연관성,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핵심기술에 대한 적용 및 폭넓은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노동과 삶의 조건의 내용, 형식, 특징에 있어서의 변화 - 높은 경제적 성취력과 개인과 사회적 집단에 대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교육과 자격수준에 대한 강화된 요청, 현대 과학과 기술의 성과들의 신속한 적용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와 노동생산성의 향상, 성취의지, 성취에 대한 준비, 창조적 노동, 사회주의적 경쟁의 발전에 대한 요청,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역할 • 물질적 이해와 도덕적 자극의 단일성의 원리, 분배의 원칙의 보다 나은 관철이 노동과 노동집단 안에서의 인간관계 및 사회주의적 인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전략의 열 가지 초점

주 요 내 용	3.3.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노선과 계획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 - 사회의 계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장점 - 국가의 중심적 지도와 계획의 과제로서의 국민경제의 여러 분야와 영역의 발전 및 생산과 소비, 저축과 소비 사이의 균형의 달성 -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 수단으로서의 경제계획, 중요한 계획의 과제들(5개년 계획에 대한 법률 및 국민경제계획에 대한 법률에 토대해서), 계획의 결정적 고려 요소로서의 인간의 욕구, 정확한 견적과 수확 및 평가, 동맹 국가들과의 연계된 계획, 국가 중심의 지도 및 계획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활동 및 사업장, 콤비나트, 조합 및 지역 국가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간의 연계성 - 콤비나트를 통한 재생산과정의 모든 중요한 국면에 대한 단일한 지도와 그에 따르는 그 국민전제에 대한 고유한 책임, 내수와 수출을 위한 순생산, 이익, 생산과 성과 등의 콤비나트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에 연관된 지표, 까다롭고 실재적인 계획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서의 지도와 계획에 대한 근로자들의 민주적 참여, 노동조합의 역할, 조합민주주의 발전
	3.4. 경제와 사회정책의 단일성 : 우리들의 중심 투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정당(SED)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목표로서의 국민의 복지, 정책의 본질적인 기둥으로서의 자유로운 삶, 사회 보장, 국민 복지 - 평화 수호 및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확고한 단일성의 진전에 대한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강화와 세계의 평화 우호 세력들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 • 사회적 진보로서의 과학-기술적 혁신의 완수를 통한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원칙적인 우월성 • 과학적으로 정초된 당의 경제 전략, 사회적 에너지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보장과 당과 국민의 일체성의 강화 - 경제전략의 실현과 연결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깊은 변화, 2000년의 도래에 따른 경제 전략

단원주제	4단원 : 사회주의의 사회구조와 정치조직 (10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원의 핵심은 노동자계급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 노동자계급의 조합농민계급과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연대,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 및 발전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매개하고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사회전체의 깊은 변화와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하에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과업을 실현하는 동독의 사회세력들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야 한다. -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학생들의 연대를 심화하고, 모든 상황에서 사회주의정당(SED)과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확고히 신뢰하게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적 역할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당파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수업은 사회주의 국가의 강화와 발전에 대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보다 깊이 각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요 학과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의 확장과 심화 -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여타의 모든 근로자들의 의식과 창조성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정신-문화적 과제의 해결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정당(SED)의 과제라는 데 대한 입증 -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 지식인 및 여타의 모든 근로자들과의 연대의 지속적인 심화와 그 과정에서의 사회주의정당(SED)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입증 -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심화 - 사회주의 국가를 부단히 강화해야 할 필연성과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의 힘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것의 필연성에 대한 입증

주 요 내 용	4.1. 동독의 사회 구조
	<p>■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의 계급과 계급관계들,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계급, 조합농민 계급,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 노동자 계급 및 그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정치적 토대로서의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계급간의 연대, 노동자계급과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연대 <p>■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안에서의 노동자계급의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있어서의 노동자 계급 및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실천적 행위와의 결합의 필연성, 노동자 계급의 가장 포괄적인 계급조직으로서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학교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형성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사회, 정신, 문화적 과제의 해결과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창조성의 향상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 노동생산성 향상, 과학기술적 진보의 촉진, 사회주의적 경공업, 혁신운동, 지도와 계획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역동적 참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위상 및 실천 <p>■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계급, 지식인 및 여타의 근로자들과의 연대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에서의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발전의 과정과 농업과 국민경제의 여타의 분야들과의 연계성의 증대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 계급간의 연대의 강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 안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의 확인 - 지식인과 노동자계급 및 조합농민계급간의 태생과 활동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연계성, 과학기술의 발전, 학문, 교육 및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 - 사회주의 발전과 계급 및 계층의 증대된 정치-도덕적 단일성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복지와 평화에 연계된 사회주의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모든 계급 및 계층의 공동의 이익, 계급들과 계층들간의 사회적 화해의 역사적이고 합법칙적인 노동자계급과 조합농민계급, 지식인, 여타의 근로자 계층 간의 연대의 심화

주 요 내 용	<p>4.2.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의 증대된 역할</p> <p>■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 II장 1절과 SED의 정강 II부 C의 첫 번째 단락에 토대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인 전제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로서의, 사회주의 사회 형성 및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도구로서의 노동자 농민의 국가 동독,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조직 안에서 국가의 위치 -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로서의 노동자 계급 및 그와 연대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와 반대인 시민 민주주의 -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공격, 계급을 토대로 한 국가에 대한 시민적 테제에 의한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왜곡 및 그에 대한 폭로와 반박 <p>■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조직적 기능, 국가를 통한 국민경제의 지도와 계획, 문화적-교육적 기능(국민교육과 문화 시설들과 연계하여), 국가기관을 통한 질서 유지 및 사회 보장 - 국가의 비정치적 기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 제국주의 공격적 힘의 제어, 새로운 세계전쟁으로부터 인류의 보호, 평화적 공존정책의 관철, 동독과 소련 및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형제관계 형성; 세계의 사회적 민족적 해방운동과의 연대 및 해방된 민족국가들과의 긴밀한 공동작업의 촉진 - 국제연합(UN)의 동반자로서의 동독, 평화수호와 사회발전의 촉진을 위한 UN 안에서의 활동,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한 사회주의 국가를 통한 사회와 시민의 보호,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들간의 관계, 그 계급적 특징의 표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들 <p>■ 사회주의정당(SED) 정책의 핵심적 문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전면적인 강화 및 성공적인 지도의 토대와 전제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사회주의 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의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핵심적인 발전방향으로서의, 구체적-역사적 요구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 대중의 의식과 조직된 실천의 표출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 - 의회 역할의 강화와 국가의 지도활동의 질적인 향상, 국가 중심의 지도와 시민의 직접적인 협력의 결합
------------------	--

단원주제	5단원 :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할 세계관 (6시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결론적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적 토대와 학생 자신의 노동자계급의 편에서의 혁명적인 실천의 기본적인 정향을 심화하여야 한다. - 이러한 목표 아래서 수업은 발췌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본인식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며, 학생들이 청년 혁명가의 투쟁의 과업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에 깊이 동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학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의 본질적 특징, 특히 과학성과 당파성의 단일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회의 합법칙성과 의식적 실천(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이론적 토대라는 것에 대한 입증 -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동화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결정을 청년혁명가의 사유와 실천의 본질적인 토대로 삼는 것과 동일하다는 데 대한 인식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심화 - 세계의 혁명적인 변화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삶의 의미이며, 세계의 본질을 합법칙적인 발전의 과정과 노동당의 정책의 실현의 무대로서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것
주요 내용	<p>■ 마르크스-레닌주의 :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세계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레닌주의: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의 세계와 역사 안에서의 사회 계급들의 역할에 대한 유물론적 해명, 인간 사회를 합법칙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발전의 법칙을 국민대중과 사회계급들의 실천 안에서 구현해나가는 존재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인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의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 정치 경제,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특징으로서의 과학적, 혁명적 비당파적 성격,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모든 개인의 의식적 실천을 위한 인간 스스로의 합법칙적인 역사의 창조, 실천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해

주
요
내
용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적인 인식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정책, 혁명적 실천

- 노동자계급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국제적 공산주의 운동 및 노동운동의 확고한 구성요소라는 데 대한 인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근본 과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토대한 구체적-역사적 발전조건에 대한 분석, 당면한 발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규정, 당면한 과제의 혁명적 해결과정에서 노동자계급 및 여타의 근로자들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능력의 계발과 지도
- 단일한 공산주의적 사회형식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인식,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발전의 결과로서의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이론의 완성으로서의 사회주의정당(SED)의 이론적 지도, 사회주의정당(SED)의 사회전략과 그 실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단일성
- 합법칙적인 요청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매개와 동화, 당의 이데올로기적 활동의 역할
- 당의 기본적인 정치 문서로서의 사회주의정당(SED)의 정강,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의 필연성
- 노동자 계급의 정치 권력의 획득과 강화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의 실현을 위한 합법칙적 요청이러는데 대한 인식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과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간의 불가분의 연관성(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항), 모든 청년 혁명가들의 과제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정치 권력의 보호
- 당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로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표와 수단의 합법칙적 관계,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요청으로서의 노동당이 설정한 경제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모든 근로자의 창조적이고 열성적인 노력

■ 젊은 혁명가들의 투쟁의 과제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 모든 본질적인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계급에 적합한 관점의 토대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결정의 불가분의 동일성에 대한 인정
- 과학적 세계관과 의식적 역동적 실천간의 불가분의 관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지식, 확신, 실천적 참여의 불가분의 통일성,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당의 정책을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변호하는데 대한 요청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부르주아가 선전하는 세계관의 다수성과의 공존불가능성

《부 록 4》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1) 7/8학년

학습 영역: 사회		
중점 내용: 집단을 통한 행동 각인과 행동 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화의 조건과 영향 - 개별적이고 집단특수적인 사회화의 결과로서의 행동 - 낯선 것(소수그룹, 주변그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편견 - 사회적인 기회와 계층특수적인 사회화 사이의 관련성 - 학교를 통한 사회 통합 가능성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동종 집단에서 나는 인정되고 있다.” 동일연령 집단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집단 형성의 원인들 - 개인 감정과 집단 감정 - 이상형과 동일시 현상 - 청소년 하위 문화 -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와 부모로부터의 독립 - 청소년의 방향 정립 문제 - 직업선택과 교육기회 - 청소년 시절의 좌절과 공격기제 	7/8학년 작업론 교과 주제: “가정에서의 공동체적 생활”
“이러한 사람들을 너는 조심해야 한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집단과 주변집단(예, 낯선 사람, 노숙자) - 다른 사고습관과 생활습관 - 자아상, 타인에 대한 표상, 적에 대한 표상 	
“오씨스 - 베씨스” 상호 대립적인 체제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성장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한 사회화의 요인들 - 각각의 발전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 의식의 장벽 - 언어장벽 - 변화된 사회 계층 - 학교와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내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나 혼자 결정하겠다!” 여가 이용의 가능성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여가 이용 가능성 - 여가 활동과 이상적인 모델 - 여가 산업 - 환경 문제 	7/8학년 작업론 교과 주제: “가정에서의 공동체적 생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수 있다!” 중독의 위험과 건강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와 알코올 소비의 원인(집단적 억압, 개인적 문제, 성인이 되고 싶은 욕구) - 중독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작용과 결과 	

학습 영역: 경제		
<p>중점 내용: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와 노동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기능 방법 - 소비자의 시장 의존성과 부분적인 영향 가능성 - 사회적 안전의 가능성과 한계 - 작업세계의 성취 압력과 인간화 -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변혁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의 광고의 기능</p> <p>“할인판매 조심!” 소비행태와 그것이 시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p> <p>“일하려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일자리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 실직 논쟁</p> <p>“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노동자의 사회보장과 미래 대비</p> <p>“일 - 단지 비용의 문제인가?” 노동 단체의 문제와 작업 세계의 인간화</p> <p>“팔아 치우고 배반했나?” 독일 통일의 경제적 결과와 문제점</p> <p>“자동차 - 계층적 지위의 상징?” 교통정책과 개인적 가치 척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의 기능: 정보, 경쟁과 시장 투명성 촉진, 욕구 충동, 광고를 통한 조작, 광고 비용, 광고 제한, 광고 산업 - 수요와 공급 - 시장과 가격 - 소비자 정보와 소비자 단체 - 동독의 시장 분포 - 생산성 - 작업 시간 - 직업 교육 - 임금체계 - 노동 시장 - 개인적 안전 장치의 한계(질병, 사고, 실직) - 사회보장제도와 보험 - 사회주의 국가의 비용 - 작업세계에서 비용절감과 인간화 사이의 갈등 - 자동화와 합리화의 결과 -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일? - 노동 소외와 관련된 문제 - 구조개혁과 작업세계에의 결과 - 브란텐부룩 주의 농업과 산업 - 노동청의 과제 - 교통정책 - 사회의 역동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치 척도와 소비 	<p>8학년 역사 교과서의 “산업 혁명”과 7/8학년 작업론 교과서의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p> <p>8학년 역사 교과 “산업 혁명”</p> <p>7/8학년 작업론 교과서의 “교통수단”</p>

학습 영역: 민주주의		
<p>중점 내용: 정치 권력과 지배의 정당화와 한계 설정 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독 지역의 권력관계의 변화 - 의회 민주주의의 특징 -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 - 의회주의에서의 권력 분리와 권력 통제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만약 우리가 학교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면...” 조종과 참여 사이의 학교</p> <p>“이제 경찰을 부르겠다!” 법치국가에서의 국가적 권력 사용과 그 한계</p> <p>“우리는 국민이다! - 국민운동과 정당” 정치적 의지 형성에서의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p> <p>“99,89%-정당은 항상 옳았다.” 구 동독 체제의 목표와 현실</p> <p>“연방 수상은 누가 통제하는가?” 의회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권력 분립</p> <p>“Talk-Show 민주주의” 시민과 대중매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생의 결정범위 - 교사와 학생의 역할 -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관심사 - 법치국가의 특징 - 기본법 보장 - 시민과 행정 -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정당과 시민운동 - 정치적인 의지 형성 과정 - 유권자의 결정 가능성 - 정당과 시민운동의 프로그램 - 토론문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 구 동독의 구조 - 국가와 정당의 일치 - 국가 내 국가로서의 국가보위부(Stasi) - 구 동독의 선거 -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 공산당 정권에 대한 저항 - 구 동독 시민의 정치적인 희망과 이상 - 절대국가적 사고와 신민정신 -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양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 의회와 정부의 관계 - 국가 권력 분립의 문제 - 사법기관의 독립 - 선거의 의미 - 출판 및 언론의 권리와 자유 - 비판의 기능, 비판적 저널리즘 - 제 4의 권력으로서의 대중매체 - 정보와 의견 형성 	<p>8학년 역사 교과 “자유, 평등, 박애”와 “독일 민주주의의 발현”</p>

학습 영역: 하나의 세계		
<p>중점 내용: 동서 갈등에서 남북 갈등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사회와 저개발 사회의 특징 - 차이점과 공통점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원인들 - 다른 사회에 대한 입장과 평가 척도 - 남북 대립으로 인한 전 세계의 생태적 위협 - 유럽 통합과정의 문제점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 개발과 저개발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 최빈국가 - 제 3세계의 종속성: 신식민주의, 무기수출, 경제 원조 	<p>7/8학년 지리 교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7학년 역사 교과 “유럽과 아메리카” 8학년 역사 교과 “유럽 국가와 식민지”</p>
<p>“열대림은 죽는가?” 자연의 착취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 정책 - 다국적 기업 - 국제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산업이 자국 농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p>7/8학년 지리 교과 “라틴 아메리카”</p>
<p>“오존 구멍의 확대는 끝을 모르는가!” 환경보호에서의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기후 재난 - 환경단체(그린피스 등) - 대기오염, 수질오염, 대지오염 - 환경파괴의 원인과 결과 - 환경보호 방안 	
<p>“우리는 어떻게 유럽이란 집을 지을 것인가?” 유럽 통합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통합과정 - 옛 “우방”의 철수 - 동유럽의 민주화 - 고르바초프와 그 영향 - 베를린 장벽의 붕괴 - 가깝고도 먼 이웃 폴란드 - 서유럽은 동유럽의 척도인가? 	<p>6학년 지리 교과 “공동의 집 유럽”</p>

2) 9/10학년

학습 영역: 사회		
<p>중점 내용: 사회구조와 사회변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결정에서 희망과 현실 -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 - 사회구조의 변혁 - 사회 불평등 문제 - 개인 생활 설계의 형태와 문제점 - 시장경제 발전과 사회의 기본 욕구 - 사회와 경제에의 참여와 결정 - 중독 문제(알코올, 담배, 마약)과 에이즈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직업선택, 선택 사항인가?”</p> <p>강요와 개인적 희망 사이의 직업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선택 - 경력, 일자리 또는 자아실현? - 일자리 정보 - 직업교육과 직업이동 - 직업세계에서의 여성 - 직업과 사회지위 	<p>9/10학년 작업론 교과의 “직업 결정 능력 형성”</p>
<p>“가족과 다른 삶의 형태”</p> <p>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변혁기의 가정의 기능 변화 - 노동시장과 가족의 이주 압력 - 가정 외의 또 다른 삶의 형태 - 세대 갈등 - 가정의 권위주의적 구조 - 가정 교육의 변화 	<p>9/10학년 작업론 교과의 “가사의 결정과정”</p>
<p>“내가 더 이상 알지 못했다면”... .</p> <p>일상생활에서의 중독과 마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과 의존성의 성립 - 마약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 - 마약 범죄 - 상담과 치료 	
<p>“통일 독일에서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균등인가?”</p> <p>사회구조의 변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독의 구조변혁 - 사회적 불평등의 형태와 원인(계층 또는 계급 형성 - 수입, 재산, 지위, 권력, 교육 등) - 동서독의 차이 - 소수민족, 낮은 사람들의 사회통합 - 기회균등과 사회정의 실현으로서의 사회정책 	<p>9/10학년 역사 교과 “구 동독과 구 서독”</p>
<p>“인권으로서의 거주”</p> <p>거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시장경제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존적 필요로서의 거주 및 거주권 - 세입자 권리 -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학습 영역: 경제		
<p>중점 내용: 시장과 계획의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모델과 현실 - 경제적 변혁의 문제 -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성 - 시장의 원리와 국가적 조정의 관계 - 경제와 소비 흐름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희망인가 체념인가?” 선진사회의 생태적 구조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환경적 측면의 유산 - 시장경제의 생태적인 구조 조정 - 기술과 생산의 발전 - 문제점: 일자리 보장, 생태적 균형, 자원 고갈 	9/10학년 역사 교과의 “동독과 서독”
<p>“경제, 통화, 사회통합?”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경제적 변혁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출발의 정치 경제적 조건 -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붕괴 -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 - 사회적 영향 - 신탁청의 과제와 한계(퇴출, 사유화, 토지문제) 	9/10학년 역사 교과 “통일 조국으로서의 독일”
<p>“사회적 시장경제는 얼마나 사회적인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질서로서의 시장 경제 - 시장 모델과 시장 현실 - 사회적 시장경제 - 이론과 현실 - 국가의 경제적 과제(예, 구조, 노동시장, 재정 및 환경 정책) 	10학년 지리 교과의 “유럽 내에서의 독일”
<p>“상품으로서의 노동” 노동 시장 형성에서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란덴부르크 주의 노동시장 현황 - 인권으로서의 노동 - 대량실업과 실존 불안 - 실직자의 사회적이고 심리적 상황 	
<p>“작업장의 평화인가 아니면 파업인가?” 작업세계에서의 이해관계 표출과 갈등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에서의 조직화된 이해 표출 - 집단 이해와 전체 사회의 필요성 - 실직자들의 이해 대변 - 작업장 갈등과 갈등해소 가능성 - 임금협상 및 파업 	9/10학년 작업론 교과의 “임금협상”
<p>“결핍에서 과잉으로 - 환경은 또 다시 주변으로 밀리는가?” 생태적 성장 - 소비 습관 - 생태적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 - 경제적 사치인가? - 경제 성장의 장점과 단점 - 환경과 과잉 - 에너지 정책과 생태적 대안 - 전세계적 환경 문제와 생태적 책임 	

학습 영역: 민주주의		
<p>중점 내용: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의 정치결정 과정과 참여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갈등과 해결 가능성 -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자유 선거 - 시민운동을 통한 대표 민주주의의 확대 - 폭력의 도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대응 - 민주주의, 지배 그리고 대중매체의 관계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 학교생활의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개방과 사회의 기대 - 학습과 생활장소로서의 학교 - 브란덴부르크 주의 학교개혁법 	<p>9/10 학년 역사 교과서의 “바이마르 공화국”과 “구 동독과 구 서독”</p>
<p>“자유 선거 - 유권자들은 어떤 선거를 하나?” 독일 연방공화국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정치 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구조에서의 선거의 기능 - 사회의 민주적 문화의 표현으로서의 선거 - 정당과 시민운동의 입장과 프로그램과 구조 - 선거와 기초민주주의 의지 형성 - 선거 체계, 선거권, 선거 비용 	
<p>“극단주의와 폭력” 극단주의와 테러주의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주의와 테러주의의 형성과 원인 - 낮은 사람들과 외국인 적대감 - 나찌즘 전통과 신나찌주의 - 구 동독에서의 극우주의와 폭력 - 극단주의와 테러주의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위협 	
<p>“시민을 위한 시민” 통일 전후 시민 운동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운동의 “비폭력 권력”과 중앙집권 구조 극복 - 정당을 초월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담지자로서의 시민운동 - 제도에 대항하는 집단 이해 	
<p>“정보인가, 조작인가?” 대중매체의 영향과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기능 - 구 동독의 언론검열 - 정보와 의견 형성 - 상품으로서의 정보? - 청소년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p>“독재와 민주주의” 국가적 권력구조의 형태와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독재적 정부 - 독재의 제국주의적 경향 - 나찌 정부(정치, 경제, 이념, 사회적 요인) - 동유럽과 구 동독에서의 스탈린주의 - 구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학습 영역: 하나의 세계		
<p>중점 내용: 변혁, 갈등과 국제관계의 새로운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 새로운 평화와 안전 구상, 군비 증강의 원인 - 유럽통합 과정의 문제점과 전망 - 세계 경제 협력의 가능성과 난점 - 세계적 도전으로서의 남북 갈등 		
주제 사례	내용과 문제	참고
<p>“평화로의 새로운 길” 안전보장 정책, 평화보장과 국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새로운 안전 구상 - 군비 감시와 군축 - 평화 보장의 형태와 문제점 - 국제연합의 책임 - 평화적 갈등 해결 형태 	<p>9/10학년 역사 교과서의 “화약고 유럽”과 “세계 평화와 갈등”</p>
<p>“국경이 없는 유럽?” 유럽 통합 과정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유럽 통합의 문제점 - 통합 촉진 요인과 통합 저해 요인 - 유럽 통합 노력의 사례와 저항 	<p>9/10학년 지리 교과서의 “유럽 내에서의 독일”과 역사 교과서의 “1945년 이후 세계”</p>
<p>“국가적 이기주의인가, 국제적 협력인가?” 전세계적 상호협력의 가능성과 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 변혁과 새로운 의존 관계 - 국제협력에 있어서 개별 국가 주권의 상대화 - 국제 연합, 국제무역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의 책임 	
<p>“발전 원조 - 종속의 심화인가 자립을 위한 원조인가?” 부국과 빈국 사이 문제의 상호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필요성으로서의 저개발 국가 원조 (저개발의 원인과 영향) - 제 3세계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 - 개발정책의 기본 구상(자본원조, 기술이전) - 부채문제 - 경제개발 원조에 대한 편견과 입장 - 자립을 위한 원조 	

3) 11학년

학습영역: 사회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학문
1. “상이한 사회제도에서의 탄생” - 동독과 서독에서의 사회화	- 상이한 제도 내에서의 사회화 - 사회화 이론(특히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사회학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비판 - 사회주의 이론, 통일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와 위험성 등	정치학
	- 제도의 경제적 전제 - 구 동독의 구조변혁	경제학
2. “외국인 적대감 - 극우주의만의 위협인가?” - 외국인적대감과 극우주의	- 극우주의의 현황 - 극우성향 파악을 위한 경험적 연구 방법 - 집단구조(특히, 권위 지향성) - 집단화 과정(편견, 공격성)	사회학
	- 정치적 스펙트럼에서의 극우주의 - 극우주의와의 싸움 - 이민과 이주정책 - 망명자 비호권, 기본법 개정	정치학
	- 직업시장 - 실직 - 독일 내 외국인이 없다면 경제가 붕괴할 것인가? - 극우주의와 경제 위기 상황	경제학
3.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가?” - 청소년 범죄: 현상과 원인과 결과	- 청소년 범죄 형태 - 경험적 데이터 - 사회학적이고 심리분석적인 설명 작업	사회학
	- 사회(보장)정책과 가정정책 - 형법 - 형 집행	정치학
	- 재사회화 - 일자리	경제학
기타 유사 주제들		

학습영역: 경제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 학문
1. “손님이 왕인가?” - 청소년과 소비행태	- 광고를 통한 조작 - 광고기술 분석 -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행태	사회학
	- 광고 제한? - 소비자 보호 - 경쟁 정책 - 소비자의 영향력과 생산과정에서의 이해 관찰	정치학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광고의 기능: 정보, 경쟁과 시장 투명성 촉진, 욕구 자극 - 광고 비용 - 상품 구매 결정에서의 경쟁의 의미	경제학
2.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가?” -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일	- 일과 자아 실현 - 일의 개념 - 일로부터의 소외 - 일의 분배에 관한 포스트모던 이론	사회학
	- 정당과 시민운동 차원에서 본 실직 - 브란덴부르크 주의 직업시장 상황	정치학
	- 자동화, 산업 합리화, 그리고 그 결과 - 시장 경제의 사회적 영향	경제학
3. “브란덴부르크 - 연금 수혜자들의 나라?” - 산업화와 구조변화	- 직업청 - 직업구조, 일자리 제공, 재교육 과정 - 사회청 - 사회적 퇴출의 원인과 현상	사회학
	- 지역산업과 그 변화 - 전망과 문제점	정치학
	- 산업체: 고용인, 자질, 연령, 전망, 시간노동자 - 지역 고용 시장 - 정부 보조	경제학
기타 유사 주제들		

학습 영역: 민주주의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 학문
1. “대중매체 - 제 4의 권력?” 정치적 의지 형성에서 대중매체의 기능, 조직, 영향	- 오락으로서의 정보 - 대중매체의 기능 - 대중매체의 조직 - 대중매체 비교(신문, 라디오, TV) - 새로운 대중매체 - 대중매체의 영향과 개인적 의견 형성	사회학
	- 대중매체 정책 - 국가권력과 대중매체 권력 - 구 동독의 언론검열과 기본법 5조	정치학
	- 상품으로서의 정보 - 대중매체 경쟁 - 경제요소로서의 광고 - 언론의 집중	경제학
2. “우리는 국민이다!” - 민주주의 모델 비교	- 민주주의 모델의 기초로서의 인간상 -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 - 시민운동은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사회학
	- 민주주의 모델(구 동독의 인민민주주의, 구 서독의 의회민주주의 모델, 스위스의 호선제 모델) - 과거사 정리 - 직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역사 - 브란덴부르크 헌법 - 민주주의 발전의 한 사례?	정치학
	- 민주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
3. “ 자동차 없는 미래?” - 미래의 공장 - 비판하고, 꿈꾸고, 결정하고	- 환경 파괴(독, 공해, 소음, 사고) - 도시건설과 생활 조건 - 이동 행태 - 교통 심리 상태(공격성, 사회적 위신)와 그 변화	사회학
	- 교통정책 - 도시설계 - 대안적 시나리오(철도/도로, 인간/화물)	정치학
	- 자동차 비용 - 경제요소로서의 자동차 - 교통 보조금 - 자동차 산업의 전환 - 생산방법의 혁명	경제학
기타 유사 주제들		

학습영역: 하나의 세계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학문
1.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는가?” - 진보의 변증법	- 소비, 광고, 포장과 소비자들의 의식 - 로마 클럽의 경고	사회학
	- 국제 조약, 세계은행, 국제 무역기구 - 목적과 결과 - 세계경제정책 - 세계내무정책	정치학
	- 세계시장의 작용 방법 - 다국적 기업	경제학
2. “오존 구멍과 온실효과의 확대는 한계를 모른다.” -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세계적 기후 재난(원인과 결과) - “위험사회”에서의 발전	사회학
	- 환경단체 - 환경정책(원칙, 사고, 전략)	정치학
	- 환경 파괴와 경제적 원인 - 성장의 한계	경제학
3. “신과 세계” -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로서의 종교	- 종교사회학: 세계 종교, 신앙 단체 - 교회: 조직구조, 가치체계, 이데올로기	사회학
	- 종교의 이름으로의 전쟁? - 국가주의와 종교 갈등 - 근본주의	정치학
	- 제도로서의 교회 - 교회세금	경제학
기타 유사 주제들		

4) 12학년

학습영역: 사회		
주제 사례	교육내용/ 문제	
1. “너희들은 위에 있고 - 우리들은 아래에 있다?” - 독일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u>사회학</u> - 사회구조, 사회계층 - 계층이론적, 계급이론적, 생활형태론적 설명	
	<u>경제학</u> - 사회 과정에서의 시장 기능 - 분배와 관련한 경영자층연 합회와 노조간의 투쟁	<u>정치학</u> - 사회정책 - 정치적 관련성 - 새로운 형태의 빈곤
2. “조직된 학교 - 조직된 사회? - 누구에게나 기회는 돌아가는가?” 교육제도와 기회균등	<u>사회학</u> - 기회균등과 사회 계층 - 계층구조 또는 계급구조 형성 - 개인에게 교육이 주는 의미 -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 - 교육 기회의 팽창 - 학교와 사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	
	<u>경제학</u> - 교육제도에 대한 경제의 요구 - 교육을 위한 경제적 전제	<u>정치학</u> - 교육법 - 정당과 시민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 교육 독점
3. “소르벤족 - 국가 내 소수민족” - 소수 민족의 존립 문제	<u>사회학</u> - 마을공동체와 전통 - 이해대변 - 언어적 소외 문제 -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토착화	
	<u>경제학</u> - 경제 발전 - 노동력 이주	<u>정치학</u> - 역사적 고찰: 뿌리, 인종법, 파시즘 - 1945년 이후 슬라브 국가로 의 귀속 - 독일의 소르벤족 지원 조건
기타 유사 주제들		

학습영역: 경제		
주제 사례	교육내용/ 문제	
1.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하는가?” - 독일의 경제정책	<u>경제학</u> - 경제정책의 목적과 실제 발전과정 - 경제 이론(전통적 자유주의, 케인즈 이론, 수요지향적 경기정책과 신전통적 경제정책) - 국가 부채	
	<table border="1"> <tr> <td> <u>사회학</u> - 경제정책의 사회적 영향 - 실업과 분배 문제 </td> <td> <u>정치학</u> - 경제정책의 담지자와 도구, 그리고 경기정책 - 통화정책과 사회정책 </td> </tr> </table>	<u>사회학</u> - 경제정책의 사회적 영향 - 실업과 분배 문제
<u>사회학</u> - 경제정책의 사회적 영향 - 실업과 분배 문제	<u>정치학</u> - 경제정책의 담지자와 도구, 그리고 경기정책 - 통화정책과 사회정책	
2. “생태적인 생산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생산!” - 선진산업사회의 생태적인 구조변화	<u>경제학</u> - 시장경제의 생태적인 구조 변화 - 경제와 생태와의 관계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브란덴부르크 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적 균형의 파괴 - 기술과 생산의 발전 - 일자리 보장과 그 대가	
	<table border="1"> <tr> <td> <u>사회학</u> - 소비자의 습관 - 삶의 질 문제 - 일자리 보장과 생태학 </td> <td> <u>정치학</u> - 환경정책 - 브란덴부르크 주의 자연보호 법 - 투자의 장애요인? </td> </tr> </table>	<u>사회학</u> - 소비자의 습관 - 삶의 질 문제 - 일자리 보장과 생태학
<u>사회학</u> - 소비자의 습관 - 삶의 질 문제 - 일자리 보장과 생태학	<u>정치학</u> - 환경정책 - 브란덴부르크 주의 자연보호 법 - 투자의 장애요인?	
3. “만약 석탄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석탄과 다른 에너지원	<u>경제학</u> - 구 동독에서 경제와 생태의 관계 - 통일 이후 독일: 유산, 정화, 신축, 2차 산업구조 - 여러 가지의 에너지원	
	<table border="1"> <tr> <td> <u>사회학</u> - 환경파괴의 영향 - 인간과 인간의 관계 - 인간과 자연의 관계 </td> <td> <u>정치학</u> - 구 동독: 에너지 행정, 토지 정책, 노동력 상황 - 통일 후 독일: 독일 시장에서 에너지 제공자, 국가기업의 사유화 </td> </tr> </table>	<u>사회학</u> - 환경파괴의 영향 - 인간과 인간의 관계 - 인간과 자연의 관계
<u>사회학</u> - 환경파괴의 영향 - 인간과 인간의 관계 - 인간과 자연의 관계	<u>정치학</u> - 구 동독: 에너지 행정, 토지 정책, 노동력 상황 - 통일 후 독일: 독일 시장에서 에너지 제공자, 국가기업의 사유화	
기타 유사 주제들		

학습영역: 민주주의		
주제 사례	교육내용/ 문제	
1. “시민운동 - 새로운 정치문화?” - 정치 참여 - 정당, 시민운동, 사회단체	<u>정치학</u> - 민주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신단체주의 - 정당 구조 - 정치과정으로서의 국회 - 입법과정	
	<u>사회학</u> - 사회학 이론 - 이해집단 - 기능과 영향	<u>경제학</u> - 경제정책 - 경제적 이해집단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서예의 영향 - 정당 후원금
2. “원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학교법, 지방법, 기본법	<u>정치학</u> - 가설이 실제 정치에 주는 의미 - 헌법 이념과 현실 - 민주적인 문화 - 선거와 권력 분점	
	<u>사회학</u> - 민주사회에서의 이해갈등과 논쟁 가능성 -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	<u>경제학</u> - 헌법에 기초한 경제 -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경제관리
3. “배상 이전에 반환?” - 통일 조약과 그 영향	<u>정치학</u> - 소유주들의 이해관계 - 토지의 사회적 권리 - 사회적인 해결 방책 - 정당의 입장	
	<u>사회학</u> - 역동적인 사회에서의 집 - 거주자의 사회적 의미	<u>경제학</u> - 임대와 임차 - 적절한 배상인가?
기타 유사 주제들		

학습영역: 하나의 세계		
주 제	수업 내용/ 문제	관련 학문
1. “유럽이란 집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 동서 대결의 종료와 국가주의 추세의 증가	- 집단 동일성 - 국제화와 지역화의 관계 - 전통의 영향	사회학
	-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 통합 문제 - 난민정책 - 유럽제도와 그것의 유럽평화예의 기여 - 이민 움직임 - 복지정책 - 브란덴부르크 주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와의 관계 - 국제화 추세에 대립하는 국가주의화	정치학
	- 동유럽 해체 이후의 경제 문제 - 유럽의 구조 정책 - 유럽의 통화 체계	경제학
2. 제 3세계 - 발전과 저개발	- 남과 북: 대결 아니면 협력? - 식민주의에서 영역자유주의에로 - 저개발: 이론과 논쟁	사회학
	- 개발정책 - 국제연합(UN)	정치학
	- 부채 위기 - 다국적 기업 - 세계 경제 질서	경제학
3. “첨단 기술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 생활수준, 필요, 가치관	사회학
	- 법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정치학
	- 외국에서 유입되는 값싼 원자재 - 세계의 채무자 - 제 3세계의 산업화	경제학
기타 유사 주제들		

5) 13학년

<p>주제 영역: 사회</p> <p>중점 내용: 사회구조의 역사적 변화, 사회화 형태와 생활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발전 -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 계급사회에서 중산층 사회어로 - 20세기에서 소수민족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 사회화 형태의 변화: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주의로부터 현대의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에로의 변화(예, 가족구조의 변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 변화, 청소년기의 탄생과 변화과정, 노동자 문화의 종말 등)
--

주제영역: 사회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1. 사회주의 국가 - 생활보호에서 보험사회로의 변화?</p> <p>가난한 자와 실직자의 생활보호에서 실직보험으로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 과정에서의 빈곤: 질병, 사고, 실직 - 초기 사회보장: 노조, 조합, 사용자 사회보장제도 - 비스마르크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개념과 기능 - 생활보호에서 보험으로: 제 1차 세계 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생활 보호와 생활보호법 - “노동정책” - 국가의 역할: 노동시장의 형성, 일자리 중개, 실직자 재교육 - 나찌 시대: 보험에서 생활보호로 - 보험 원칙의 재구성: 바이마르 법복권, 노동촉진법(1969), 80년대 사회보장 정책의 후퇴 -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독 후 다양한 실직자 보조 형태를 서두에서 문제로 제기한다. - 사회정책의 이해와 정치경제적 기능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한다(예, 1969년 직업촉진법). - 실업보험의 관철과 발전을 사례로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구조와, 기능 방법, 그리고 문제점을 소개한다. - 1945년 이후에는 구 동독의 사회주의 정책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주제영역: 사회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2. 우등 인간과 열등 인간</p> <p>나찌 시대의 인종 정책과 소수 민족의 괴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제 시대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인종에 대한 생각들 - 법적 인종 차별 - 강제수용소 제도, 강제 노역,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실험 등 - 유대인 박해와 대량 학살 - 정신병자, 사회 부적응자, 알코올 중독자, 기타 유전병자 - 강제수용과 집단학살 - 폴란드와 소련의 강제징용자와 전쟁 포로 박해와 괴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찌 정권의 핵심정책으로서의 인종정책과 괴멸정책을 사례를 들며 포괄적이고도 역사적인 관련성 속에서 다룬다. 19세기 반유대적 인종차별 문헌들이 인종차별정책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 나찌의 인종괴멸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 나찌 시대를 회고하는 자서전적인 작품들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상기하고 반성하는 것의 의미와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한다.

주제영역: 사회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3.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든다.”</p> <p>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여성 노동자의 일과와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 바이마르 시대의 결혼 시장 - 가정정책과 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 - 가정의 이상: 소가족 - 가정의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노동: 임금차별, 전형적인 여성 직업 ◦ 거주 상황: 도시 노동자의 거주지와 그것의 영향 ◦ 직장여성의 가사노동 ◦ 가족 계획, 육아문제 - 여성 노동자의 자기 이해와 성적 역할 이해 - 프롤레타리아 여성 운동과, 부르조아 여성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동자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을 문제로 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정의 역사에 대한 친편일률적인 생각(옛날의 대가족은 좋고, 오늘의 소가족은 나쁘다는 생각)을 비판하게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갖도록 한다. - 이 테마를 통해 구술사 연구나 자서전 연구 등 사회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토론하고,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다. - 오랜 시간에 걸친 가족 구조와 표준화된 성 역할의 변화가 논의될 수 있다. 구 동서독 여성의 입장 차이(가사노동과 직장생활)와 그 원인이 한 단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제 영역: 경제

중점 내용: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도전

- 점증하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노동 분화와 전문화
- 자본의 집중과 국제화
- 경기사이클, 원인과 위기관리
- 새로운 기술공학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미래
- 물질적 수확의 분배
- 노동자 참여의 발전
- 조직화된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힘이 정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인 경제 관계: 무역 용어, 경제 조약,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

주제영역: 경제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1. “최악의 금요일” -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1929-1932</p> <p>20세기 경제 정책과 경제 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 과잉생산 위기로서의 세계경제 위기 - “최악의 금요일”: 주가 폭락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과, 국제 자본 흐름에의 영향 - 케인즈 이론에 대항하는 브뤼닝의 긴축정책 - 미국의 해결책: “뉴딜” - 마르크스주의적 위기 이론 - 경기와 순환적 위기 - 실업, 사회심리적 영향과 정치적인 과격화 - 파시즘적 대중 운동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세계 경제 위기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의 위기 - 권위주의적 정책 방안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제안: 위기는 파멸로 이끄는 힘인가 아니면 현대화의 동력인가? - 도전적 발언: 자본주의의 위기 - 우리의 운명인가? - 1929-1932의 세계 경제 위기를 주제로 그뤼닝의 경제 대책에 대해 상이한 관점에서 토론한다. 더불어 오늘의 위기를 이와 관련시킨다.

주제영역: 경제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2. 기술을 통한 진보</p> <p>20세기 경제 발전과 과학, 그리고 노동단체들의 상호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요소로서의 기술과 과학 - 컨베이어 벨트 생산체제에서 자동화를 거쳐 사람이 필요없는 공장예로? 테일러리즘, 포디즘, 산업생산의 합리화 - 제 1, 2, 3차 산업혁명과 1차, 2차, 3차 산업분야의 상호 관계의 변화 - 자유주의와 국가 간섭주의 사이에서의 연구정책과 기술 혁신의 촉진 - 문화 비판과 기술예찬 사이에서의 기술에 대한 입장 변화 - 성장의 한계 - 기술공학적 현대화의 한계인가? - 비용 요인으로서의 자연보호 - 미래 산업으로서의 환경 공학 - 기술공학 정책: 기술공학의 영향과 노동의 인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의 경제 구조 변화를 개별 산업분야(예, 인쇄산업)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 만약 생산기업 또는 산업박물관에서 기술 변화의 적절한 사례를 구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직접 사례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유전공학, 원자 산업 또는 무기산업분야에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이용들을 사례로 설명한다.

주제영역: 경제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3. “경제가 국가를 만든다”</p> <p>개인 경제행위와 국가 경제행위와의 밀접한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세계대전: 전함건축, 독일과 러시아의 무역전쟁, 제 1차 세계대전의 비용 부담 -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23년의 과잉 인플레이션, 황금의 20년대 (1924-1928), 세계경제위기 (1928-1932) - 나찌 시대: 나찌 정당의 재정 지원, 강제점령 및 징용과 독일 경제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운동, 전쟁범죄자에서 경제주역으로, 마샬플랜, 1966/67의 경제후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의 복잡성과 다측면성으로 인해 내용의 선택과 중점사항 결정이 필요하다. 시작할 때는 따라서 시사적인 사례가 적당하고, 방법도 사례연구가 적당하다. 예를 들어, Krupp 회사의 역사 또는 Thyssen회사와 히틀러와의 관계 등. -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발언을 토론의 시작으로 삼아도 된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이다.”(1932년 히틀러)

주제 영역: 민주주의

중점 내용: 20세기 정치 체제와 정치 모델의 발전

- 권위주의적 지배형태와 민주적인 지배형태: 파시즘, 스탈린주의, 민주적인 중앙집권주의, 의회 민주주의, 기초 민주주의 모델
-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갈등과 위기
-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저항, 반대세력, 민주적인 문화
- 황제시대에서 현재까지의 민주적인 권리와 참여의 발전과정

주제영역: 민주주의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1. “사회주의 = 파시즘”</p> <p>파시즘과 사회주의 이념과 국가의 상호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등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 비교 - 파시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과정 비교(독일, 이태리, 소련 등) - 파시즘 이론, 스탈린주의 이론, 전체주의 이론 - 정치적 논쟁에서 정치 이론의 역할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이념과 파시즘을 비교할 때, OHP 자료를 준비해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적 테러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소련 강제 수용소에 대한 자서전, 강제수용소 기념관 방문, 테러 전시관 방문 등). - 히틀러와 스탈린을 비교하면서 파시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각 개인의 역할에 대해 연구, 토론한다.

주제영역: 민주주의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2. 역사로부터 성공적으로 배웠는가 바이마르 공화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주변 환경의 차이: 배제와 통합(베르사이유 조약과 독일 연방 정부의 서방 편입) - 민주주의 기초에 대한 사회 내적 의견 일치 - 헌법제정의 내용과 과정 -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긴장과 연관성 - 공화국 헌법에 대한 의견일치의 가능성과 저항 - 기본법 결정의 기초로서의 바이마르가 주는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인 정치체제에로의 구조 결정: 선거권, 대통령의 위치, 불신임, 정당의 역할, 긴급조치, 기본권 등. - 대중매체 분석: 공공성과 극단주의, 극우주의와 극좌주의 등 국민들의 상이한 정치적 경향성 - 도전적인 질문: 우리도 독재의 위협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막기 위한 안전핀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미래 계획: 새로운 시대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

주제영역: 민주주의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3. 두 개의 국가 - 하나의 국민! 1945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경과, 연합군의 독일 분단 계획과 실현 - 서독: 사회적 시장경제, 서방지향성, 긴장완화 정책과 통일 정책 - 동독: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국민개념의 변화, 배제 정책과 승인 정책 - 감시 국가에 대항하는 개방 국가: 독일의 땅에서 정치 체제의 경쟁, 이념 갈등과 사회체제의 경쟁 - 동서독의 정치 문화 단계 - 국가 통합(1989/90)의 완성: 국제적 조건, 국내적 노력, 통일 휴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상호입장과 기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로부터 상호이해의 어려움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식적 측면을 다룰 수 있다. - 구 동서독의 체제를 비교하는 측면으로는 물질적 생활, 인권 침해, 사회보장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통일 독일의 미래에 관련된 물음은 동서독 학생들의 직접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루어질 수 있다.

주제 영역: 하나의 세계

중점 내용: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관계와 국제 문제

- 제 1,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
- 강대국의 탄생과 동서 양대 세력의 형성
- 대결에서 “평화적인 병존”으로
- 양극화된 세계 질서의 해체
-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 기본 생활조건들에 대한 전세계적 파괴의 증가
- 시사적인 문제영역: 예) 새로 탄생한 세계경찰, “강대국” 독일, 이민 운동, 국제적 정치억압, 위기관리와 평화보장

주제영역: 하나의 세계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p>1. “12시 5분 전!”</p> <p>쿠바 위기: 냉전의 정점인 동시에 전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 위기: 쿠바 혁명, 미국 정책, 트루먼 특트린, 제 3차 세계대전일보 직전, 위기관리 - 파멸로 이끄는 군비 경쟁 - 군축정책과 긴장완화 정책의 시작 - 쿠바의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 위기” 주제는 당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다. -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제시하며 수업을 시작하고, 점차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된 주요 문서를 연구한다.

주제영역: 하나의 세계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2. “유럽에로의 복귀” 동유럽의 역사와 후기 사회주의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혁명과 소련의 지배구조 형성 - 사회주의 건설 - 제 2차 세계대전과 그 결과 - 소련의 지배에 대한 저항 - 독립 투쟁 - 고르바초프와 새로운 시작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의 문제점, 마피아 구조, 지하경제 등 - 새로운 나찌즘, 인종적 긴장, 해외 이주 - 유럽 통합 과정에서 동유럽 미래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질문: 동유럽 시민운동 또는 인권단체와 결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 정치적인 관련성 외에도 20세기 유럽 문화의 발전에 미친 동유럽 국가들의 문화(문학작품, 국민예술, 미술, 음악)를 소개한다. - 역사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는 동서독 사이의 또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상호 기대와 입장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물이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이 주제와 관련해 부란덴부르크주에서는 폴란드 역사와 독일-폴란드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주제영역: 하나의 세계		
주제	내용과 문제	참고
3. 아프리카 세계사적인 관련성 속에서의 아프리카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주의 이전의 생활의 형태: 가족, 종족, 자연종교, 자급자족 경제 - 이슬람화, 식민지화와 아틀랜타 삼각 무역 - 독립운동, 탈식민지화, 전세계적인 신 종속관계 - 아프리카에서의 동서 갈등 - 서방지향적 현대화와 독자적인 전통의식 사이에서의 아프리카 문화 - 제국주의 이론과 대안적 발전 이론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문학작품, 영화 등에서 확인되는 유럽인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단원을 시작한다. - 아프리카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한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 또는 국가의 역사와 구조를 다룬다. - 남북 문제의 핵심 사항을 사례를 들어 구체화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근 - 무기로서의 빵? ◦ 풍부한 자원과 과도한 부채 -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구축의 문제점

《부 록 5》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 전문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규정이 제정되었다. 2001년 1월 24일 개정된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²⁾

§1

- (1)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법률상의 기능을 가지지 않은 연방기관으로서 연방 내무성 산하에 둔다.
- (2)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Bonn)에 본부를 둔다.

§2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독일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 (1)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부장에 의해 관리된다.
- (2) 본부장은 연방내무성 장관이 임명한다. 연방 내무성 장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의 상사가 된다.

§4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은 법률상 연방정치교육본부를 대표한다.

102) “Erlaß über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

§5

- (1)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 관련 기본사항에 대하여 학술고문단의 지원을 받는다. 학술고문단은 최대 9명의 규모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술고문단은 연방 내무성 장관이 4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 (2) 학술고문회의는 1년에 적어도 2회 이상 개최된다.
- (3) 학술고문단은 위원 가운데 1인의 대표와 1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위 운영규정은 연방내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학술고문회의에는 연방정치교육본부 감독단원 또는 연방 내무성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 (5)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이 학술고문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연방 내무성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 (1)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정치적인 객관적 태도와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감독단에 의하여 통제된다.
- (2) 감독단의 위원들은 독일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제안에 기초하여 연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 (3)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은 감독단에게 매년의 예산안, 계획보고서, 활동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그것을 감독단에게 제출한다. 연방정치교육본부장은 본부의 모든 주요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적시에 감독단에게 설명한다.
- (4) 연방정치교육본부장과 연방 내무성 대표들은 감독단 회의에 참석한다.

§7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각 주정부의 관할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최고 지방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8

이 법은 200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6월 24일 제정된 연방정치교육본부 설치법은 폐기한다.

《부 록 6》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¹⁰³⁾」

본 규정은 성인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치교육 행사를 위하여 연방 정치교육본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1. 재정지원목적과 법적 근거

- 1.1.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본 규정 및 행정규정 §44조 그리고 연방 예산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성인 정치교육 행사(연수, 세미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1.2.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은 재정 지원을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예산에 반영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결정한다.

2. 재정지원 대상

- 2.1. 재정지원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치교육에 지원된다.
 - 민주적인 사회질서 및 국가질서를 이론과 실천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촉진하는 교육
 - 현재와 미래의 주요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문화적 주제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과정에 대한 교육
 - 나찌즘에 대한 비판적 논쟁 및 극좌주의나 극우주의처럼 반민주적인 흐름에 대한 정신사적이고 정치적인 논쟁

103) “Richtlinien zur Förderung von Veranstaltungen 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durch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

- 소수 인종이나 소수 그룹에 대한 편견 제거
- 국제 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식 매개
- 평화정착에 대한 의식 강화
- 유럽적 사고와 유럽인으로서의 의식 강화
- 구 동독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쟁

2.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 정치교육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3. 재정지원 수요자

3.1. 재정지원 수요자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승인한 성인 정치교육기관이다.

3.2. 재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설 정치교육기관은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승인 신청 정치교육기관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준수하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그리고 연방 기본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적어도 3개 주 이상의 지역을 포괄하여야 한다.

3.3.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해당 기관의 정관
- 해당 기관의 이사회 또는 임원 명단
- (경우에 따라서)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정치교육 사업에 대한 서술(특히 목표 그룹과 학습 목표 제시)
- 재정 구조에 대한 서술
- 해당 기관의 행사 내용(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행사에 연방정치교육본부 직원이 참관함)

3.4. 승인 신청 서류 심사 및 참관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4. 재정지원 조건

4.1.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행사는 성인 정치교육의 교수학적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4.2. 정치교육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4.3. 정치교육 참석자들은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4.4.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은

- 16세 이상의 정치교육 참석자
- 외국인 참석자
- 6세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참여할 때에는 부모와 동일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4.5.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연방직업교육촉진법에 의거하여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회사 임원
- 연수 또는 세미나 일정의 절반에 못 미치게 참여하는 참석자
- 1년에 3회 이상 정치교육에 참여하는 자
- 10명 미만 또는 8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 학급 단위로 개최되는 세미나

5. 재정지원의 종류와 범위

5.1. 재정지원의 종류 : 재정 지원은 해당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다.

5.2. 재정지원의 규모 : 최대 범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5.3. 재정지원 형태 : 환급하지 않는 수당으로 취급된다.

5.4. 재정지원 결정 기준

- 정치교육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숙박비와 식비
- 정치교육 행사 장소의 임대료
- 정치교육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여비
- 정치교육 주최자 및 강사의 강사료
- 정치교육 행사 준비, 조직 및 자료비

5.5. 재정지원의 범위

- 범주 1(정치교육 양성소가 없는 기관) : 참석자 1인당 1일 50DM 이내
- 범주 2(범주 1에 해당하지만 참석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 참석자 1인당 1일 55DM 이내
- 범주 3(정치교육 양성소를 소유한 기관) : 참석자 1인당 1일 65DM 이내

5.6. 시간 측정

- 재정지원의 범위는 개별 참석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결정한다. 참석자들의 출석 상황은 참석자들의 서명과 함께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제출한다.
- 행사 일정은 하루에 90분짜리 행사가 4개는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가 시작하는 날에는 오전에 시작하고 끝나는 날에는 점심 식사 이후 종료되어야 한다.
- 참석자가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예정액의 절반만 지원된다.

6. 신청 방법

6.1. 신청 방법

6.1.1. 1년 동안의 총액 지원 신청 및 총액 배정 통보

1년 동안의 총액 지원 신청은 새 회계년도 4주전까지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새해의 계획된 정치교육 프로그램
- 예상되는 지출금액
- 지원희망액수(근거 제시)

○신청 기관의 재정 상황 자료

신청 서류를 기초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예상되는 지원 총액을 결정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결정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6.1.2. 개별 사업 신청

개별 사업별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행사 3주전까지 서면으로 연방 정치교육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프로그램
- 장소(지역 및 건물명) 및 강사
- 예상되는 참석자 수
- 예상되는 지원액

6.2. 승인 절차

6.2.1.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신청 서류를 기초로 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결정한다

6.2.2.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예산 규정에 따라 예산 지원 결과를 통보한다.

6.2.3. 1년 동안의 총액 지원 사업일 경우 연초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별 사업일 경우에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6.3. 정산 절차

6.3.1. 정산은 원칙적으로 3개월에 1회씩 한다. 이 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3.2. 정산은 개별 사업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 록 7》

전독연구소 소장 통일 관련 영화

대주제	소주제	제목	제작연도	제작국	시간
독일문제	독일 역사	동독의 폐쇄정책	1974	서독	45분
		1945년의 독일	1971	서독	84분
		독일의 분단	1980	서독	45분
		독일의 대결	1980	서독	45분
		독일의 화해협력 노력	1980	서독	45분
		독일 분단에 대한 반성	1972	서독	45분
		독일 - 과거와 미래	1981	서독	45분
		승전 4개국과 독일	1975	서독	30분
		왜 동독은 장벽을 건설하였는가?	1981	서독	30분
		독일 국민	1979/80	서독	96분
		민족의 분단	1975	서독	31분
		역사 - 우연, 숙명, 법칙인가?	1983	동독	20분
		1953년 6월	1983	서독	90분
	독일과 유럽의 분단	유럽의 비극	1965	서독	40분
		도망과 추방	1981	서독	57분
		이주자들의 통합	1981	서독	56분
		동독에서의 추방자	1982	서독	25분
		동독으로의 여행	1971	서독	38분

대주제	소주제	제목	제작연도	제작국	시간
독일정책	동서독 관계	독일정책의 실천	1981	서독	40분
		Rostock 시에서의 주말	1976	서독	43분
		동서독 관계의 현재	1978	서독	40분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	1979	서독	34분
		서독수상의 동독 방문	1982	서독	12분
	베를린	베를린 장벽 20년	1981	서독	32분
		베를린의 생활	1981	서독	27분
		1945년의 베를린	1975	서독	37분
		Unter den Linden - 독일 거리의 운명	1977	서독	39분
		동베를린의 인상	1973	서독	32분
	국경지역	엘베	1974	서독	45분
		독일의 국경	1973	서독	30분
		독일과 유럽의 중심 - 국경	1983	서독	29분
		국경 지역에서의 삶	1984	서독	34분
		국경에서의 일요일	1980	서독	22분

대주제	소주제	제목	제작연도	제작국	시간
동독	개관 및 정치제도	폐허에서의 성장	1971	서독	30분
		서독의 이웃 - 25년간의 동독	1974	서독	47분
		독일공산당 - 60주년 기념	1979	동독	56분
		동독의 역사와 현재	1971	서독	47분
		M. Hübner - 동독의 국회의원	1979	서독	37분
		동독의 검사	1982	동독	10분
		동독 20년	1969	서독	46분
	역사관	시민 루터	1981	동독	45분
		제2차 세계대전	1975	동독	27분
		독일의 5세기	1979/80	동독	96분
		동독의 군대 박물관	1975	동독	29분
		동서대결	1981	동독	46분
	동독의 일상	Halle에서의 생활	1977	동독	29분
		나는 18세이고 동독에서 산다	1978	서독	45분
		독일 산업도시의 일상	1974	서독	47분
		너는 무엇이 될 것이냐?	1976	동독	27분
		위험한 친구관계	1982	동독	85분
		동독에서의 직업교육과 직업선택	1976	서독	47분
		동독의 학교	1979	서독	45분
		1973년 동독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제	1973	서독	42분
3명의 소녀		1976	동독	77분	
1년간의 시민생활		1981	동독	96분	
가족계획 - 어떻게?		1974	동독	30분	

대주제	소주제	제목	제작연도	제작국	시간
동독	동독의 일상	동독의 개신교	1983	서독	31분
		동독의 교회	1979	동독	45분
		마틴 루터	1983	서독	30분
		스파르타쿠스의 후손 - 동독의 스포츠	1978	서독	30분
		동독의 의사화 환자	1974	서독	44분
		동독의 문화	1978	서독	44분
		독일 - 과거와 미래	1981	서독	45분
		Erfurt 도시의 모습	1979	동독	29분
		Dresden과 주변지역	1976	서독	46분
		괴테 - 정치활동	1975	동독	30분
		라이프찌히의 시장	1979	동독	14분
		동독의 화가	1980	서독	30분
		Mohr교수 - 화가, 디자이너, 베를린시민	1976	동독	28분
		동독의 르네상스 건축물	1978	동독	28분
		동독의 연극	1974	서독	47분
		동독의 미술	1980	서독	14분
		동독의 군대교육	1978	동독	25분
		동독의 사회주의 군사교육	1983	서독	27분
		동서독 기술의 취약점	1973	서독	44분
		동독 과학자의 사생활	1981	동독	93분
	농업분야의 협동조합	1982	동독	8분	
	동독의 경제	1981	서독	30분	
	동독의 도시와 여행	드레스덴	1979	서독	28분
		포츠담으로의 산책	1978	서독	16분
		에어푸르트	1980	서독	7분
		라이프찌히	1980	서독	8분
		바이마르	1980	서독	8분
		할레와 테사우	1978	서독	45분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901-7044)

연구책임자 :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 양금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윤재흥(나사렛대학교 교수)

인쇄처 : 모아기획

인쇄일 : 2002. 12.

※ 이 보고서는 www.uniedu.go.kr(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도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